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17. 10.



문화체육관광부



韓國政策學會

본 보고서는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입장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

한승준 교수(서울여대 행정학)

공동연구

정상철 교수(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리학)

양혜원 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채경진 정책연구팀장(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10월
한국정책학회
회장 이 용 모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 목적	4
3. 연구 내용	4
4. 기대효과	5
제2장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7
1. 문화영향평가제도 추진현황	9
1)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의의와 목적	9
2)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추진과정	10
3) 2017 문화영향평가 추진현황	13
2.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성과	28
1)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본원적 정책목표 달성	28
2) 문화영향평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30
3)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체계화 및 개선	31
3.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32
1) 대상 및 선정방식	32
2) 평가지표 및 평가수행방식	34
3) 평가의 법적·제도적 기반	36
4) 평가추진체계 및 협력체계	37
제3장 타 영향평가제도 분석	39
1. 환경영향평가제도 분석	41

1) 목적 및 변천	41
2) 대상 및 수행방식	44
3) 평가지표	49
4) 추진체계	51
5) 관련 법	56
2.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분석	58
1) 목적 및 변천	58
2) 대상 및 수행방식	60
3) 평가지표	67
4) 추진체계	77
5) 성별영향분석평가 시사점	82
3. 고용영향평가제도 분석	84
1) 목적 및 변천	84
2) 대상 및 수행방식	84
3) 평가지표	88
4) 추진체계	91
4. 영향평가제도 비교 및 시사점	93
1) 환경영향평가 시사점	93
2) 성별영향분석평가 시사점	97
3) 고용영향평가 시사점	104
4) 시사점 종합	107
 제4장 문화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113
1. 조사설계	115
2. 전문가 인식도 조사결과	117
1) 문화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인식	117
2) 문화영향평가 발전방안의 우선순위 및 중요도 설정	123
3. 피평가기관 만족도 조사결과	127

제5장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131
1.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	133
1) 방향성 : 문화영향평가의 단계적 확산 및 실효성 확보	133
2.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	136
1) 문화영향평가 대상의 구체화와 법정화	136
2) 평가지표 및 수행방식 개선	148
3) 추진체계 정비	152
4) 문화영향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기반 정비	155
참고문헌	169
부록	173
[부록1] 문화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175
[부록2] 현재 문화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3단비교표	180
[부록3] 서울특별시 문화영향평가 관련 조례(안) :	183
[부록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시기	193
[부록5]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요청시기	203
[부록6]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219

표 목차

〈표 2-1〉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 대상과제(2014-2015)	11
〈표 2-2〉 2016 문화영향평가 대상과제	12
〈표 2-3〉 2017 문화영향평가(전문평가) 대상과제	14
〈표 2-4〉 문화영향평가의 유형 : 평가주체에 따른 분류	15
〈표 2-5〉 2017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17
〈표 2-6〉 2017 문화영향평가 표준분석·평가절차	18
〈표 2-7〉 문화영향지수의 도출(예시) : 심층평가(사전평가)	20
〈표 2-8〉 자체평가보고서의 주요내용	21
〈표 2-9〉 2016 문화영향평가 결과반영 및 개선계획	28
〈표 2-10〉 타 분야 영향평가와 문화영향평가 추진체계 비교(2017 기준)	38
〈표 3-1〉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비교	42
〈표 3-2〉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의 비교	46
〈표 3-3〉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49
〈표 3-4〉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50
〈표 3-5〉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51
〈표 3-6〉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대상과제 선정기준	61
〈표 3-7〉 평가 진행 단계별 수행 주체 및 파트너	86
〈표 3-8〉 2017년 고용영향평가 진행과제 목록	87
〈표 3-9〉 고용영향평가 내용 구성	88
〈표 3-10〉 양적 고용효과 측정의 범위	89
〈표 3-11〉 고용영향평가 세부 평가 및 권고 항목	90
〈표 3-12〉 평가사업별 대기질·악취 평가범위 가이드라인(대기질, 악취 사례)	94
〈표 3-13〉 환경영향평가항목 선정기준(스코핑)	94
〈표 3-14〉 환경영향평가 환경피해저감방안 사례	96
〈표 3-15〉 환경영향평가 평가결과 사례	96
〈표 3-16〉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정책개선 관련 규정	99
〈표 3-17〉 고용영향 자체평가 작성 양식	105
〈표 3-18〉 영향평가제도 비교	107

〈표 4-1〉 전문가 응답자 현황	115
〈표 4-2〉 피평가기관 응답자 현황	116
〈표 4-3〉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117
〈표 4-4〉 문화영향평가 필요성의 이유	117
〈표 4-5〉 문화영향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	118
〈표 4-6〉 향후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발전 방향	119
〈표 4-7〉 문화영향평가협의체 위상 정립 방안	119
〈표 4-8〉 문화영향평가의 인센티브 방안	120
〈표 4-9〉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지표에 대한 인식	120
〈표 4-10〉 각종 대상사업의 문화영향평가 의무화 필요성	121
〈표 4-11〉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와 컨설팅 간 중요도	122
〈표 4-12〉 문화영향평가의 최적 평가시점	122
〈표 4-13〉 문화영향평가의 개방형 의견	122
〈표 4-14〉 문화영향평가의 발전방안에 대한 AHP 구조	123
〈표 4-15〉 1차 수준의 분석 결과	124
〈표 4-16〉 문화영향평가 대상의 구체화	124
〈표 4-17〉 평가지표 및 수행방식 개선	125
〈표 4-18〉 추진체계 정비	125
〈표 4-19〉 법제도 기반 정비	125
〈표 4-20〉 종합 우선순위	126
〈표 4-21〉 문화영향평가의 만족도	127
〈표 4-22〉 문화영향평가의 활용도	128
〈표 4-23〉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128
〈표 4-24〉 문화영향평가 필요성의 이유	128
〈표 4-25〉 문화영향평가의 인센티브 방안	129
〈표 4-26〉 각종 대상사업의 문화영향평가 의무화 필요성	129
〈표 4-27〉 문화영향평가의 최적 평가시점	130
〈표 4-13〉 문화영향평가의 개방형 의견	130
〈표 5-1〉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단계적 확산 방향	133
〈표 5-2〉 지방재정법 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137
〈표 5-3〉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1999~2015년)	137
〈표 5-4〉 2016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138
〈표 5-5〉 「지방재정법」 상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대상사업	139
〈표 5-6〉 중앙투자심사대상 건수(2012~2016)	141

〈표 5-7〉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2014~2016)	142
〈표 5-8〉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2011~2017)	143
〈표 5-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유형별 지원금액	144
〈표 5-10〉 새뜰마을사업 추진현황(2015~2016)	144
〈표 5-11〉 2017 문화영향평가 유형 분류	149
〈표 5-12〉 향후 문화영향평가 유형 분류 변화	149

그림 목차


[그림 2-1] 문화영향평가의 의의와 목표	10
[그림 2-2] 문화영향평가(개별평가) 평가모형	16
[그림 2-3] 2017 문화영향평가 결과 요약 제시방법	21
[그림 2-4]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 평가절차	22
[그림 2-5]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평가절차	23
[그림 2-6]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 평가체계	24
[그림 2-7]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평가체계	26
[그림 2-8] 2016 문화영향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사례	29
[그림 3-1] 환경영향평가의 제도 변화	43
[그림 3-2] 환경영향평가의 연혁	44
[그림 3-3]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체계	52
[그림 3-4]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체계	52
[그림 3-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직도	53
[그림 3-6]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변화 추이	60
[그림 3-7]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법령) 샘플	62
[그림 3-7]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64
[그림 3-8]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계획) 샘플	65
[그림 3-9]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기준	66
[그림 3-10]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사업) 샘플	67
[그림 3-11]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평가 지표(법령)	69
[그림 3-12]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서(법령)	70
[그림 3-13]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평가 지표(계획)	71
[그림 3-14]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서(계획)	74
[그림 3-15]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평가 지표(사업)	75
[그림 3-16]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서(사업)	77
[그림 3-17]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체계	78
[그림 3-1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직도(2017년 10월 7일 기준)	81
[그림 3-19] 간접 고용효과의 측정 절차	89

[그림 3-20] 질적 고용효과의 평가 및 정책 권고의 도출 방법과 절차	90
[그림 3-21] 고용영향평가제도의 평가 체계	91
[그림 3-22]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추진 체계도	92
[그림 3-23] 공공정책을 변화시키는 성별영향분석평가 100가지 사례 표지	100
[그림 3-24]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주요 개선사례	103
[그림 5-1]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147
[그림 5-2] 문화영향평가 추진체계(안)	155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내용
 4. 기대효과
- 

1. 연구의 필요성

-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의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만 주목할 뿐, 해당 사업이 사회문화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은 보여주지 못함. 따라서 개발 사업을 비롯한 공공정책이 미치는 주민들의 삶의 변화나 문화적 가치의 훼손 가능성 등을 사전에 평가하여 개선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문화영향평가제도(Cultural Impact Assessment: CIA)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짐
- 2013년 문화기본법 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가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과 계획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문화영향평가제’를 도입함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문화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그간 경제성장 패러다임에 근거한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국민의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문화적 가치의 상실 또는 파괴에 대한 문제제기, 문화가 단순한 여가나 오락을 위한 부수적인 영역이 아니라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자, 국가와 지역공동체의 발전 및 정체성 형성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 제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발생하는 문화적 권리의 침해나 문화경관의 파괴, 공동체의 상실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고 문화적 가치를 적극 반영하는 ‘정책의 문화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필요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정책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부정적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고 문화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의 문화화’를 통해 문화 가치의 전 사회적 확산을 지원하고, 문화적 영향을 고려한 공공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통해 정책의 사회적 수용가능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문화역량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다른 나라의 문화영향평가제도가 자국의 원주민 문화를 보호하거나, 문화의 상업화로 부터 문화다양성을 지키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적용범위 또한 일부 지역에 불과한 반면, 한국의 문화영향평가제도는 공공정책 전반에 대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해외에서 동일한 선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음

-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총선 공약으로 문화영향평가의 확대'를 제시하였고, 서울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지자체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 새로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또한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확대와 실효성 제고를 국정과제로 제시함
 - 대만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문화기본법을 제정하고, 문화영향평가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국내외적으로 문화영향평가제도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향후 문화영향평가가 '정책의 문화화'를 통해 문화기본권의 확립과 문화정체성의 보존과 계승, 그리고 문화발전을 적극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평가방법, 평가체계, 수행체계 등을 수정·보완하고, 문화영향평가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필요함

2. 연구 목적

- 이에 본 연구는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추진현황과 성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문화영향평가의 개선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 특히 문화영향평가가 애초의 정책목적과 같이 정책의 문화화를 통해 문화 가치의 확산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문화영향평가의 안정적·실효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탄탄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영향평가의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 방안에 특히 중점을 두어 기술하고자 함

3. 연구 내용


-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추진현황과 성과, 문제점의 분석
- 문화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타 영향평가제도의 추진현황과 제도적 특성의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문화영향평가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참여한 바 있는 전문가 및 피평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문화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도출

-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
 - 문화영향평가 대상 및 선정방식의 구체화 방안
 - 평가지표 및 수행방식의 개선방안
 - 추진체계 정비방안
 -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4. 기대효과

- 타 영향평가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문화영향평가제도가 가진 특성의 진단 및 향후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 제시
- 문화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해 문화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과 개선 우선순위의 도출
-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모색을 통해 향후 문화영향평가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 개선방안의 제시
-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확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



제2장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문화영향평가제도 추진현황
2.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성과
3.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1. 문화영향평가제도 추진현황

1)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의의와 목적¹⁾

-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긍정적 영향을 강화·확산시키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3년 12월 「문화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5조 제4항에 규정됨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러한 문화영향평가제도는 그간 경제성장 패러다임에 근거한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국민의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문화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파괴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대한 대응으로서, 또한 문화가 단순한 여가나 오락을 위한 부수적인 영역이 아니라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자, 국가·국민·지역공동체의 정체성 형성, 그리고 문화적 부가가치를 통해 더 큰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이라는 인식 제고에 힘입어 대두됨
- 즉 문화영향평가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적 권리의 침해나 문화경관의 파괴, 공동체의 상실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당 정책에 문화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의 문화화(문화로 옷 입히기)’를 통해 정책의 사회적 수용가능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문화역량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보고서.



[그림 2-1] 문화영향평가의 의의와 목표

2)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추진과정

- 문화영향평가제도는 2003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 문화 부문의 핵심 전략에 포함되면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구상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그간 다양한 정책·제도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은 이루어졌으나 문화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부재한데 이는 사회발전과의 관계에서 문화가 독자적 가치로 인정되기 보다는 종속적 혹은 사회변동의 결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에 기인함
- 이에 따라 2003년에는 「문화영향평가제도 연구(문화사회연구소, 2003)」, 「문화영향평가제도 해외사례조사 연구(김규원, 2003)」가, 2006년에는 「문화영향평가 지표개발 및 법제화 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06)」등을 통해 문화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모색이 진행됨
- 문화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된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임.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제시하였으며 2013년 12월에는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문화기본법」을

제정함

- 문화기본법은 ‘문화’의 개념을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넓게 파악하고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천명함
- 또한 동법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문화권)을 가짐을 선언하고, 제5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서 문화영향평가제도를 법제화함
- 문화기본법에 문화영향평가제도가 명문화됨에 따라 ‘문화영향평가제도’를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연구와 시범평가가 다시 진행되게 됨
- 2013년 ‘문화영향평가 실행을 위한 기초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에서는 문화영향평가의 핵심가치와 대상을 도출하고 추진방향과 실행방안을 제시하였으며, ‘2014 문화영향평가 실행에 관한 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14)’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4개 정책(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산업단지·폐 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도시재생사업, 행복주택)에 대한 시범평가를 실시함
- ‘2015년 문화영향평가 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16)’는 평가모형과 평가지표를 재정비하고, 시범평가의 대상을 중앙부처의 정책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까지 확대하여 총 5개의 정책(새뜰마을 사업(농림축산식품부),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중소기업청), 세운상과 활성화 종합계획(서울시),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서울시),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강원도))에 대한 시범평가를 수행함. 또한 상위평가인 종합평가를 통해 결과를 종합하고, 2016년 본평가를 위한 평가지침을 수립하기에 이룸

〈표 2-1〉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 대상과제(2014-2015)

2014년 시범평가	2015년 시범평가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문체부)	세운상과 활성화(재생) 종합계획(서울시)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문체부)	새뜰마을 사업(농림축산식품부)
도시재생 정책(국토교통부)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중소기업청)
행복주택 정책(국토교통부)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서울시)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강원도)

- 이러한 시범평가 기간을 통해 문화영향평가 평가대상과 유형, 평가절차, 평가체계, 평가지표체계와 방법론이 마련되었으며, 이들을 적용하여 2016년부터 본격적인 문화영향평가가 시행됨
- 2016년 3월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중앙정부·지자체, 전문가 및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제안된 정책 및 계획 중 14건이 선정되어 문화영향평가(전문평가)가 진행됨
 - 2016년에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3조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문화영향평가 협의체’가 구성되었으며,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개별평가기관에 의한 개별평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외부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합평가라는 중층적 구조를 통해 평가가 진행됨
 - 평가지표는 공통지표 6개(세부지표 12개)와 자율지표(특성화지표)로 구성되었으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제시한 표준분석·평가절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됨
 - 또한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 이후 소관기관으로 직접 찾아가 대면 컨설팅을 수행하는 ‘찾아가는 문화컨설팅’을 수행함

〈표 2-2〉 2016 문화영향평가 대상과제

대상과제	소관	비고
1)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제주시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2) 안동시 중구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경북 안동	
3) 광주 동구 도시재생사업	광주 동구	
4) 광주 서구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광주 서구	
5) 대구 남구 대명공연문화거리 활성화사업	대구 남구	
6)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7)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8)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경기도	
9) 소통과 혁신의 경기도 신청사 건립	경기도	
10) 인천시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	인천시	
11) 고양 삼송지구 대학생 연합 기숙사 건립 및 운영	교육부	
12) 경기청년 협업마을 조성·운영사업	경기도 시흥시	
13) 문화재 돌봄사업	문화재청	
14)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문화재청	
15)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	제주도	계획에 대한 평가

3) 2017 문화영향평가 추진현황²⁾

○ 2017년에는 본평가 2차년도를 맞아 다음과 같이 문화영향평가가 진행됨

(1) 평가 대상

○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정책’임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계획 또는 정책에 대해서는 문화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문화영향평가 대상 계획·정책의 선정기준, 문화영향평가의 방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한 협의를 거쳐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관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할 때 대상 계획·정책의 개요와 기대효과, 평가의 필요성 등을 포함한 평가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7년에도 2016년과 마찬가지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전문가 및 국민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수요조사(2017.2.28.-2017.3.14.)를 수행하고, ‘문화영향평가 대상선정 자문회의’를 통해 평가의 적합성, 수행가능성, 필요성을 판단하여 후보안을 선정한 뒤, 문화영향평가 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전문평가 대상과제 14건을 선정함

2)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 2017 문화영향평가 평가지침.

〈표 2-3〉 2017 문화영향평가(전문평가) 대상과제

	대상과제명	소관기관	유형	비고
1	대전광역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대전시	심층(사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2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제천시	심층(사전)	
3	옛길,맛길,물길 어우러진 소양 문화마을 만들기	춘천시	심층(사전)	
4	문화평야 김해 도시재생사업	김해시	심층(사전)	
5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아미조장도시재생프로젝트	부산시 서구	심층(사전)	
6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서울시 동대문구	심층(사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7	고도(古都) 이미지 찾기 사업	문화재청	심층(과정)	계획 평가
8	서울시 50+ 지원 종합계획	서울시	기본(과정)	
9	강릉문화관건립 및 문학공원 조성사업	강릉시	기본(사전)	문화특화지역조 성사업 (문화도시형)
10	원주시 창의문화도시 조성사업	원주시	기본(사전)	
11	남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문화도시형)	남원시	기본(과정)	국토부 도화사업
12	창원시 여좌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창원시 여좌동	기본(사전)	
13	소통과 화합의 경기도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사업	경기도	기본(사전)	
14	심곡북개천 생태복원사업	경기도 부천시	기본(과정)	

- 한편 2017년에는 제3자인 전문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전문평가’ 외에도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는 소관기관이 직접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자체평가’를 시범적으로 추진함
 - 2주간의 수요조사(2017.8.1.-2017.8.11.)를 통해 ‘광주비엔날레사업(소관기관 광주시)’을 자체평가 대상으로 선정함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해 교육 및 2차례에 걸친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자체평가 모델을 개발하고자 함

(2) 평가유형

- 2017년 문화영향평가 유형은 평가주체, 평가대상, 평가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

① 평가주체에 따른 분류

□ 전문평가

- 전문평가는 선정된 평가대상 과제에 대해 제3자인 전문평가기관이 수행하는 평가유형으로, 평가대상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기본평가’와 ‘심층평가’로 구분됨
- 한편 전문평가 절차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문 평가연구기관이 개별 평가대상에 대해 평가하는 ‘개별평가절차’와, 전체 개별평가 결과에 대한 상위평가에 해당하는 ‘종합평가절차’로 구성됨
-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평가

단'을 구성하여 개별평가기관과의 지속적인 통합워크숍 등 피드백을 진행하며, 종합 평가를 통해 개별평가 결과의 타당성과 정책적 제언의 구체성을 제고함

- 2017년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 종합평가단은 총 27인의 전문가로 구성됨

□ 자체평가 (시범평가)

- 자체평가는 정책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주체인 소관기관, 즉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직접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평가임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제시한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이를 검토 후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2017년에는 시범평가를 진행하고, 향후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표 2-4〉 문화영향평가의 유형 : 평가주체에 따른 분류

유형	내용
전문평가	제3자인 전문 평가연구기관이 수행 (개별평가 + 종합평가)
기본평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정책 및 계획 또는 전문적·구체적인 문화컨설팅이 보다 필요한 대상에 대해 전문평가기관이 평가 - 질적 분석(정성적 분석)에 집중
심층평가	대규모의 정책 및 계획 또는 국민에 미칠 문화적 영향이 큰 정책으로 엄밀한 분석·평가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 전문평가기관이 평가 - 질적 분석(정성적 분석) 및 양적 분석(정량적 분석) 병행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평가 수행

② 평가대상에 따른 분류

-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
- 계획에 대한 평가 : 법정계획이나, 기타 중장기계획 등에 대한 평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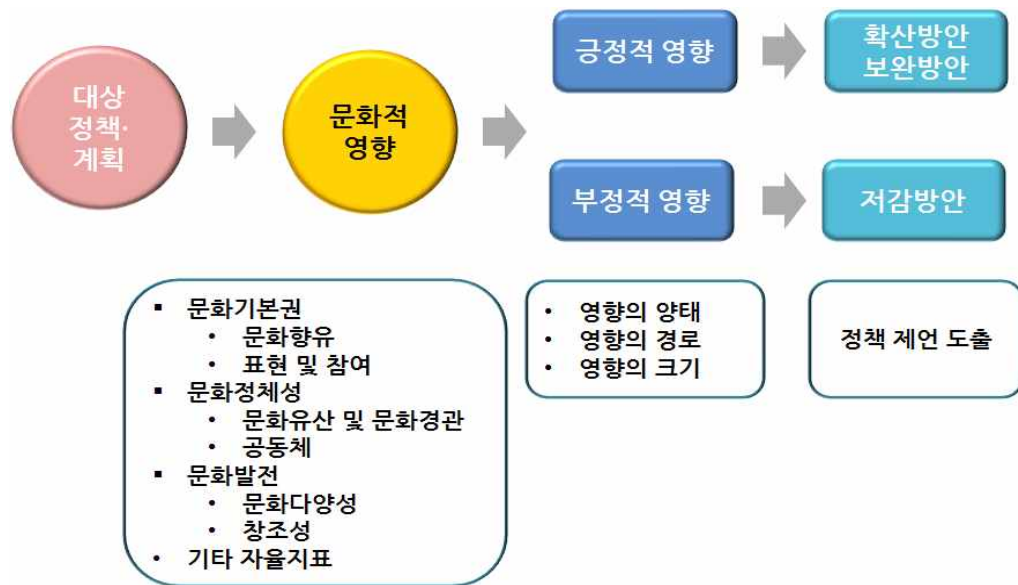
③ 평가시기에 따른 분류

- 사전평가 : 정책 등이 시행되기 이전에 실시하는 평가임
- 과정평가 : 정책 등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평가로서 계속사업 등이 포함됨

(3)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³⁾

3) 양혜원.(2017). 문화영향평가 표준평가도구 개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7년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의 평가모형은 다음의 [그림]과 같음



[그림 2-2] 문화영향평가(개별평가) 평가모형

□ 평가지표

- 2017년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의 평가지표는 2016년에 이어 다음의 <표>와 같은 ‘6개의 핵심지표(공통지표)’와 개별평가기관에서 대상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발한 ‘특성화지표(자율지표)’로 구성됨
- 개별평가기관은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사전에 제시한 「2017 문화영향평가 평가지침」에 정해진 개념적 정의, 표준평가도구(standard assessment tool)⁴⁾을 준용하여 평가를 진행하도록 함
 - 2016년에는 각 개별평가기관이 개별적으로 세부평가지표와 설문문항을 개발하여 평가를 진행했으나, 세부측정도구의 다양성으로 인해 평가결과의 비교가능성, 타당도,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17년에는 평가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제시한 표준평가도구를 적용하여 평가를 진행하도록 함

4) 표준평가도구(Standard Assessment Tool)는 대상 정책 및 계획의 문화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세부측정도구(설문문항 등)와 세부측정도구의 적용방법(측정 방법론)을 통칭하며 다양한 유형의 대상사업에 대해 표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구를 의미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양혜원.(2017). 문화영향평가 표준평가도구 개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참고할 것.

〈표 2-5〉 2017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구분	평가 항목	평가지표	주요 측정개념
공통 지표 (핵심지표)	문화 기본권	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문화접근성 및 문화향유수준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표현 및 참여기회, 생활문화예술 참여
	문화 정체성	3.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유·무형의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보호와 활용
		4.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 문화공동체
	문화 발전	5.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 종 다양성,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
		6.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창조자본, 창조기반
특성화지표 (자율지표)	개별평가기관에서 대상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발		

□ 평가방법

- 2017년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는 「2017 문화영향평가 평가지침」에 제시된 ‘표준분석·평가절차’에 정해진 평가방법에 따라 진행됨
- 2017년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의 평가지침은 「문화영향평가 표준평가모형 개발 연구(양혜원, 2017)」을 통해 개발된 표준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작성됨
 - 동 지침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계획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있어 문헌분석, 현장실시, 관계자 인터뷰 및 FGI, 주민 등 정책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 전문가에 의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으며, ‘표준분석 평가절차’ 및 ‘표준설문지’, ‘표준평가서’의 적용을 통해 평가결과의 절차적·내용적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동 지침에 제시된 ‘표준분석·평가절차’는 다음의 〈표〉와 같음

〈표 2-6〉 2017 문화영향평가 표준분석·평가절차

절차	주요내용	분석방법
1. 대상 정책 및 계획의 개요 및 특성 분석	① 대상 정책 및 계획의 개요 및 특성 분석 ② 대상 정책 및 계획의 문화영향평가의 의의 및 필요성 기술 ③ 평가범위 및 대상 구체화	• 사업계획서 및 사업현황 자료 문헌분석
2. 관련 선행연구 및 사례 분석	④ 대상 정책 및 계획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⑤ 국내외 유사 사례분석을 통한 영향의 예측 및 시사점 도출	• 문헌분석
3. 현황분석	⑥ 대상 정책 및 계획 추진현황 분석 ⑦ 대상지의 문화영향지표 현황 분석	• 사업계획서 및 사업현황 자료 문헌분석 • 소관기관 담당자 인터뷰 • 현장조사 • 통계자료 분석 및 설문조사 실시
4. 영향요인의 파악(이슈도출) 및 문화적 영향 예측	⑧ 문화적 영향과 관련된 이슈 도출 ⑨ 문화적 영향의 논리적 예측 ⑩ 평가지표 및 방법론 확정 : 설문지 작성	• 현장조사 • 전문가 자문
5. 문화영향평가	⑪ 문화영향평가	• 전문가 평가단 구성 (10인 내외) • 현장조사 • 관계자 FGI 및 심층인터뷰 • 주민 등 관계자 설문조사 • 전문가 평가(전문가 평가단)
6. 평가결과의 해석 및 정책적 제언 도출	⑫ 평가결과의 해석 ⑬ 정책적 제언 도출 ⑭ 내부 컨설팅 워크숍을 통한 정책적 제언의 정교화	• 전문가 평가단 회의 • 관계자 FGI
7. 찾아가는 컨설팅	⑮ 대상 정책 및 계획 담당자 면담 및 컨설팅 실시	• 개별평가기관 및 전문가 평가단

① 문헌분석

- 대상과제 사업계획서 및 사업현황 자료 문헌분석, 대상 정책 및 계획과 고나려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한 영향의 예측 및 시사점 도출

② 관계자 설문조사

- 대상사업으로 인해 문화적 영향을 받게 될 사업관계자(주민, 상인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제시한 ‘표준설문지’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변형한 설문지에 따라 통합설문조사를 실시

- 모집단 : 2017년 현재 [] 사업 대상지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남녀
- 표본추출프레임(sampling frame) : 통계청 집계구 리스트
- 표본추출방법(sampling method) : 크기비례확률추출방법(PPS : Sampling with Probabilities Proportional To Size)을 활용한 집계구 추출 후 계통 추출 방식으로 가구 추출
- 표본규모(sample size) : 기본평가 각 100샘플+ α , 심층평가 각 400샘플+ α ⁵⁾
- 조사방법(자료수집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가구방문 면접조사
- CAPI(Computer Aided personal Interview) 시스템 활용
- 조사기관 : (주) 마크로밀 엠브레인
- 조사기간 : 2017년 7월~8월

③ 현장조사 및 관계자 FGI·심층인터뷰

- 대상과제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field study) 수행
- 대상과제 소관기관 담당자, 주민, 사업관계자 FGI(Focused group Interview) 및 심층 인터뷰

④ 전문가평가단 구성 및 운영

- 개별평가기관은 10인 내외의 전문가 평가단을 사전에 구성하여 현장조사, 관계자 FGI 등 문화영향평가 평가과정 전반에 걸쳐 참여하도록 하고, 전문가 평가단 회의를 통해 전문가 평가결과를 도출하도록 함

⑤ 문화영향지수의 도출 및 정책적 제언 도출

- 문헌분석, 현장조사, 관계자 FGI 인터뷰, 전문가 평가결과 및 관계자(주민 등) 평가결

5) 대상과제의 특성에 따라 주민 이외에 다른 정책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추가적으로 설문을 수행함(예 : 상인)

과를 종합하고, 평가주체별·항목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6개 핵심지표별 문화영향지수를 도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제시

〈표 2-7〉 문화영향지수의 도출(예시) : 심층평가(사전평가)

평가지표	세부평가항목	필수 여부	항목 가중치	평가주체 가중치
1. 문화향유 영향지수(100)	1) 전문가 평가점수		100	53.6
	①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평가	◎	100	
	2) 주민의 인식 및 기대		100	
	① 문화공간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	◎	8.6	46.4
	② 사업을 통한 문화공간 확충 시 이용의향	▲	43.6	
	③ 사업을 통한 문화접근성 확대에 대한 인식	○	31.2	
	④ 사업을 통한 문화향유수준 제고에 대한 인식	▲	16.6	
2. 표현 및 참여 영향지수(100)	1) 전문가 평가점수		100	46.8
	①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평가	◎	100	
	2) 주민의 인식 및 기대		100	
	① 사업 인지도	◎	4.0	53.2
	② 사업에 대한 공감도	◎	6.2	
	③ 사업 추진과정에서 표현 및 참여 기회의 충분성	◎	20.7	
	④ 사업을 통한 표현 및 참여 기회 증진에 대한 인식	◎	16.0	
	⑤ 사업을 통한 생활문화공간 확충 시 이용의향	▲	34.8	
	⑥ 사업을 통한 생활문화활동 기회 증진에 대한 인식	▲	18.3	
3.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영향지수(100)	1) 전문가 평가점수		100	67.1
	①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평가	◎	100	
	2) 주민의 인식 및 기대		100	
	① 사업을 통해 조성될 문화유산·경관 대한 방문 또는 이용의향	▲	23.0	32.9
	② 사업이 문화유산의 보호·보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인식	◎	40.6	
	③ 사업이 문화유산의 창조적 활용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인식	◎	36.4	
4. 공동체 영향지수(100)	1) 전문가 평가점수		100	50.0
	①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평가	◎	100	
	2) 주민의 인식 및 기대		100	
	① 사업이 사회적 자본 및 지역애착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인식	◎	65.2	50.0
	② 향후 사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행사 참여 의향	▲	34.8	
5. 문화다양성 영향지수(100)	1) 전문가 평가점수		100	63.9
	①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	100	
	2) 주민의 인식 및 기대		100	
	① 사업이 문화다양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인식	◎	66.7	36.1
	② 사업이 소수집단의 문화적 권익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인식	▲	33.3	
주1: 6. 창조성 영 향지수(100)	1) 전문가 평가점수		100	67.1
	①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	100	
	2) 주민의 인식 및 기대		100	
	① 사업이 창조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	38.6	32.9
	② 사업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	38.4	
	③ 사업이 창조기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	23.0	

주1 : ◎ 필수항목, ▲ 선택항목

주2 : 7점 척도의 100점 환산식 = [(점수-1) × 1/6] × 100

주3: 평가주체 가중치와 평가항목 가중치는 2017 문화영향평가 평가지침(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에서 제시된 표준가중치를 활용함

(단위 : 점/100점 만점)



[그림 2-3] 2017 문화영향평가 결과 요약 제시방법

- 한편 자체평가는 자체평가기관 담당자의 평가부담을 고려하여 소관기관이 직접 체크리스트 형태의 약식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추진함
- 구체적으로 대상 정책의 문화적 영향의 크기(높음, 보통, 낮음), 문화적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했는지 여부(반영완료, 추후개선, 해당없음)에 대해 평가하고, 그 근거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함

〈표 2-8〉 자체평가보고서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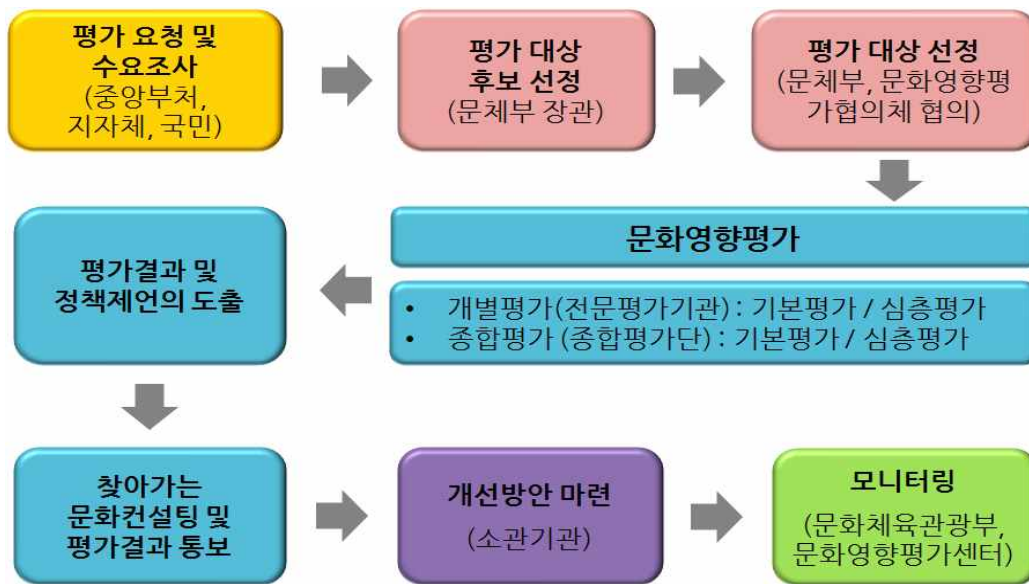
평가 항목	평가지표	정책의 문화적 영향	문화영향 정책 반영 여부
1. 문화기본권	1-1. 문화향유 (문화접근성 확대 및 문화향유 수준 제고)	<input type="checkbox"/> 긍정적 <input type="checkbox"/> 영향없음 <input type="checkbox"/> 부정적	<input type="checkbox"/> 반영완료 <input type="checkbox"/> 추후개선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1-2. 표현 및 참여 (표현 및 참여 기회 확대와 생활문화예술 참여 증진)	<input type="checkbox"/> 긍정적 <input type="checkbox"/> 영향없음 <input type="checkbox"/> 부정적	<input type="checkbox"/> 반영완료 <input type="checkbox"/> 추후개선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2. 문화정체성	2-1.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보호와 활용)	<input type="checkbox"/> 긍정적 <input type="checkbox"/> 영향없음 <input type="checkbox"/> 부정적	<input type="checkbox"/> 반영완료 <input type="checkbox"/> 추후개선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2-2. 공동체 (사회적 자본 형성 및 문화공동체 발전)	<input type="checkbox"/> 긍정적 <input type="checkbox"/> 영향없음	<input type="checkbox"/> 반영완료 <input type="checkbox"/> 추후개선

3. 문화발전	3-1. 문화다양성 (문화적 종 다양성 증진 및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 확대)	<input type="checkbox"/> 부정적 <input type="checkbox"/> 긍정적 <input type="checkbox"/> 영향없음 <input type="checkbox"/> 부정적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반영완료 <input type="checkbox"/> 추후개선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3-2. 창조성 (창조자본 형성 및 창조기반 구축)	<input type="checkbox"/> 긍정적 <input type="checkbox"/> 영향없음 <input type="checkbox"/> 부정적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반영완료 <input type="checkbox"/> 추후개선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4) 평가절차

☐ 전문평가

○ 2017년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 평가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됨



[그림 2-4]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 평가절차

- ①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 평가요청 접수 및 수요조사
- ② 평가대상 선정(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영향평가 협의체)
- ③ 문화영향평가 실시 : 개별평가 및 종합평가
- ④ 평가결과 및 정책제언의 도출
- ⑤ 찾아가는 문화컨설팅 및 평가결과 통보
- ⑥ 소관기관 개선방안 마련
- ⑦ 모니터링

□ 자체 평가 (시범 평가)

2017년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시범평가) 평가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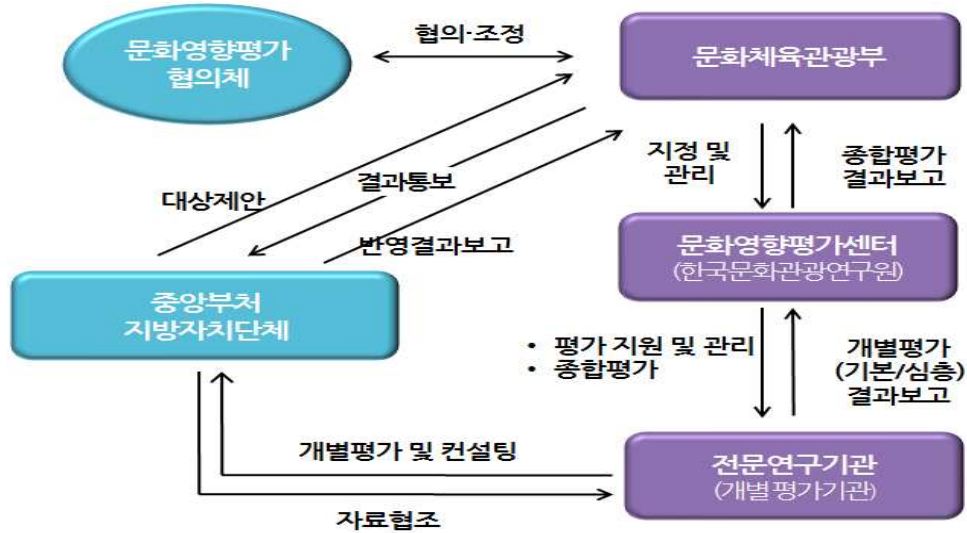
[그림 2-5]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평가절차

- ① 자체평가(시범평가) 수요조사
-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자체평가 대상 선정
- ③ 소관기관에서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실시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자체평가 시행기관에 대해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④ 문화체육관광부에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 ⑤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자체평가보고서 검토 후 검토의견 통보
- ⑥ 소관기관은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5) 평가체계

□ 전문평가

- 2017년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 평가체계는 다음과 같음



[그림 2-6]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 평가체계

①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전반적 관리 및 지원, 제도개선 등 수행

② 문화영향평가협의체(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

-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하여 문화영향평가의 기본 방향, 문화영향평가의 기준 및 방법, 대상 선정,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협의함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영향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와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

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 관계 중앙행정 기관

2.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이하‘협력체계’라 한다)’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체계 기능) 협력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영향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력체계 구성과 위원의 위촉) ① 협력체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정책기획관 또는 문화영향평가와 관계된 국장급 공무원
2.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력체계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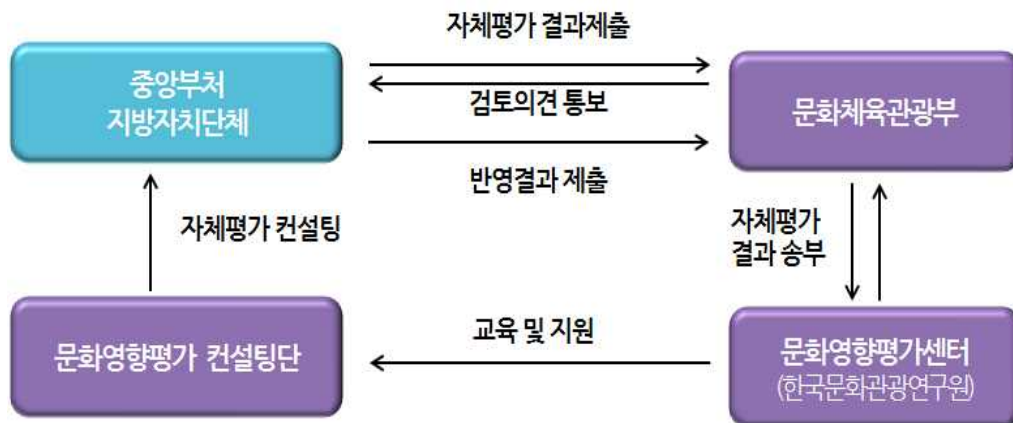
제4조(협력체계 회의) ① 위원장은 협력체계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협력체계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개최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력체계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시급한 경우에 한해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소관기관)
 - 소관정책 등에 대해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문화영향평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거나 제안하고, 전문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이나 개선권고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거나 해당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
- ④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화영향평가센터)
 - 문화영향평가의 실직적 수행 및 관련 사업 실시, 평가지침 작성, 교육 및 컨설팅 수행, 개별평가기관의 선정 및 전반적 지원 및 관리, 종합평가단 구성을 통한 종합평가 실시 등
- ⑤ 문화영향평가 개별평가기관
 - 선정된 대상과제 등에 대해 개별평가 실시 및 개별평가보고서 작성
- 자체 평가 (시범평가)
 - 2017년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평가체계는 다음과 같음



[그림 2-7]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평가체계

- ①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에 대한 수요조사, 제도개선 등
-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소관기관)
 - 소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정책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문화영향평가 수행 및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 자체평가결과보고서에 대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검토의견서에 대해 반영결과 제출
- ③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화영향평가센터)
- 소관기관이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평가지침 제시, 교육, 전문가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컨설팅 지원
- 소관기관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2.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성과⁶⁾

1)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본원적 정책목표 달성

- 공공정책 및 계획이 미치는 문화적 영향의 본격적 분석 및 평가 실시
 - 시범평가(9건), 본 평가 1차년도(15건), 본 평가 2차년도(14건)를 통해 다양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과 계획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실시
 - 타 분야 공공정책이 공동체, 문화향유, 표현 및 참여,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문화다양성, 창조성 등에 미치는 다양한 문화적 영향, 발생 가능한 이슈와 문제점을 제3자의 관점에서 환기하고, 공공정책 담당자들이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문화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문화적 영향을 고려한 정책 개선방안 제시를 통한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
 - 문화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의 개선방안을 맞춤형으로 제시하고, 문화적 요소와의 효과적 결합에 필요한 전문적 컨설팅을 통해 타 분야의 문화적 수요 충족, 정책의 효과성과 수용성 제고
 -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 다양한 융·복합 정책의 확대, 부처간 협업 확대에 기여
-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적 개선
 -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대상정책에 반영하고 추후 개선계획안의 마련

〈표 2-9〉 2016 문화영향평가 결과반영 및 개선계획

	반영완료	추후개선
안동시 중구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5	7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 계획	3	4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2
고양삼송지구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및 운영 사업	2	4
문화재 돌봄사업	6	5
광주 동구 도시재생선도사업	12	1
대구 남구 대명공연문화거리 활성화 사업	14	3
소통과 혁신의 경기도 신청사 건립	6	20

6) 2016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2016)의 내용을 토대로 재작성

Before	After
물리적 하드웨어(H/W) 조성에 치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재단의 사업과 연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소프트웨어(S/W) 보완방안을 제시 공간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한 문화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제안
문화적·사회심리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공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건물이 광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개방성과 상징성 제고 업무 및 이동 동선을 고려한 보행공간의 설계
특색 없는 상품으로 차별화 및 수익 확대에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예술가·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특산물의 포장디자인·홍보마케팅 개선
획일화된 체험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고유의 멋과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을의 고유한 이야기, 인물, 경관을 조사·발굴하고 활용하여 콘텐츠화 (예 : 000 할머니의 봄 밥상)
특정시기 역사자원에 한정된 활용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현대 유산의 적극적 활용 및 원도심과 관련된 추억의 재구성을 위한 이야기 공방 사업 제안
시설에 대한 주민 인지도와 활용도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의 브랜드 구축 방안과 지역주민들의 공간습관 형성을 위한 플리마켓 등 소소한 개방 프로그램 활용 제안
사업에 대한 주민 간 이해상충으로 갈등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협의체를 통해 지역의제와 관련된 지속적인 제안과 실행점검 제안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생활문화프로그램 운영 소규모 마을축제들 활용하여 서로 교류·소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청년층 및 창조인력 유입을 위한 계획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공폐가를 예술가 레지던시 공간으로 활용하여 창조인력의 유입 및 청소년·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개발의 부작용에 대한 예방대책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공간 확보, 건물주와 입주민 간 상생협약 등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예방대책 마련

[그림 2-8] 2016 문화영향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사례

- 참여적 평가과정을 통한 정책관계자의 이해 및 참여 확산
- 문화영향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을 통해 정

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정책관계자들 간 상호이해 및 공감대 조성

- 사업담당자, 대상지 주민, 정책관계자에 대한 심층인터뷰, FGI,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업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이해 제고

2) 문화영향평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협력체계의 기반 구축

- 문화영향평가 협의체 구축(2016.2),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문화를 테마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실시(2016년 5건, 2017년 6건),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 차원의 문화영향평가 도입에 대한 지원과 협력(2016~2017), 대만의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관련 국제적 연구협력 추진(2016.11) 등 문화영향평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됨

□ 문화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공감대 조성

- 문화영향평가 협의체 출범을 위한 중앙부처 단위 실무회의 개최(2016.2), 문화영향평가 지자체 단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2016.2), 문화영향평가 대상 선정을 위한 중앙부처/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실시 및 대국민 대상 과제공모 수행(2016~2017), 문화영향평가 심포지엄 개최를 통한 문화영향평가 성과와 발전방안 공유(2016~2017),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설명회 개최(2016~2017), 문화영향평가 실시 과정에서 통합워크숍의 개최를 통한 지속적 공감대 형성(2016년 9회, 2017년 24회), 소관기관으로 찾아가는 컨설팅 워크숍의 추진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추진(2016년 15건, 2017년 14건), 기타 다양한 포럼, 세미나, 인포그래픽 제작,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제도의 소개 및 홍보를 통해 문화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됨

□ 자체평가 추진을 위한 시발점의 확보

-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추진을 위해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포럼’ 개최(2016.9),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자체적인 문화영향평가 모델 개발에 대한 지원과 협력수행, 2017년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시범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수행

3)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체계화 및 개선

- 표준평가도구 개발을 통한 평가지표 및 방법론의 지속적인 체계화와 개선
 - 2년간의 시범평가와 본평가 1차년도와 2차년도 시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화영향평가에 담아내야 할 가치를 평가지표 및 방법론으로 체계화
 - 3개 평가항목- 6개 핵심 평가지표의 제시와 표준평가도구(Standard Assessment Tool)의 개발 및 제시를 통해 문화영향평가의 방법론적 고도화와 평가결과의 타당성과 신뢰도 제고
 - 표준분석·평가절차의 제시를 통한 평가절차의 표준화와 함께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다양한 방법론과 특성화 지표의 활용을 허용함으로써 발전적 개선을 유도
 - 개별평가 외에 종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중층적 평가체계 설계를 통해 평가결과의 타당성과 적실성 제고

- 대상 유형별 평가체계 기반 마련
 - 평가시기(사전평가 vs. 과정평가), 평가대상(정책 vs. 계획), 대상과제의 내용 및 유형(문화적 요소를 포함한 복합개발사업, 문화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개발사업, 교육·인력양성·복지 등 소프트웨어(S/W) 중심 사업 등)을 고려한 표준평가도구의 개발 및 활용방법 제시를 통해 유형별 평가체계 기반 마련

- 수요조사 - 평가 - 컨설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
 - 피평가기관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통한 수요조사와 평가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컨설팅이 수미상관을 이루는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다양한 정책이 보다 문화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평가제도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
 - 평가 이후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 피평가기관의 니즈에 부합하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기하고, 실질적 정책반영을 유도함으로써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정책의 문화화’를 위한 지원제도로 운영

3.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1) 대상 및 선정방식

(1) 문화영향평가 대상의 모호성

- 「문화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문화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으나,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으로 상당히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피평가기관으로서는 어떠한 계획과 정책이 대상이 되는지 명확히 알 수가 없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문화영향평가가 꼭 필요한 정책이나 계획이 문화영향평가 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함
 - 통상 부정적인 문화 영향이 예측되는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의 경우 문화영향평가를 회피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임
 - 이로 인해 정책 등을 통해 국민 또는 지역 주민의 삶에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SOC사업 등은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에서 반복적으로 누락되거나 제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문화기본법」상 문화영향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영향평가 대상의 모호성으로 인해 문화영향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려움
 - 이는 문화영향평가가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부차적이고 부가적인 평가로 오인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여 평가의 위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음
- 이에 그간 의무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대상을 법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된 바 있음
 -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타 영향평가제도, 즉 환경영향평가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고용영향평가제도의 경우 개별영향평가법에서 의무적 평가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① 환경영향평가 :

- 도시의 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등을 포함한 18개 분야 사업 및 계획 (환경영향평가법)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시·도의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실시 가능

② 성별영향분석평가

- 재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성별영향분석평가법)
- 법령,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③ 고용영향평가

-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요청하거나, 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고용정책기본법)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결정한 사업, 국회가 그 의결로 고용영향평가의 실시를 요구한 정책(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평가제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향후 「문화기본법」 개정안 또는 「문화영향평가법」 제정안에 의무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정책 및 계획의 유형을 구체화하여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취지에 맞는 평가대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사전평가의 내재적 어려움

- 문화영향평가는 아직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이전에 계획 단계에 있는 정책사업에 대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 평가대상이 되는 계획이 계속적으로 변동되거나,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하거나 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정책이나 계획이 미칠 문화적 영향을 사전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함
 - 동일한 시설조성사업이라 하더라도 시설의 구체적인 구성과 배치, 콘텐츠의 기획 및 운영에 따라 그 문화적 영향은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문화영향평가는 일부 대상과제의 경우 이미 시행중인 사업에 대한 과정평가로 진행하여 정책이 미치는 문화적 영향에 대한 경로나 양태, 크기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자 하고 있음
- 문화영향평가가 정책이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해당 정책·계획의 문화적 영향을 고려하여 수정·보완·개선을 꾀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또한 이미 시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정책의 개선이나 수정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문화영

향평가제도의 제도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전평가로 행해질 필요성이 있음

-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수록 평가결과 및 결과에 기반한 정책적 제언의 타당도 또한 제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절한 평가시점에 대한 논의와 설정이 필요할 것임
- 예컨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시기에 문화영향평가를 함께 수행하거나,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시기에 문화영향평가를 함께 수행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2) 평가지표 및 평가수행방식

(1) 평가지표의 적용 및 해석의 어려움

- 현재 문화영향평가의 공통지표(핵심지표)는 2003년부터 시작된 선행연구로부터 2년간의 시범평가, 그리고 1년간의 본평가 과정을 통해 진화·발전해온 역사적 산물임
- 시범평가와 본평가 1차년도까지는 핵심지표의 개념과 판단기준만을 제시하고, 개별평가를 수행하는 개별평가기관에게 대상과제에 맞는 세부평가지표와 평가방법론을 자율적으로 개발·적용할 수 있도록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함
- 그러나 본평가 2차년도부터는 그간 개발된 평가지표와 방법론에 근거하여 표준평가 도구(Standard Assessment Tool)와 지표풀(indicator pool)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 및 변용하도록 하여 평가도구와 방법론을 표준화하고, 비교가능성,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음
- 이러한 표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개념의 추상도가 높고, 지표의 해석 및 적용에 여전히 자율적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개별평가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평가지표의 적용과 해석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고 있음
- 다만 이러한 현상은 문화영향평가 시행 초반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향후 다양한 유형의 정책·계획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연구가 진행되고 지표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이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다만 향후 다양한 문화영향평가 연구가 축적되기까지 약 5년 동안은 지속적인 평가지침(평가매뉴얼)의 제시와 공유, 교육 및 설명회, 통합워크숍 등을 통한 평가연구진들간의 토론과 논의를 통한 학습과정이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임

(2) 평가범위 설정의 어려움

- 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대부분 특정한 공간적·대상적 범위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대상 사업이 미치는 문화적 영향은 대상사업이 제시하고 있는 공간적·대상적 범위와 불일치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 한편 특정한 공간과 대상에 나타나는 문화적 영향은 평가대상사업 뿐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다른 관련사업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음
- 그러나 한정된 시간과 자원으로, 대상지 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을 고려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음
- 따라서 향후 문화영향평가의 평가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3) 비교집단실험설계 및 통계정보를 활용한 문화적 영향의 정량화 필요

- 대상 정책이나 계획이 미치는 문화적 영향은 수치로 계량화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다수를 차지함
- 따라서 현재 문화영향평가제도는 정책관계자의 인터뷰나 FGI, 현장조사, 사업계획서 및 현황자료에 대한 문헌분석, 전문가 평가 등 질적분석(정성적 분석)을 중심으로 하되, 통계자료 및 관계자 설문조사 등을 통한 양적분석(정량적 분석)을 함께 병행하고 있음
- 또한 평가결과 또한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비해 사업 시행 이후 문화적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영향지수의 형태로 정량화하고 있음
- 그러나 대상사업이 미치는 문화적 영향을 보다 간명하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의 주요지표값과 사업 시행 이후 주요지표값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데, 문화영향평가가 사업 시행 이전의 한 시점에서 진행되고, 문화영향평가에서 활용하는 주요지표와 관련된 전국 단위 시계열 통계자료도 미흡하여 사전-사후에 대한 비교가 불가능하여 보다 엄밀하고 정확한 평가가 어려움
- 따라서 향후 실험집단-비교집단 사전사후 측정설계 등을 통한 이중차분(DID, Difference-in-Difference) 모형을 이용하여 사업의 문화적 영향을 보다 엄밀하게 추정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문화영향평가에서 사용하는 주요 지표값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 시계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인프라 구축에 힘쓸 필요가 있음

(4) 컨설팅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인한 평가의 왜곡가능성

- 문화영향평가제도는 대상 사업의 문화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대상 사업이 문화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제언함으로써 정책의 수정·보완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문화영향평가는 2016년부터 평가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소관기관으로 직접 찾아가는 컨설팅을 수행하여 면대면으로 문화컨설팅을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고자 함
- 그러나 일부 피평가기관의 경우 컨설팅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인해 문화영향평가를 평가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별도의 용역을 통해 수행해야 할 작업에 대한 아이디어와 기본계획 또는 실행계획 수준의 구체적인 사업방향 및 내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나타남
- 이러한 현상은 문화영향평가의 법적·제도적 위상과도 관계가 있는바, 문화영향평가제도는 대상 정책이나 계획이 문화적 관점에서 어떠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부분이 보다 보완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진단·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과 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수행하는 제도적 기제라는 인식이 확립될 필요가 있을 것임
- 또한 피평가기관의 참여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기제로 활용하고 있는 ‘찾아가는 컨설팅’의 절차를 평가절차와 분리하고, 평가결과 컨설팅이 필요한 대상정책 등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컨설팅을 추진함으로써, 평가결과의 타당성 제고와 컨설팅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3) 평가의 법적·제도적 기반

(1)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제도화 기제 미비

- 현재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대상정책에 대한 정책적 제언 또는 개선방안이 제시되어도 소관기관이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
 - 타 영향평가의 경우 평가결과 정책에 대한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문화영향평가가 중요하고도 시급한 내용을 다루는 평가가 아니라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부차적이고 부가적인 평가로 오해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문

화영향평가의 실질적 위상 저해의 요소로 작용함

- 또한 평가기관이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보다 바람직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도록 하는 동기부여를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2) 피평가기관의 평가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미흡

- 문화영향평가 대상이 법적으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문화영향평가 참여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피평가기관의 평가 참여 유인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 현재 문화영향평가는 평가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로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컨설팅 제공, 언론보도 및 성과공유심포지엄 등을 통한 홍보 지원 등을 제공하고는 있으나, 소관기관의 입장에서는 소관사업에 대해 불리한 평가가 내려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과 평가 참여시 담당자의 행정적 부담으로 문화영향평가에 참여를 꺼리게 되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문화영향평가는 유명무실화될 위험이 존재함
- 따라서 문화영향평가 참여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기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피평가기관의 문화영향평가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4) 평가추진체계 및 협력체계

(1) 평가추진체계의 취약성

- 2016년 문화영향평가의 경우 시범평가가 이루어졌던 2015년에 비해 평가대상 건수가 5건에서 15건으로 3배 증가했으며, 향후 문화영향평가 대상의 법정화와 체계화가 이루어진다면 평가대상 건수와 이에 수반되는 추가적 업무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그러나 영향평가 추진을 위한 독립적인 조직을 두고 있는 ‘고용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와는 달리 문화영향평가제도의 경우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내에 공식적인 조직체계 없이 소수인원만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문화영향평가의 수행과 체계화·고도화를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표 2-10〉 타 분야 영향평가와 문화영향평가 추진체계 비교(2017 기준)

구분	문화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전담인력	3인	15인	55인
중앙단위전담조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평가센터 내에 일부 인원이 담당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본부
평가 주요 내용	정책·계획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평가	정책이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	정책·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법적근거	문화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평가건수	17건	39건	171건(협의 건수 3,217건), '16 기준)
사업예산	1,217,727 천원	3,774,000 천원	100,031,000 천원

- 문화영향평가가 가진 중요성과 위상 제고를 위해, 그리고 향후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및 범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단위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의 조직적 위상을 ‘문화영향평가센터’로 공식화하고, 문화영향평가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자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 단위에도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문화영향평가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중앙-지역 단위로 이어지는 전국적 문화영향평가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경우 광역 단위로 16개의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지역 GIA센터)’가 지정·운영되고 있음

(2) 협력체계의 취약성

- 현재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 구성원이 각 부처 국장급 공무원으로 법적 위상이 낮고, 심의·의결 권한이 없는 단순 협의기구의 성격으로 제한되어 있어 문화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평가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존재함
- 국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및 계획에 대해 실질적인 문화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대상 정책이 문화적으로 바람직하게 개선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위 수준으로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선정과 평가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와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의 법적위상 제고와 역할 강화가 시급함



제3장

타 영향평가제도 분석

1. 환경영향평가제도 분석
2.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분석
3. 고용영향평가제도 분석
4. 영향평가제도 비교 및 시사점

1. 환경영향평가제도 분석

1) 목적 및 변천

- 「환경정책기본법」 제41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이나 절차 등은 개별법률로써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제41조(환경영향평가) ① 국가는 환경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2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
-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함(제2조제1항)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함(제2조제3항)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함(제2조제4항)⁷⁾

7) 이 하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은 세 가지 평가를 통칭할 때 사용함

〈표 3-1〉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비교

환경영향평가(EIA)	전략환경영향평가(S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 마지막 단계에서 실시 ▪ 제안된 개발계획에 대한 수동적 접근 ▪ 환경상 영향에 관한 구체적 규명 ▪ 대안검토 곤란 ▪ 누적영향에 대한 검토 곤란 ▪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에 중점 ▪ 좁은 범위에서 매우 상세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 초기단계에서 실시 ▪ 제안된 개발계획에 대한 능동적 접근 ▪ 지속가능 발전, 환경적 연관성 규명 ▪ 광범위한 잠재적 대안 고려 가능 ▪ 누적영향에 대한 조기 경고 ▪ 환경적 합목적성 충족 및 자연환경시스템의 유지에 중점 ▪ 덜 상세하지만 넓은 안목에서 비전과 포괄적 프레임워크 제시 가능

자료: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제도 설명자료(2012)

-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시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
- 환경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이 점진적으로 확대·발전되고 있음
- 환경보전법 1977년 제정
 - 「사전협의」 표제하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근거 마련
 - 1979년 : 「사전협의」 →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
 - 1981년 : (평가대상) 행정기관 →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사업으로 확대
 - 1986년 : (평가대상) 민간 개발사업으로 확대
- 환경정책기본법 1990년 제정
 - 환경정책의 종합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정(1990.8.1)
 - 환경보전법이 폐지되고 대기·수질·소음 등 분야별로 분법화
 - 주민의견 수렴절차, 사후관리 제도, 사전공사 시행금지 규정 신설
- 환경영향평가법 1993년 단일법으로 제정
 - 실질적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또는 공청회 의무적으로 개최
 - 협의내용 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의무화
 - 공사중지명령 미이행시 형사처벌규정 마련
 - 시·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마련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을 특수법인으로 설립
 - 협의기준 위반시 초과부담금 부과·징수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1999년 제정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용 현실화를 위해 분리발주제도 도입
 - 사업자 신청주의로 하여 평가항목·범위 확정제도(Scoping) 도입
 - 사전환경성검토와 연계 강화(의견수렴 대체 등 활용)
- 환경영향평가법 2008년 개정, 2009.1.1 시행
 - 환경·교통·재해·인구에 관한 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법
 - 교통·재해·인구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전부 삭제
 - Scoping제도⁸⁾를 사업자 신청주의에서 모든 평가대상으로 의무적 확대
 - 주민의견 재수렴 조항 신설 및 대상규정(30%이상 증가 등)
 - 평가서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한 간이평가제도 도입
- (통합)환경영향평가법 2011년 전부개정, 2012.7.22부터 시행
 - 환경정책기본법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환경영향평가법에 통합
 - 환경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
 -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 환경영향평가대행자(환경영향평가업)를 1종, 2종으로 구분



[그림 3-1] 환경영향평가의 제도 변화

자료: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제도 설명자료(2012)

8) 스코핑 제도(scoping):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반드시 평가해야 하는 항목과 범위를 미리 정하여 21개 평가항목 중 사업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영향이 크지 않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여 평가의 질적 향상과 사업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음



[그림 3-2] 환경영향평가의 연혁

자료: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제도 설명자료(2012)

2) 대상 및 수행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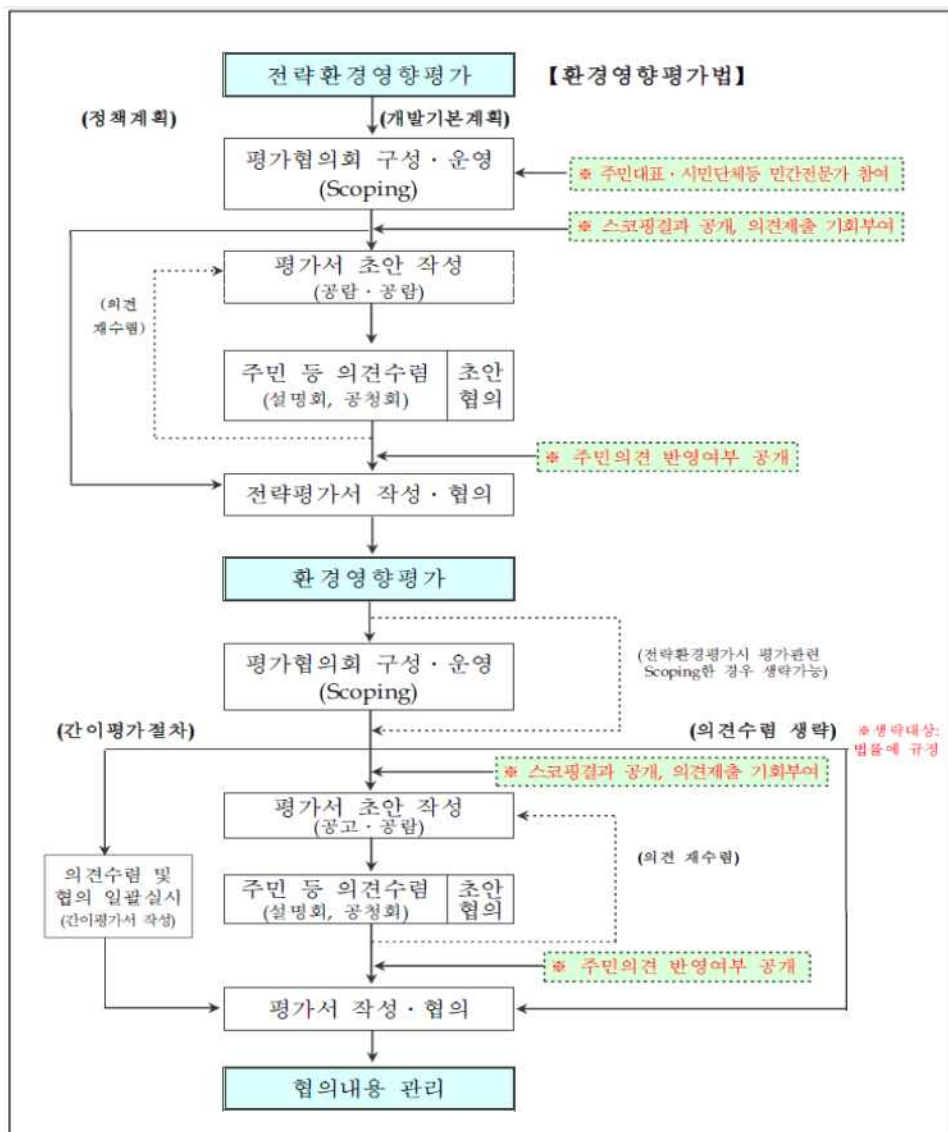
○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제4조)

1. 환경영향평가등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3.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환경영향평가등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5.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제6조) 및 평가방법(대통령령 제2조제2항)

-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개요



자료: 환경부 내부자료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계획(구체적인 대상은 부록 4 참고)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 현재 17개 분야 96개 계획을 대상계획으로 함

1.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3.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4.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5.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6.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8.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계획
11.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2. 산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3.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
14.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6.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책계획과 개발 기본계획으로 구분

1.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냐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2.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표 3-2〉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의 비교

	정책계획	개발기본계획
범위	국토·도시 전체	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지역
성격	중·상위 계획(개발구역 포함)	개발 실행계획
주요내용	장기적 정책목표, 기준·원칙 설정	개발목표, 규모, 토지이용계획, 환경보전계획
기간	장기계획(10~20년), 중기계획(5~10년)	특별한 기간 없음
주요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관광개발 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주택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산업단지 지정, 택지예정지구 지정, 유통단지 지정 도로기본계획, 연안관리지역계획, GB관리계획

자료: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제도 설명자료(2012)

○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구체적인 대상은 부록 5 참고)

- 현재 17개 분야 78개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규정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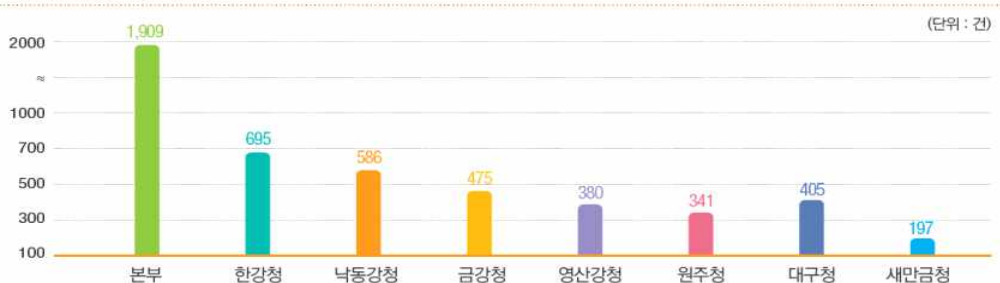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적

연도별 협의현황



협의기관별 협의현황



출처: 환경부(2016) 환경영향평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구체적인 대상은 부록 6 참고)

- 보전이 필요한 지역 또는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5,000㎡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이 해당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

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8조)

- 부록 5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 부록 5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또는 부록 5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관할구역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제외한다)·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범위의 사업

○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환경부장관에게 2부, 승인기관의 장⁹⁾에게 1부를 제출해야 함(법 제36조, 시행규칙 제19조)

-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 ②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 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에 대한 검토 기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 평가지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

〈표 3-3〉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대상사업	평가항목
정책계획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가) 국가 환경정책 나)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2)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나)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3)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가) 공간계획의 적정성 나) 수요 공급 규모의 적정성 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개발기본계획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4) 수환경의 보전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1) 환경기준 부합성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9)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법 제8조)

○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

〈표 3-4〉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항목	세부항목	주요 평가 내용
공통		토지이용계획, 시설배치계획, 법면처리대책,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철새 등 보호대책
1. 자연생태환경 분야	1) 동·식물상	동식물상의 변화, 종의 분포상황 및 다양도, 이동로·서식지 차단 또는 훼손여부,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보전대책
	2) 자연환경자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지역, 자연환경자산,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 보전대책
2. 대기환경 분야	1) 기상	기온, 증발량, 일조시간, 안개일수, 수립대제거, 열 방출 등 기상변화 예측 및 대책
	2) 대기질	배출원별 오염물질의 특성 분석 및 저감방안, 연료사용계획,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 예측 및 대책
	3) 악취	악취발생원, 악취영향범위, 농도 및 저감대책
	4) 온실가스	온실가스 발생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3. 수환경 분야	1) 수질(지표·지하)	오폐수처리대책, 용수공급계획, 하천 및 지하수 오염 방지대책
	2) 수리·수문	수자원 이용현황 및 수급계획, 유출계수, 유지용수량 예측
	3) 해양환경	해양수질, 부유물질 확산, 농도예측 및 저감대책, 해저지형
4. 토지환경 분야	1) 토지이용	주변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한 입지분석, 완충녹지 설치계획
	2) 토양	기름, 독극물, 슬러지, 대기오염물질, 오·폐수의 토양에 대한 영향 및 대책
	3) 지형·지질	표토·비옥토 유실방지, 지형·지질조사, 지형변화, 특이 지형 훼손대책, 법면처리계획
5. 생활환경 분야	1) 친환경적 자원 순환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처리대책, 처리시설 입지의 대안검토 및 확보계획
	2) 소음·진동	소음원 조사, 변화량 예측 및 대책
	3) 위락·경관	지역경관을 고려한 계획, 조망경관 변화 영향 및 대책
	4) 위생·공중보건	질병유발요인 및 보건위생대책, 공중위생시설의 배치 및 관리
	5) 전파장해	전파장해요인, 전파장해정도와 대책
	6) 일조장해	일조의 영향을 고려한 건물, 시설물 등의 배치계획
6. 사회환경·경제환경 분야	1) 인구	인구밀집의 유발 정도 및 인구밀집에 따른 영향 및 대책
	2) 주거(이주 포함)	주거지역 도로망 연결계획,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3) 산업	산업구조변화, 어업권, 양식장,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예측

출처: 환경부(2016) 환경영향평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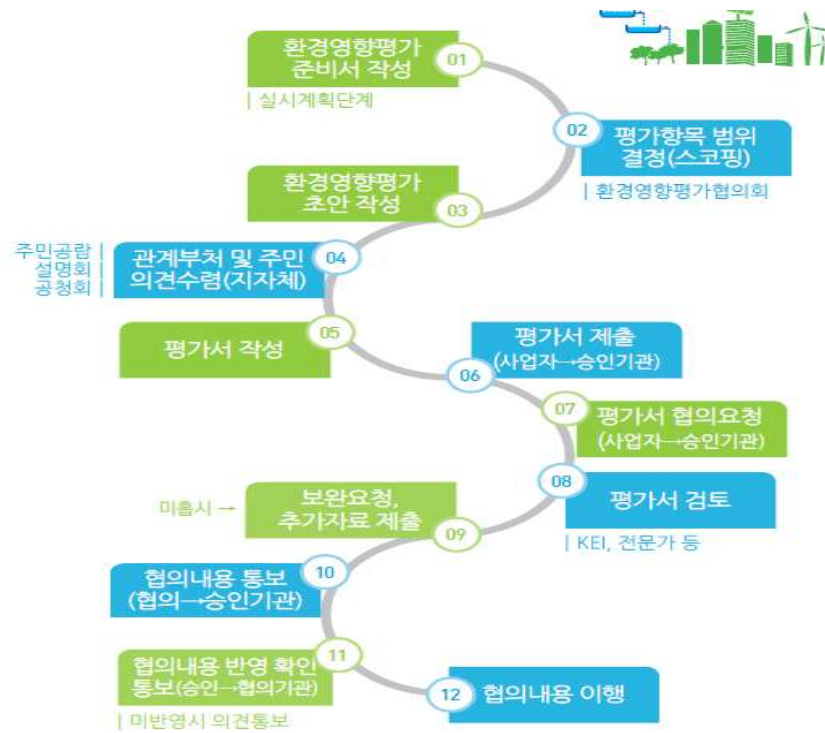
〈표 3-5〉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항목	세부항목
사업개요 및 지역 환경현황	1) 사업개요 2) 지역개황 3) 자연생태환경 4) 생활환경 5) 사회·경제환경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1)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등) 2) 대기질, 악취 3) 수질(지표, 지하), 해양환경 4)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5)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6) 경관 7) 전파장해, 일조장해 8) 인구, 주거, 산업

4) 추진체계

- 환경부(협의기관) : 승인기관으로부터 협의 요청, 전문 검토기관으로의 검토 요청, 승인기관에게 협의의견 제시 등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범위 결정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전문 검토기관) : 평가서 검토, 검토의견 전달(환경부)
- 승인기관¹⁰⁾ : 사업계획 승인, 협의의견 전달(사업자)
- 사업자 : 자체 평가서 작성, 계획 승인 요청(승인기관)
- 환경영향평가의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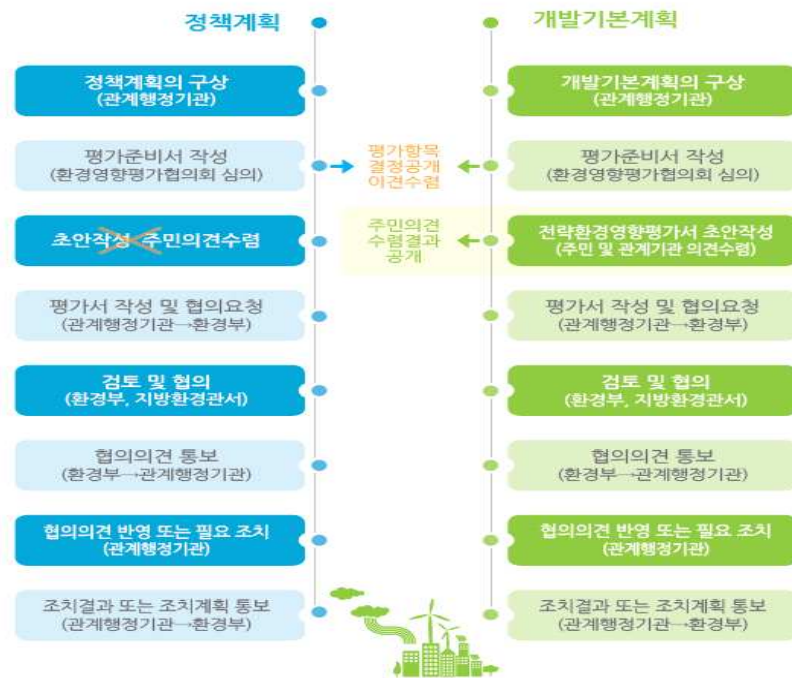
10) 승인기관은 사업계획의 인가, 허가 등을 확정하는 행정기관(예: 국토교통부, 시도 등)



[그림 3-3]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체계

출처 : 환경부(2016). 환경영향평가제도

○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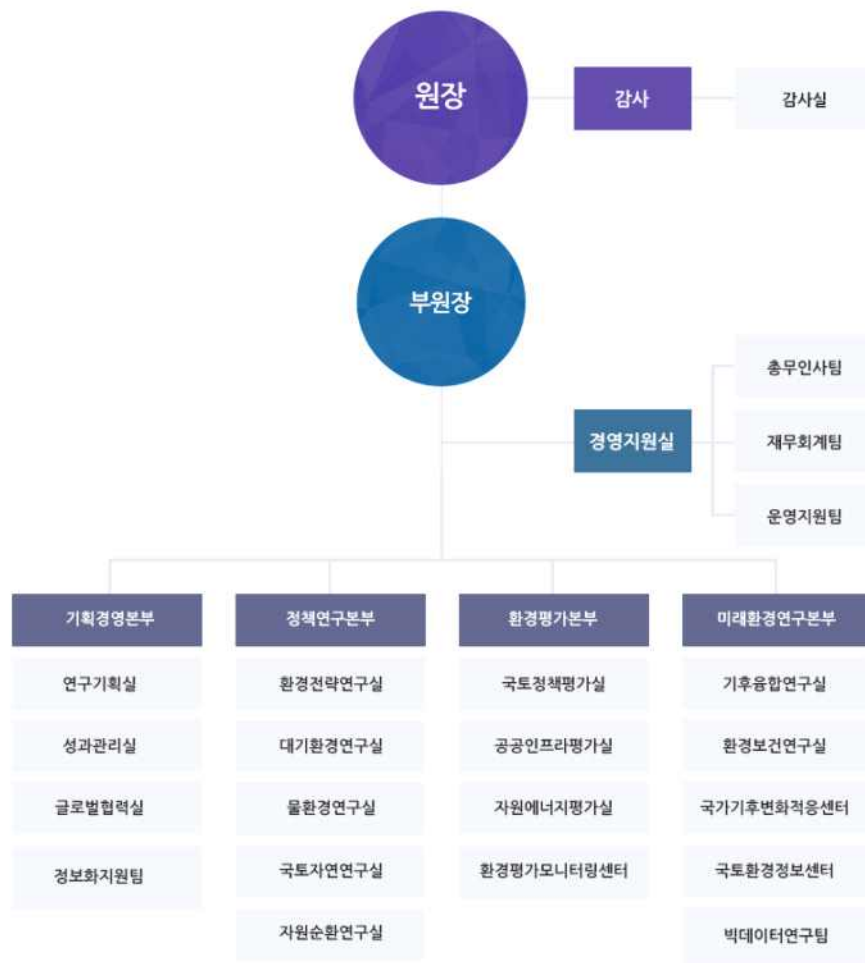


[그림 3-4]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체계

출처 : 환경부(2016). 환경영향평가제도

○ 환경영향평가 전문검토기관¹¹⁾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은 1992년 (재)한국환경기술개발원으로 설립되어, 1997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KEI로 개편되었고 1999년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됨
- KEI는 환경과 관련된 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과 함께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임무로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적 검토 및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환경영향재평가 실시 및 환경성 검토를 주요 기능으로 삼음
-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환경평가본부에서 담당



[그림 3-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직도

○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영향평가 계획과 사업의 이해, 스코핑, 주민의견 수렴, 보고서

1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누리집(<http://www.kei.re.kr/>)

작성 총괄, 종합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보다 충실한 환경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

- 법 제2조제6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사를 “환경 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
- 환경영향평가사는 평가 대행업체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과 협의업무 등을 총괄
- 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음(시행령 제71조 별표6)

1.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환경·에너지 분야(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환경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환경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환경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환경 관련 학과 대학졸업자로서 환경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환경 관련 학과 아닌 대학졸업자로서 환경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환경분야 업무를 5년(5급 이상은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6. 9년 이상 환경분야 실무에 종사한 사람

○ 환경영향평가업

-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그 작성 대행을 의뢰할 수 있음(법 제53조)
- 환경영향평가업은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되며, 제1종 평가업은 평가서와 사후 환경영향 조사서 작성 대행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제2종 평가업은 자연생태 환경의 조사, 자연생태환경의 영향 예측 평가, 자연생태환경 보전방안 마련의 업무를 수행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는 2020년부터 환경영향평가사를 1인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함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구성 주체(법 제8조): 환경부장관, 계획수립기관장, 승인기관장 또는 사업자
- 구성 시기(시행령 제4조): 환경영향평가 등이 실시될 때마다 구성
- 기능(시행령 제4조):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범위 결정, 협의내용 조정, 약식절차 실시 여부, 설명회와 공청회 생략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심의
- 위원의 구성(시행령 제4조): 주민대표, 시민단체 관계자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 협의기관장, 계획수립기관장 또는 승인기관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해당 계획 또

는 사업,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할 지자체장 추천자 등 10명 내외로 구성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승인등을 받지 아니 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 제27조 및 제44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협의기관(이하 "협의기관"이라 한다)의 장,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2.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 3의2. 협의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4.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 4의2.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1명 이상
5.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 가.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 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 다. 보건 등 건강영향평가 전문가(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해양 관련 전문가[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에 「연안관리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沿岸陸域)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관련 법

(1) 환경영향평가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14232호, 2016.5.29., 일부개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00호, 2017.5.30., 일부개정]

환경영향평가법[시행2017.5.30.][법률제14232호,2016.5.29.,일부개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시행2017.7.26.][대통령령제28211호,2017.7.26.,타법개정]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시행2017.5.30.][환경부령제700호,2017.5.30.,일부개정]

행정규칙

사후환경영향조사서제출시기[시행2015.3.20.][고시제2015-35호,2015.3.20.,제정]

환경영향평가사자격시험응시수수료[시행2017.5.30.][고시제2017-72호,2017.4.10.,일부개정]

환경영향평가사자격증재발급수수료[시행2014.7.4.][고시제2014-98호,2014.7.4.,제정]

환경영향평가서등작성등에관한규정[시행2016.7.8.][고시제2016-131호,2016.7.8.,일부개정]

행정규칙

(환경부)친환경댐건설을위한환경영향평가지침[시행2016.3.14.][훈령제1207호,2016.3.14.,일부개정]

친환경댐건설을위한환경영향평가지침[시행2016.3.14.][훈령제678호,2016.3.14.,일부개정]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운영지침[시행2016.1.14.][예규제572호,2016.1.14.,일부개정]

환경영향평가서등에관한협의업무처리규정[시행2015.11.30.][예규제566호,2015.11.30.,일부개정]

골프장의중점환경영향평가항목및평가방법등에관한규정[시행2016.1.1.][고시제2015-200호,2015.10.7.,타법개정]

환경영향평가사교육훈련수수료[시행2014.7.1.][고시제2014-99호,2014.7.1.,제정]

환경영향평가서등작성등에관한규정[시행2016.7.8.][고시제2016-131호,2016.7.8., 일부개정]

환경영향평가업등록등의업무위탁기관지정고시[시행2017.2.6.][고시제2017-33호,2017.2.6., 전부개정]

환경영향평가업자의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시행2017.6.29.][고시제2017-122호,2017.6.29., 일부개정]

행정규칙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운영지침시행2016.1.14.][예규제572호,2016.1.14., 일부개정]

환경영향평가등의대행비용산정기준시행2014.5.23.][고시제2014-86호,2014.5.23., 일부개정]

환경영향평가업자의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시행2017.6.29.][고시제2017-122호,2017.6.29., 일부개정]

자치법규

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시행2014.1.3.][조례제3714호,2014.1.3., 일부개정]

경상남도환경영향평가조례[시행2016.11.3.][조례제4207호,2016.11.3., 일부개정]

광주광역시환경영향평가조례[시행2012.11.1.][조례제4177호,2012.11.1., 일부개정]

대전광역시환경영향평가조례[시행2016.6.10.][조례제4730호,2016.6.10., 일부개정]

부산광역시환경영향평가조례[시행2015.9.13.][조례제5199호,2015.8.12., 전부개정]

서울특별시환경영향평가조례[시행2015.10.8.][조례제6016호,2015.10.8., 타법개정]

인천광역시환경영향평가조례[시행2014.5.26.][조례제5383호,2014.5.26.,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조례[시행2017.7.20.][조례제1885호,2017.7.20., 일부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서는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인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북¹²⁾, 경남, 제주, 경상북도 문경시¹³⁾가 자치법규를 설치·운영 중임

12) 경상북도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규칙

13) 문경시 폐광지역 환경영향평가위원회 규칙

2.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분석

1) 목적 및 변천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 성별영향분석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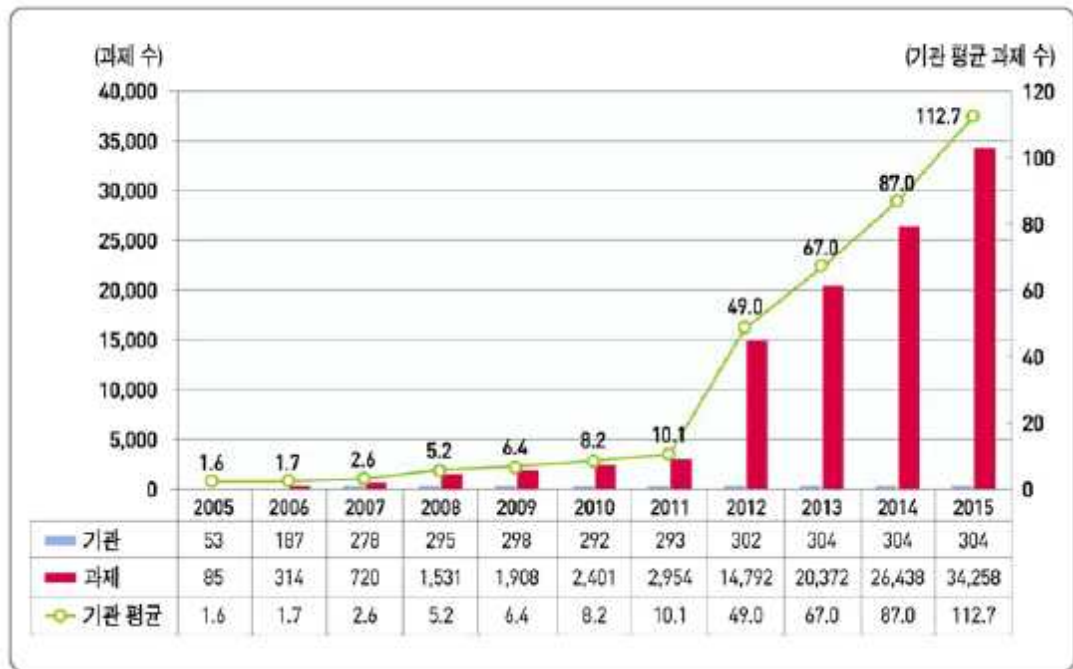
제2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에 따르면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임”(여성가족부, 2017: 3)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법적 근거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임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여성가족부, 2017: 3)
 -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 체계 확립
 -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실행으로 국민 만족도 제고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다음과 같이 점진적으로 확대·발전되고 있음(여성가족부, 2017: 4)
- 2002년에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조항 마련
 - 2004년에 9개 기관 10개 과제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하였음
- 2005년에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사업’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함

- 2006년에 기초자치단체를 대상기관으로 포함함
- 2007년에 시·도 교육청을 대상기관으로 포함함
-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 대상정책을 사업에서 제·개정법령, 계획, 사업으로 확대함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제도화함
-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 및 시행
 -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공표제 도입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에 ‘시행중인 법령’도 포함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 및 시행
 - 민관협력체계 구축
 -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
-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
 -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 마련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의견표명 제도 도입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무담당자 지정 근거 마련
 -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정 범위 명확화
-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확산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과제 수를 늘이고 공무원 교육을 활발하게 수행하면서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자 노력해 왔음. 그 결과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대상 기관과 과제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II)

[그림 3-6]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변화 추이

2) 대상 및 수행방식

(1) 개요

-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대상 정책은 다음과 같음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음
 - 중앙행정기관: 부·처·청·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
-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평가주체, 평가대상, 평가시기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음(문화체육관광부, 2016: 44)
- 평가주체에 따른 분류
 - 자체평가: 일반성별영향분석평가(중앙행정기관(부·처·청, 위원회),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

- 전문평가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대상에 따른 분류
 - 일반성별영향분석평가 : 법령에 대한 평가 / 계획에 대한 평가 / 사업에 대한 평가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에 따라 양성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정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전문 연구자가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제도임¹⁴⁾
- 평가시기에 따른 분류(김돌순, 2014)
 - 연중 수시 : 법령 및 중장기 계획에 대한 평가
 - 특정 시기 : 사업에 대한 평가 : 중앙행정기관은 4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는 8월 말까지 평가서 제출
 - 사업 분석평가 추진일정을 특정한 시기로 하는 이유는 성인지예산 제도와의 연계를 위해서임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선정기준뿐만 아니라 제외사업을 고르기 위한 제외기준을 함께 제시하고 있음
 - 아래 <표>의 선정기준에 따라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체크리스트만,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대상인 경우에는 체크리스트와 평가서를 함께 작성해서 제출함

<표 3-6>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대상과제 선정기준

대상사업		비고
법령	제외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선정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 -인적 대상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 -시설설치·개선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
사업	제외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
	선정	-인적 대상 사업 -시설설치·개선 사업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자료: 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성별영향분석평가 연계를 위한 실증적 연구(2015)

14)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p.3

(2)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중앙행정기관은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대하여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분석평가 실시함
- 지방자치단체는 제·개정하는 자치 법규(조례·규칙)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전에 분석평가 실시함
-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 법령의 경우 체크리스트만 작성해서 제출하며, 분석평가서 작성대상 법령의 경우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함
- 분석평가서 작성대상 법령의 경우에는 법령안의 부처 및 부서 협의 시 성평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를 작성함.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에게 법령안을 첨부하여 제출함

법령명					
구분	제정()		개정()		
형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성 명	
				전화번호	
	담당자	부서명		성 명	
				전화번호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협의		~	(일간)	
	입법예고		~	(일간)	
	법제처 심사*		~	(일간)	
붙임자료	1. 법령(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 제·개정 법령안 전체가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

구 분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작성 제외 법령	<input type="checkbox"/>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 예) 기구, 직제, 기록물, 물품, 수당, 감사, 문서 및 관인, 신분증, 기록물에 관한 법령, 수수료 징수, 민원사무 처리기간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벌금,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법령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전시 관련 법령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제·개정되는 법령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국호·국기·연호, 전례, 국경(정부기념)일, 의전에 관한 법령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행정절차, 소송절차, 재판에 관한 법령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법령시행(일), 효력에 관한 법령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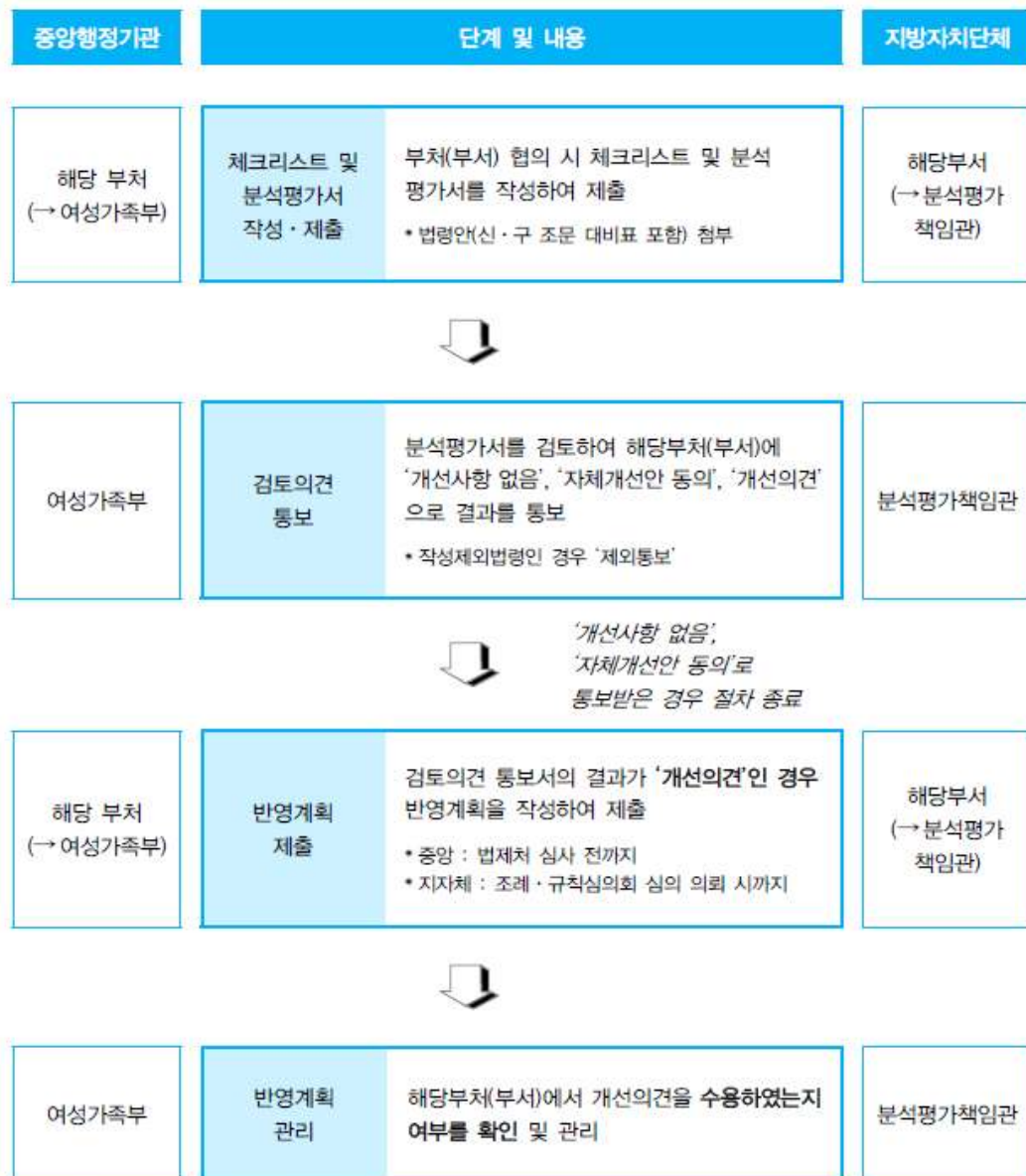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는 법제담당 등 기관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 2017년 알기 쉽게 정비할 계획인 법령으로 순수하게 표현만 정비하려는 법령인 경우

자료: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2017)

[그림 3-7]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법령) 샘플

- 제출된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처/부서에 통보함
- 법령의 경우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으로 구분하여 통보하고, 검토의견 통보서의 결과가 ‘개선의견’인 경우 해당부처/부서는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함
 - (개선사항 없음) 제출된 분석평가서의 개선의견 없음에 동의한다는 의견 → 분석평가 절차 종료
 - (자체개선안 동의) 제출된 분석평가서의 자체개선안에 동의한다는 의견 → 분석평가 절차 종료
 - (개선의견) 성평등을 위해 제·개정 법령안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
-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책임관이 ‘반영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개선의견 수용·불수용·일부수용·중단’으로 표시하고, 개선의견이 반영되어 법령안이 제·개정 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함



※ (여성가족부) 분석평가 각 단계에서 컨설팅·교육 지원

자료: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2017)

[그림 3-7]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3)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중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계획에 대한 추
진실적을 점검함
- 각 기관은 해당 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분

석평가를 실시함

-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 계획은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으로 체크리스트만 작성·제출함

○ 분석평가서 작성 대상인 경우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를 작성·제출함

- 신규 수립인 경우 ‘계획 확정 3개월 전, 위원회 상정 60일 이전 또는 부처(부서) 협의 전까지’ 중 빠른 시기에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함
- 재수립인 경우 재수립 시작 단계 2개월 전 전년도 계획에 대하여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함

○ 검토의견 통보와 반영계획 제출 및 반영계획 관리 절차는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동일함

계획명					
구분	신규 수립()		재수립()차 (년 ~ 년)		
근거 법령					
소관 부서	주관기관 및 부서	기관명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관계기관	기관명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기관명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기관명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계획 수립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 (일간)			
	계획안 마련	~ (일간)			
	위원회 상정 및 의결	~ (일간)			
붙임 자료	계획(안) 및 요약본				

선정 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작성 제외 계획	<input type="checkbox"/>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기본계획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년 월 일

자료: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2017)

[그림 3-8]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계획) 샘플

(4)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함
-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예산서 작성 전에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서 제출함
 - 중앙 : 4월말까지, 지자체 : 8월말까지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국정과제, 연두업무보고, 공약·지시사항 등 해당기관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중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선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8년 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선정하거나, '17년 예산서 중 계속사업을 대상으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선정함
-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서 각 부처 실무담당자는 아래의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주로 선정함

선정 기준	해당 여부
▶ 수혜집단에서 성별격차가 발생하는 사업 <input type="checkbox"/> 정책(사업)의 대상집단을 성별로 구분할 수 있는 사업인가? <input type="checkbox"/> 정책(사업) 수혜 정도에서 성별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업 <input type="checkbox"/>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인가? - 고용, 복지, 안전, 시설설치, 개선 사업 * 예술·문화활동 지원, 생활체육활성화, 폐기물 등 자원 재활용사업, 혁신도시 및 뉴타운 건설사업, 신도시조성사업,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빈곤층 자원사업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수혜대상 범위가 넓고 중요 정책(사업) <input type="checkbox"/> 기관의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가? <input type="checkbox"/>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가? <input type="checkbox"/> 기관장의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자료: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2017)

[그림 3-9]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기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함
- 검토의견 통보와 반영계획 제출 및 반영계획 관리 절차는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동일함

사업명	<input type="checkbox"/> 비예산사업				
	<input type="checkbox"/> 단위사업		* 분석평가 대상이 단위사업인 경우 단위사업명만 작성		
	<input type="checkbox"/> 세부사업		* 분석평가 대상이 세부사업인 경우 단위사업, 세부사업명 모두 작성		
	<input type="checkbox"/> 내역사업		* 분석평가 대상이 내역사업인 경우 단위, 세부, 내역사업명 모두 작성 * 내역사업으로 대상 선정은 중앙행정기관만 해당 (지자체는 세부사업까지만 선택가능)		
구분1	신규사업 () 계속사업 ()				
구분2	분석평가서 작성 신규 과제 () 기존 분석평가서 작성 과제 () * 2012년 이후 1회라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한 경우 '기존 분석평가서 작성 과제'에 해당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담당자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사무 구분 * 지자체만 해당	<input type="checkbox"/> 국가위임사무 <input type="checkbox"/> 시·도 고유사무 <input type="checkbox"/> 시·도 위임사무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고유사무				
정책 분야	<input type="checkbox"/> 공공질서 및 안전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교통 및 물류 <input type="checkbox"/> 농림 <input type="checkbox"/> 문화체육관광 <input type="checkbox"/> 보건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 <input type="checkbox"/> 산업·통상·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일반공공행정 <input type="checkbox"/> 지역개발 <input type="checkbox"/> 통일·외교 <input type="checkbox"/> 해양수산 <input type="checkbox"/> 환경 * 중복선택 불가: 선택분야에 따라 GIA시스템 상 분석평가서 작성시 맞춤형 점검포인트 제시				
선정근거 * 중앙행정 기관만 해당	<input type="checkbox"/> 국정과제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대통령지시사항 * 4개 항목 중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 * 성인지예산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세부사항 선택		<input type="checkbox"/> 성인지예산사업 <input type="checkbox"/> 성과목표 미달성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기타		
추진근거	* 해당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법, 규정, 지침 등 기재				

선정 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작성 제외 사업	<input type="checkbox"/>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예) 여성농어업인 육성, 여성과학 기술인 육성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추진하는 사업이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예'로 체크하며, 선정 기준에 해당 하는 사업의 주요 내용 작성

년 월 일

자료: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2017)

[그림 3-10]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사업) 샘플

3) 평가지표

○ 제·개정 법령의 분석평가 지표는 성별 구분 및 고정관념, 성별 특성, 성별균형참여,

성별통계에 대해 분석평가 항목으로 구성됨

- 성별 구분 및 고정관념: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이 있습니까?/특정 성별을 명시하는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제·개정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법령상의 특정 조치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 성별 특성: 제·개정 법령안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반영 하였습니까?
- 성별균형참여: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 성별통계: 제·개정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분석평가 항목	점검 point
I.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p>1-1.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이 있습니까? 예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과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을 다르게 판정하는 부상의 등급 판정 규정이나 혼·포장 수여 시 남성과 여성의 훈장 크기를 달리하는 규정</p> <p>1-2. 특정 성별을 명시하는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예 금융지주회사에 의해 지배받는 회사를 '자회사, 손자회사'로 표현하는 규정은 '자-손자'로 표현되는 부계혈통주의에 입각한 우리 사회의 성별고정관념을 드러냄</p> <p>1-3. 제·개정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예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으로 상시여성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경우 육아의 책임은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라는 고정관념 반영</p> <p>1-4. 법령상의 특정 조치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예 불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신설하면서 여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남성 불임에 대한 고려가 없을 뿐 아니라 불임치료를 부부가 함께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산하는 여성만을 고려한 것으로 남녀근로자 모두가 대상이 되어야 함</p>
II. 성별 특성	<p>2. 제·개정 법령안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반영 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상 정책 수혜·수급 요건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였습니까? - 시설 설치, 시설 개선 사업 등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였습니까? - 통계나 실태조사 시 성별에 따른 고려가 있는지 점검하였습니까?
III. 성별 균형 참여	<p>3-1.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과정에서 특정 성의 참여가 배제되어 왔다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참여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였습니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p> <p>3-2.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등의 위원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의사결정과정에 한 성이 결과적으로 배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p>
IV. 성별 통계	<p>4. 제·개정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함(「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p>

자료: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2017)

[그림 3-11]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평가 지표(법령)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서(법령)

법령명										
구분	제정() 개정()									
형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담당자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협의	~ (일간)								
	입법예고	~ (일간)								
	법제처 심사*	~ (일간)								
붙임자료	1. 법령(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p>■ 제·개정 목적</p> <p>○ 해당 법령의 제·개정 목적을 간략하게 기술</p> <p>■ 제·개정 주요 내용</p> <p>○ 해당 법령의 주요 제·개정 내용을 기술</p>										
분석 평가 항목	점검 포인트	관련조항 유무	점검결과							
Ⅰ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	<input type="checkbox"/> 1-1.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구분 조항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조항을 기술							
	<input type="checkbox"/> 1-2. 특정 성별을 명시하는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모르겠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조항을 기술하고, 수정안 제시 <table border="1"> <tr> <td>제·개정안</td> <td>수정안</td> </tr> <tr> <td></td> <td></td> </tr> <tr> <td></td> <td></td> </tr> </table>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 * 필요시 컨설팅 요청			제·개정안	수정안			
제·개정안	수정안									
<input type="checkbox"/> 1-3. 제·개정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 니까? *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근로, 생계, 출산, 부양 등과 관련된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지 점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모르겠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조항을 기술하고, 수정안 제시 <table border="1"> <tr> <td>제·개정안</td> <td>수정안</td> </tr> <tr> <td></td> <td></td> </tr> <tr> <td></td> <td></td> </tr> </table>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			제·개정안	수정안				
제·개정안	수정안									

자료: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2017)

[그림 3-12]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서(법령)

- 계획의 분석평가 지표는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를 대상으로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성별 요구도, 성별 형평성,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 5개의 분석평가

항목으로 구성됨

- 비전과 목표: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 전략 및 중점과제: 성별요구도(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성별 형평성(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법령 반영 계획/사업(과제) 반영 계획)

분석평가 항목			점검 point
I. 비전과 목표	1.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①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및 성별로 다른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
II. 전략 및 중점과제	2. 성별 요구도	② 남녀의 사회문화적· 경제적·신체적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 • 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 •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
	3. 성별 형평성	③ 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성별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혜 발생 (자원배분 포함)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 하였는지 점검(성별 형평성은 남녀 수혜자의 비율이 단순하게 50:50이 되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음)
	4.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 개선 및 환류)	④ 법령 반영 계획	•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의 분석평가 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⑤ 사업(또는 과제) 반영 계획	•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의 분석평가 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 또는 과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계획에 반영 등

* 비전과 목표는 계획의 추진목표, 발전목표 등을 의미하며, 전략 및 중점과제는 전략과제별 추진계획, 전략 및 이행 과제 등을 의미

자료: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2017)

[그림 3-13]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평가 지표(계획)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서(계획)

○ 계획명 :

I. 개 요

■ 비전과 목표

○ 해당 계획의 추진목표, 발전목표 등을 기술

■ 전략 및 중점과제

○ 해당 계획의 전략과제별 추진계획, 전략 및 이행과제 등을 기술

II. 비전과 목표

※ 계획 수립 시 비전과 목표가 ①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②성별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점검한 다음 '비전과 목표'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여 수립계획에 반영

1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 하단 점검포인트 상 해당사항 있을 시 성별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임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1.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점검포인트

- ✓ 해당 계획은 인적대상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성별영향 발생가능성이 있는가?
- ✓ 시설설치·개선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성별영향 발생가능성이 있는가?
- ✓ 기타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성별영향 발생가능성이 있는가?

■ <분석 근거>

○

Ⅲ. 전략 및 중점과제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① 성별 요구도	1.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② 성별 형평성	2. 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input type="checkbox"/> 반영완료 <input type="checkbox"/> 추후개선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있음: 계획에 포함된 전략 및 중점과제들 중에 남성과 여성이 처해 있는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정책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략 및 중점과제가 있으며, 따라서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정책요구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 '있음'에 체크
※ 해당 계획이 의도적으로 성차별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님

* 없음: 계획과 관련하여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으면 '없음'에 체크

√ '사회문화적 차이':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남녀의 인식 및 경험 등의 차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경향이 있음

√ '경제적 차이': 남녀의 경제적 위치(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여성은 남성보다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경력단절 문제 심각

√ '신체적 차이':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성별에 따라 평균수명 또는 특정질병에 대한 발병·유병률이 상이해 보건·안전 등의 영역에서 성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반영완료: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이미 고려하여 전략 및 중점과제에 반영하였다면 '반영완료'에 체크

** 추후개선: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고려하여 전략 및 중점과제에 수용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면 '추후개선'에 체크

** 해당없음: 계획에 포함된 전략 및 중점과제 관련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어, 성별에 따라 다른 정책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면 '해당 없음'에 체크

① 성별 요구도 ※ 해당 항목에만 작성하거나 통합 작성 가능

1-1.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1-2. 남녀의 경제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1-3.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② 성별 형평성

2. 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분석 근거>

※ 계획 수립 시 성별 요구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혜 발생(재원배분 포함)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계획을 도출

- 수혜에 있어서의 성별 형평성은 단순히 남녀 비율이 50:50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성별 특성을 반영한 수혜발생을 의미

○ 관련 통계 : _____ * (계획 관련 통계를 추가하여 작성 가능)

	2015년		2016년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전체	명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명(%)

* 통계출처 :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자료: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2017)

[그림 3-14]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서(계획)

- 사업의 분석평가 지표는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대한 6개의 분석평가 항목으로 구성됨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사업의 성별 요구도(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사업의 성별 요구 차이), 사업의 성별 형평성(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법령(법령 반영 계획), 예산(성인지 예산 반영 계획), 사업(사업내용·수행방식 반영 계획)

분석평가 항목			점검 point
I.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1. 사업의 성별 요구도	①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사업의 성별 요구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 • 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 •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사업에 대해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
	2. 사업의 성별 형평성	②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수혜자 성비가 사업 대상자와 비교해 형평한지 점검 • 성별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수혜 발생에 있어서 성별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성별 형평성은 남녀 수혜자의 비율이 단순히 50:50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③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배분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사업 대상자의 성비를 고려한 예산배분, 성별로 특수한 요구를 고려한 예산 편성 등)
II.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정책개선 및 환류)	3. 법령	④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예시) 성 불평등한 훈령 내용 개정 등
	4. 예산	⑤ 성인지 예산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5. 사업	⑥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내용·수행방식(기타 제도 개선 포함)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에 반영 등 (예시) 성별 통계 구축 등

자료: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2017)

[그림 3-15]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평가 지표(사업)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서(사업)

※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분석평가시스템에서 작성 시 분석평가 항목에 대해 분야별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점검 포인트가 제시됨 → 점검 포인트를 참조하여 분석평가서 작성

○ 사업명 :

I. 개 요

■ 사업 목적

○ 사업계획서 상에 기재된 사업목적 기재

■ 추진 근거

○

■ 주요 사업 내용

○ 사업계획서 상에 기재된 주요 사업 대상, 세부 사업명 및 사업 내용 등 기재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근거	예산		
		2016년(A)	2017년(B)	증감(B-A)
	<input type="checkbox"/> 회계* (국비 ____%, 지방비 ____%) <input type="checkbox"/> 기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해당

II.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① 성별 요구도	1.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②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input type="checkbox"/> 반영완료 <input type="checkbox"/> 추후개선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input type="checkbox"/> 반영완료 <input type="checkbox"/> 추후개선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 있음: 남성과 여성이 처해 있는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정책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있고,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정책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 '있음'에 체크
 - ※ 해당사업이 성차별을 한다는 의미가 아님
- * 없음: 사업 관련해서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으면 '없음'에 체크
- * '사회문화적 차이':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남녀의 인식 및 경험 등의 차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경향이 있음
- * '경제적 차이': 남녀의 경제적 위치(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여성은 남성보다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경력단절 문제 심각
- * '신체적 차이':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성별에 따라 평균수명 또는 특정질병에 대한 발병·유병률이 상이해 보건·안전 등의 영역에서 성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반영완료: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이미 고려하여 사업에 반영하였다면 '반영완료'에 체크
- ** 추후개선: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고려하여 사업에 수용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면 '추후개선'에 체크
- ** 해당없음: 사업과 관련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어, 성별에 따라 다른 정책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면 '해당 없음'에 체크
- ** 사업수혜 및 예산배분에 있어서의 성별 형평성은 단순히 50:50의 남녀 비율이 아니며,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자원배분을 의미
(예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공적연금 수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므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성별 요구도를 반영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 성별 요구도 ※ 해당하는 항목만 작성하거나 통합하여 작성 가능

1-1.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 <분석 근거>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자료: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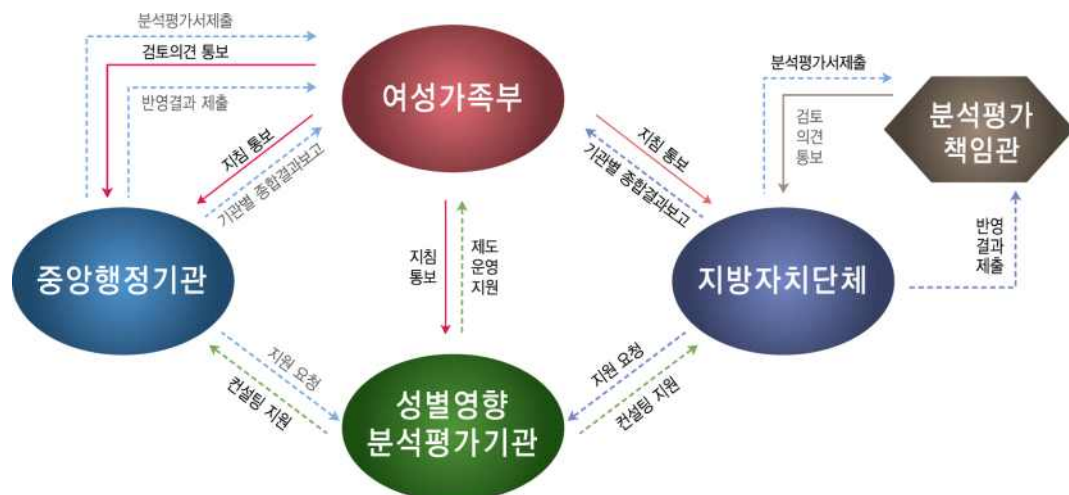
[그림 3-16]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서(사업)

4) 추진체계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전반적인 운영 추진체계는 여성가족부가 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

하면서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중앙 및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 중앙센터 1개와 지역센터 16개를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전문가 지원체계가 강화되었음.¹⁵⁾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은 공무원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지원함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계획·사업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분석평가서를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개선을 이행하고 한 해 동안의 제도 운영 결과를 종합하여 여성가족부에 보고하고 있음



[그림 3-17]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체계

출처 : 여성가족부(2016).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 분석평가제도 운영 및 지원 전반 총괄
- 평가운영: 평가 지침 및 매뉴얼 개발·보급
- 제도개선: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분석평가서 검토 및 의견 통보, 개선안 검토
- 평가종합: 기관별 분석평가 추진결과 및 정책개선 이행결과 종합보고
- 평가지원: 중앙 및 16개 지역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지정·운영, 공무원 대상 분석평가 컨설팅·교육 지원
- 특히 2014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2조를 개정하면서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분석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음. 이에 따라 2015년 지침에는 여성가족부의 역할로서 “종합분석보고서 공표”를 하는 것이 추가되었음

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성평등 향상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가이드 개발. pp.44-47.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 대상과제 선정 및 분석평가서 작성
- 자체 정책개선 추진(반영계획제출)
- 소속 공무원 중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기관의 각 부서에서 분석평가책임관에게 평가서 제출

○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¹⁶⁾

-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연구기관을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17조). 지정기간은 3년 이내임
-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총괄 및 관리 지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사업 총괄지원 및 컨설턴트 관리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개선 지원
- 국내외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전략 개발 지원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대국민공모 포함) 및 연구전략 개발 지원
-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관계자 워크숍 및 포럼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지원
-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선정과 정책개선추진 컨설팅 지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교육 지원
- 지역별 컨설턴트 운영·관리 및 역량강화 지원
-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DB 구축 및 관리운영 지원
- 지역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자료 발간
-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발전 포럼 개최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연구개발
- 지역별 성별통계 관리 및 사업수행, 실적보고 등
-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6) 여성가족부(2017).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 지정 대상으로는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 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¹⁷⁾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현재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정책 연구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성 주류화 제도를 연구
- 2008년 여성부로부터 ‘정책의 분석·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 2012년 여성가족부의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 재지정 받음
- 성인지정책 연구실 산하에는 성별영향평가·통계센터와 성인지예산센터가 있음
- 성인지정책연구실에는 총 24명의 전문인력이 있음. 성별영향평가·통계센터 소속으로 13명, 성인지예산센터 소속으로 9명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음

○ 분석평가책임관¹⁸⁾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함(제14조)
- 분석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속실장·국장(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과장·담당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을 분석평가 책임관으로 지정(제12조)
- 분석평가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무를 총괄함
-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 결과의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홈페이지
<http://gia.kwdi.re.kr/center/page.do?cg=centerHistory>

18) 여성가족부(2017).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 그 밖에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함. 실무담당자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업무를 보좌하여 기관별 분석평가를 운영함



[그림 3-1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직도(2017년 10월 7일 기준)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¹⁹⁾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와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로 구성됨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은 다음과 같음

19) 여성가족부(2017).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분석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분석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령」 제10조(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법제처에 소속된 제12조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
2.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8명 이내

5) 성별영향분석평가 시사점

○ 대상과제의 선정 및 체계적 관리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선정해야 하며, 특정분야(복지)에 편중된 대상사업을 다양화할 필요가 제기됨
- 문화영향평가의 경우에도 평가의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 사업도 점진적으로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중심에서 전 부처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8)

○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 유도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경우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분석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적극 참여할 필요가 제기됨. 왜냐하면 민관협력에 기초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가 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임
- 문화영향평가에서도 가능한 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공무원, 전문가, 문화단체

활동가, 의회의원이 상호 협력하여 평가에서 제시된 정책제언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평가 결과 환류 통한 정책 개선 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 경험을 통해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평가결과와 성평등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은 성인지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제기됨
- 문화영향평가의 경우 현재 평가보다 컨설팅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수기관’의 유형이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문화영향평가의 취지에 대한 공감도와 협력도가 우수한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향후 평가가 본격화될 경우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추진체계 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시행 결과 담당부서의 인력과 권한 확대, 기관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 직위제 도입,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인력과 예산 확대 등의 추진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현재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며, 연구원내에 공식적인 조직체계가 없는 ‘문화영향평가센터’가 존재하는 취약한 조직형태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중앙문화영향평가센터의 제도적 위상 제고가 요구됨

○ 공무원 등 정책행위자의 역량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행위자들의 여성정책 역량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 성인지적인 관점을 가진 공무원과 전문가 집단, 양성평등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강한 여성단체와 시민단체의 관심과 모니터링 활동이 병행될 때, 양성평등과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제도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임(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8)

3. 고용영향평가제도 분석

1) 목적 및 변천

□ 목적²⁰⁾

- 국가 및 자치단체의 주요 사업, 정책, 법, 그리고 제도 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고용친화적인 추진을 유도
- 국내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채택하여 일자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산업·복지 등 정부정책 전반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영향평가’를 도입
- 정보기술 발달과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제 성장은 확인되지만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의 우려 발생.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는 고용창출을 국가 핵심과제로 정하고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계 정책을 시행

□ 고용영향평가의 주요 변천 과정

- 2006년부터 고용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기초연구가 시작되었고, 2009년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사업 및 법·제도 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 하고 이를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 할 것을 법제화 함²¹⁾
- 2010년 지역전략산업 진흥,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4대강 사업 등 7개 과제를 중심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하였고,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부터 고용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
- 2014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사전 고용영향평가가 도입되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직권에 의한 평가대상 정책 선정제도가 도입됨

2) 대상 및 수행방식

□ 대상

- 대상 1: 중앙행정기관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정책

20) 인하대학교(2013), 고용영향평가 강화방안 연구-고용영향평가 지침-, 고용노동부

21)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음

- 대상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으로서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한 정책
- 대상 3: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대상 4: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시행령 제22조 제4항)
 -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²²⁾
 - 국회가 의결을 통해 고용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한 정책

□ 수행방식

- 관련 법에 따라 고용영향평가를 대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2013년 위탁기관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영향평가센터로 지정되어 평가 업무를 대행 중
- 대부분의 평가 과제는 내부에서 책임을 맡아서 수행하며 2-3명의 객원연구원을 초빙하여 연구진행. 일부의 경우는 공개입찰을 통해 외부의 연구 시행 기관을 선정하여 평가 수행 위탁. 우선 내부 인력에서 평가 대상 과제를 선공지 하여 연구 수행 지원을 받고, 외부위탁이 불가피한 전문분야의 과제의 경우 위탁 수행. 외부위탁은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가 시작되면 연구자와 고용영향평가센터, 시행기관 등 평가 수행 주체 및 피평가 기관들의 상호협조 하에 평가 진행

22)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사가 포함된 사업,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과학기술기초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대규모사업

[표 3-7] 평가 진행 단계별 수행 주체 및 파트너

평가 진행 단계			평가 수행 주체 및 파트너
① 기초 조사 및 전체 일개 구성	주무부처 연락망 구성		연구자
	주무부처 Brain storming		주무부처/시행부처(주로 산하기관)
	평가 절차 및 방법 확정		연구자
	사업 계획 1차 분석		연구자/시행부처 및 사업자
	평가보고서 1차안 집필		연구자/주무부처(일부 작성)
② 양적 평가	직접고용의 추정	사업계획서 분석	연구자/시행기관(사업처)
		직접고용추정	연구자
	간접고용의 추정	사업의 분해	연구자
		투입벡터의 추정	연구자/시행기관(사업처)
		산업연관분석	연구자/KLI
	평가보고서 1차안 집필		연구자
③ 질적 평가	질적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질적 평가 항목 DB search	연구자/KLI
		질적 평가 항목 FGD-1	주무부처/시행처
		질적 평가 항목 FGD-2	경험 기업
		질적 평가 항목 + α 실태조사	경험 및 관련 기업
	질적 평가 분석		연구자
	④ 평가 결과 결합 및 정책 권고 도출	정책 권고안 도출	
보고서 완성		연구자	

출처: 인하대학교(2013), 고용영향평가 강화방안 연구

□ 선정 방식

- 고용노동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고용정책심의회 위원, 일반국민, 국책연구기관, 고용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의 의견수렴을 통해 평가대상사업 풀을 구축. 사업 풀이 구축 되면 고용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안) 마련(송수중·홍준형, 2012)
- 2017년도부터는 고용관련 주요 이슈들을 산업별로 취합하여 평가대상을 선정한 ‘산업별 고용영향평가 과제’, 노동시장 구조와 관련된 제도를 평가하는 ‘초산업 공통분야 고용영향평가 과제’, 기재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280여개의 일자리과제 중 일부를 선정하여 심층평가하는 ‘주요일자리과제 고용영향평가’를 평가대상과제로 선정
 - ‘산업별 고용영향평가 과제’의 경우 평가전담연구기관에서 평가 대상 과제를 약 2달 간 스크리닝 하고 최종 선정
 - ‘주요일자리과제 고용영향평가’의 경우 부처별로 일자리 사업별로 자체평가를 실시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일부 일자리 사업의 경우 전담기관인 센터에서 심층

평가로 진행

-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과제도 여전히 평가 대상 과제에 포함되지만 지자체의 평가 요청이 적극적이지 않은 실정

○ 최종적으로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하되 평가대상 선정은 해당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정도, 평가의 가능성과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시행령 제22조 제1항)

〈표 3-8〉 2017년 고용영향평가 진행과제 목록

구분	대상 과제
산업별 고용영향 평가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회계·사무: 장시간 노동 및 불안정 고용구조 개편의 고용효과 • 금융·보험: 자산관리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체계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 교육·자연·사회과학: 기간제 교사 차별 해소 및 채용 제한의 고용효과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소방·경찰·교정공무원 노동시간 단축, 새로운 교대제 개편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 보건·의료: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의 고용효과 • 사회복지·종교 : 바우처제도 개선 등 간병서비스 수급시스템 안정화의 고용효과 • 문화·예술·디자인 : 콘텐츠분야 프리랜서형 일자리 사회보험 구축의 고용효과 • 운전·운송 : 철도산업의 하청구조 개선과 정규직 일자리 확대 • 영업판매 : 파견근로 개선 통한 고용개선 효과 • 경비·청소 :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및 고용유지 방안 •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 영세미용사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 형태의 영세업체 공동체 브랜드 구축의 고용효과 • 음식서비스 : 프랜차이즈점 확산이 음식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 • 건설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건설현장의 일자리 나누기 • 기계 : 원하청 관계 개선 관련 제도의 영향평가 • 조선 : 일자리 희망센터를 통한 재훈련 후 전문건설플랜트 산업(또는 건설 산업) 전직 지원의 고용효과 • 철강 : 철강산업 24시간 연속공정에서 교대제 개편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창출 • 화학(석유, 플라스틱) : 원료시장의 경직성에 따른 비싼 원료비 절감에 의한 고용효과 • 화학(정밀화학, 바이오) : 바이오 산업 분야 규제 완화의 고용효과 • 섬유·의복 : 기업집적화를 통한 봉제업 신규인력 유입의 고용효과 • 전기에너지 :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서 의무공급량 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전자 : 기존산업 분야 기술인력 新성장산업 이동경력개발경로 구축에 의한 고용효과 • 정보 : 공공SW 제값받기 관행 정착 및 야근, 휴일 근무 등 장시간 근로 문제해결의 고용효과 • 방송통신: 방송통신산업 공정거래 정착의 고용효과 • 식품가공: 식품가공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간 공정거래 관행 정착의 고용효과 • 인쇄·목재·가구·공예: 공예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의 고용효과 • 환경·에너지·안전: 산업 안전 인력 수요의 정확한 파악을 통한 고용효과 산출

초산업 공통분야 고용영향 평가 과제	• 농림어업 : 귀농정책 고용영향평가. • 원·하청 상생협력제도 고용영향평가 • 외국인 취업비자 제도 고용영향평가 • 고용친화적 조세제도 고용영향평가 • 임금격차해소 및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여신정책 고용영향평가
지자체 요청과제 고용영향 평가	• 대구 신성장 산업 육성전략
주요 일자리과 제 고용영향 평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 리츠 활성화 방안 • 신산업 투자 활성화 • 에너지신산업 육성 • SW 신산업 육성 • 유망환경기업육성 • 해양수산 분야 창업 활성화

3) 평가지표

□ 평가지표/평가방식²³⁾

- 2013년 다양한 형태의 고용영향평가 선정 과제의 공통적인 평가 방법론 및 평가 골격을 제시하는 용도로 ‘고용영향평가지침’을 수립
- 평가지침 상 고용영향평가의 핵심 내용은 다음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

〈표 3-9〉 고용영향평가 내용 구성

평가 핵심 구성	내용
기초 조사 및 전체 열개 구성	평가 대상의 고유 목적 및 재정 투자를 포함한 시행 계획 파악 해당 사업의 고용연계 가능성 일차적 분석
양적 평가	고용효과의 양적 측정 혹은 추정
질적 평가	고용의 질적 효과 측정
평가 결과 및 정책 권고	양적·질적 평가 결과의 결합 및 고용친화적 정책 권고 제시

출처: 인하대학교(2013), 고용영향평가 강화방안 연구

- 양적 및 질적 고용효과 측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분석절차를 지침서 상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
- 고용효과 측정 시 고용영향평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전적 측정 시점을 적용. 이미 시행중인 계속성 사업, 정책, 법, 제도의 경우 사후적 평가가 가능하지만

23) 인하대학교(2013), 앞의 책, 고용노동부

이들 평가의 목적은 향후 진행될 사업, 정책, 법, 제도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해 개선 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에도 원칙적으로 사전 고용영향평가의 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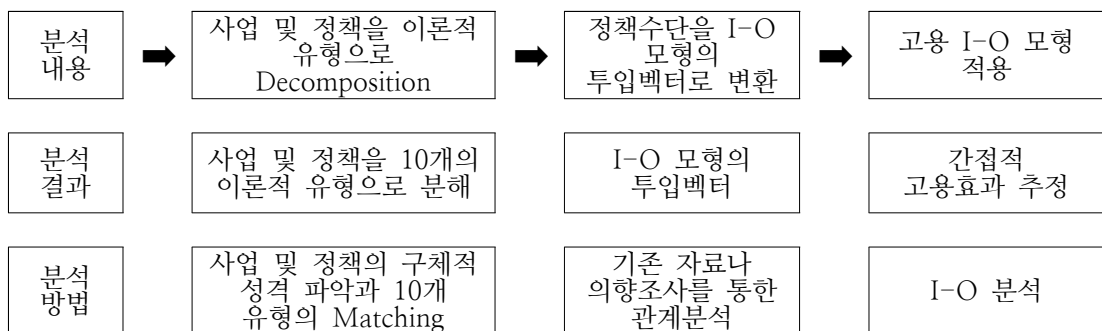
- 양적 고용효과는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로 구분하여 측정하며, 양적 효과 측정 시 가능하다면 고용효과와 함께 취업효과를 모두 측정

〈표 3-10〉 양적 고용효과 측정의 범위

	직접효과	간접효과
고용효과	측정의 대상	측정의 대상
취업효과	일반적으로 측정 어려움	측정의 대상

출처: 인하대학교(2013), 고용영향평가 강화방안 연구

- 고용의 직접 효과란 사업, 정책, 제도 그리고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고용효과로 가용한 관련 자료에 따라 고용효과를 추정
- 고용의 간접 효과란 직접 효과를 제외한 국가 경제 내에서 무기한 발생하는 효과를 규정한 것으로 평가지침서에 따라 I-O 모델을 적용하여 고용의 간접 효과 측정



출처: 인하대학교(2013), 고용영향평가 강화방안 연구

[그림 3-19] 간접 고용효과의 측정 절차

- 질적 고용효과 분석 시 정책 개선의 권고 제안이 함께 이루어짐
- 고용확대, 고용의 질적 제고, 원활한 인력수급, 고용의 지속가능성의 4가지 대분류 항목을 정하고 각각에 필요한 세부 평가 내용을 설정하고 있음

〈표 3-11〉 고용영향평가 세부 평가 및 권고 항목

대분류	세부 평가 및 권고 항목
고용확대 (고용의 양)	내국인 고용
	미취업자 우선 고용
	사업계획서 작성 방식(사업일정, 사업비 책정방식)
	고용 소외 계층의 고용(청년, 여성, 고령)
	초과근로시간과 직장 나누기
고용의 질 제고	직접고용의 안정성(고용계약 형태와 사업 후의 일시적 실업)
	임금수준(유사(민간) 사업에서의 기능별 임금수준 비교)
	직접고용에 대한 교육과 훈련
	예산확보
인력수급	노동시장 교란방지(타 사업장 고용의 교란)
	교육훈련을 통한 수급
고용의 지속가능성(사업, 정책, 법, 제도 등이 시행(완료)된 이후에 정부의 지원없이 고용이 지속되는 수준)	
평가대상의 특수성	

출처: 인하대학교(2013), 고용영향평가 강화방안 연구

○ 각각의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해 5단계의 평가 및 권고제안을 수행

평가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현재 상태 하의 고용의 질 평가	기 수립된 고용촉진 방안의 평가	새로운 고용촉진 방안 마련	고용촉진 목표치 설정	추가 예산소요 추정
평가 내용	현재 상태의 고용시장 환경하에서의 고용 및 질적 수준의 가능성	주어진 사업계획서나 제도하에서의 고용촉진 방안의 평가	사업계획이나 제도에서의 고용촉진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 가능성	새로운 방안의 도입에 따른 고용촉진의 효과 측정	고용촉진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 소요 추정
평가 근거 및 방식	사업계획서 혹은 실태조사, 관련 현황통계	전문가 자문, 연구자 평가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연구자의 FGD	고용노동부와 연구자 논의	주무부처와 고용노동부의 논의

출처: 인하대학교(2013), 고용영향평가 강화방안 연구

[그림 3-20] 질적 고용효과의 평가 및 정책 권고의 도출 방법과 절차

○ 질적 평가를 위해 주어진 평가항목에 대한 토론과 의견 제시를 주요 목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평가 사업의 고용친화적 수행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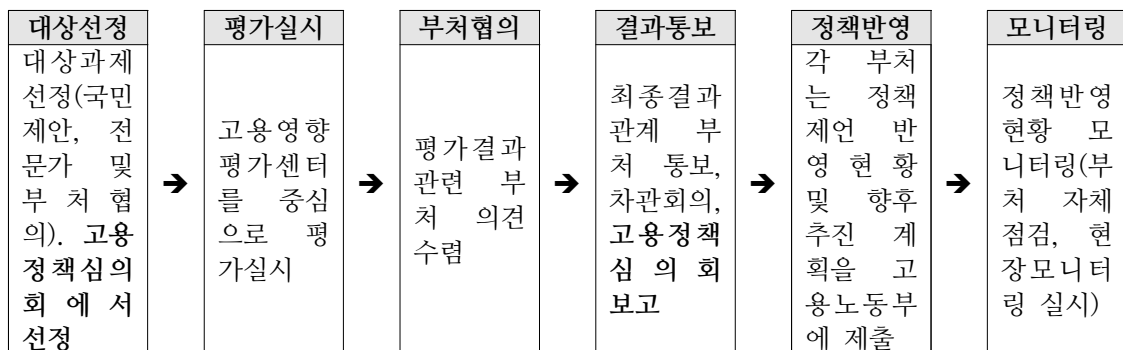
위한 전문가적 제안 도출

- 과거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업이나 현장 관련자를 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 또한 해당 평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고용친화적 제도 변경이나 조치에 관한 제안 등을 수집
- FGI를 통해 전문가 집단 의견 수렴 후 해당 평가사업과 관련한 고용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수행.
- 양적 및 질적 고용효과를 통해 도출된 평가 결과를 결합하고 최종적으로 정책 권고안 도출

4) 추진체계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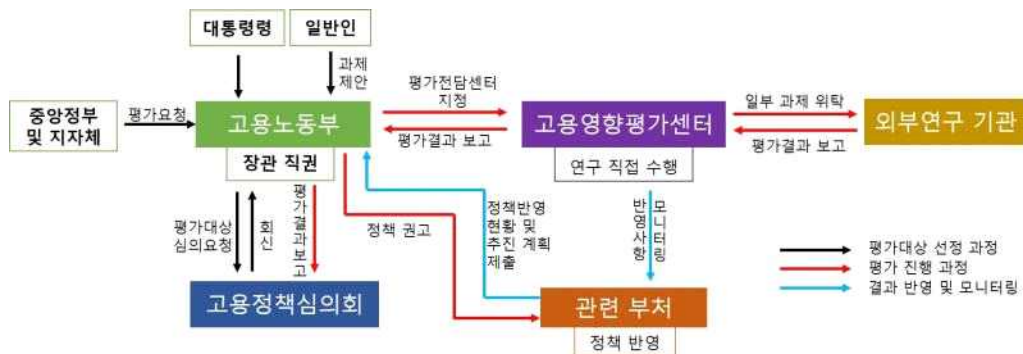
-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평가대상이 최종적으로 선정되면 평가전담센터인 고용영향평가센터에서 해당 과제들의 평가를 실시



출처: 고용영향평가센터 홈페이지

[그림 3-21] 고용영향평가제도의 평가 체계

- 대부분 고용영향평가센터에서 연구를 직접 수행하며 일부 과제를 외부 연구기관에 평가를 위탁
- 평가 결과 및 정책 권고사항이 도출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우선 관련 부처와의 협의 후 최종적인 평가결과를 관련 부처에 통보
- 각 부처는 평가를 통해 제안된 정책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그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함
- 고용영향평가센터에서는 정책반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책반영 모니터링 보고서’를 고용영향평가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그림 3-22]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추진 체계도

□ 법제도

- 고용영향평가는 2009년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 및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2조~23조를 통해 법제화
- (중앙)고용정책심의회의 운용으로 부처간 협조체제 구축. 고용정책심의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및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
- 한편 법령상 평가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저조한 평가대상 선정 및 평가 참여, 사후평가 위주의 평가, 평가결과 활용관련 제도적 규정 미비 등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나태주 외, 2014)
- 이후 2014년 법개정을 통해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고(법령 제13조 제2항), 평가결과의 환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법령 제13조 제3-5항)

4. 영향평가제도 비교 및 시사점

1) 환경영향평가 시사점

○ 개별법 제정을 통한 평가제도의 위상 강화

- 현재 문화영향평가가 문화기본법 제5조를 통해 규정되어 있는 것에 비해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서부터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의 단일법으로 독립하여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절차, 환경부장관의 보완·요청, 협의내용의 이행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제도로서의 역사나 위상이 높고 규제강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음.²⁴⁾

○ 문화영향평가와 비교하여 대상계획이나 사업, 협의 시기가 명확(부록 4~6 참고)

- 문화영향평가가 대상정책이나 사업이 불분명한 것에 비해 환경영향평가 등은 법령의 별표를 통해 3가지 평가에 대한 대상사업과 종류, 범위, 협의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현재 17개 분야 96개 사업을 대상계획으로 함
-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17개 분야 78개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규정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또는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5,000㎡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으로 정함
- 또한 타 기관과의 협의시기 역시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구분을 통한 탄력적 접근

- 문화영향평가가 기본평가/심층평가, 사전평가/과정평가로 구분되어 있는 것에 반해 환경영향평가는 의사결정의 초기단계(전략), 마지막 단계(환경), 개발사업시(소규모)의 상황에 맞는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함으로써 평가제도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
-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개발계획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 개입이 가능

○ 각종 사례집 발간을 통한 가치 확산 공유

- 환경영향평가는 정례적으로 환경부가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질의회신 사례집’,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가이드라인’을 발간함으로써 평가로서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
- 문화영향평가는 본 평가가 2년째 진행 중이지만 매년 개별평가사례 중 우수한 사례

24) 양혜원 외(2015), 「2015 문화영향평가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평가매뉴얼집 발간이나 홍보 등 초기 평가제도로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함

〈표 3-12〉 평가사업별 대기질·악취 평가범위 가이드라인(대기질, 악취 사례)

평가항목	평가사업	평가범위 설정 기준
대기질	골프장	2.0km
	택지개발	0.5km
	항만	3.0km
	토석채취	2.0km
	하천	0.5km
	철도	0.5km
	도로	0.5km
	산업단지	2.0km
	발전소	10.0km
	폐기물처리시설	5.0km
악취	산업단지	2.0km
	폐기물처리시설	5.0km

출처: 환경부(2013),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대기질·악취·소음·진동)」

○ 스코핑(Scoping)제도의 모든 평가대상으로 의무적 확대

-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반드시 평가해야 하는 항목과 범위를 미리 정하여 21개 평가항목(환경영향평가) 중 사업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영향이 크지 않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여 효율성 확보
- 스코핑 절차는 평가준비서를 제출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이를 심의하여 평가항목과 평가범위 등을 결정하는데,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및 예측범위, 평가항목의 선정사유, 제외항목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 문화영향평가에서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처럼 사업의 성격에 맞게 협의회에서 지표를 사전에 검토하고 선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표 3-13〉 환경영향평가항목 선정기준(스코핑)

구분	영향의 중요도	범위 선정 원칙(기준)
평가항목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따른 영향이 미미할 경우 • 영향을 받는 대상(지역)이 없는 경우 	-항목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현황조사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을 받는 대상이 존재하나 사업에 의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경우 • 유사사례에서 영향이 크지 않다고 증명 	-기본적으로 현황조사로 대체하고, 상세조사 및 예측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된 경우 •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추가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평가항목 선정	• 영향을 받는 대상이 존재하며 사업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특히 중요한 항목으로 인정되는 경우 • 보호지역, 보호대상 등 법령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 유사사업에서 보완 사례가 많은 항목 • 지역의 특별한 이슈가 되는 경우 • 전문가의 의견이 예상되는 경우 • 분쟁의 소지가 큰 경우	-지침을 충분히 활용하여 조사 예측 평가 방법을 선정한다. -지침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상세하게 조사한다. -필요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 한다. -보완을 줄이기 위하여 상세히 고려해야 한다.

출처: 환경부(2011),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가이드라인(안) - 평가항목·범위 결정 등을 위한 지침서 -」

○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민주적 절차 확보²⁵⁾

- 평가항목 결정: 대상계획 수립자와 개발사업 시행자는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결정된 평가항목은 행정기관 정보통신망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공개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
- 평가서 초안 작성과 의견수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환경부, 승인기관, 시·군·구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 개최로 평가대상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주민이 공청회를 요구하면 이를 개최하여야 함
- 문화영향평가의 경우 이해관계자 FGI나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공청회와 같은 공식적인 제도적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향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계획과 과정에 따른 평가초점의 명확화

- 문화영향평가는 현재 사전, 과정평가로 진행되고는 있지만, 평가지표를 동일하게 설정하고 추진 중에 있고, 평가결과를 통해 긍정적 영향의 극대화,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방안을 제시
-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사전적 성격이 강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이나 입지 타당성에 초점을 두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는 공사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에 초

25) 환경부(2016), 「환경영향평가」.

점을 두고 있어 문화영향평가와 비교하여 구분이 명확함

〈표 3-14〉 환경영향평가 환경피해저감방안 사례

우수 사례	환경피해저감방안
부산 동부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처리장 상부를 복개하여 공원과 체육시설 설치 등 주민편익공간으로 활용,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넘비현상 극복
부천 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업지구 주변 완충녹지 공간(5.5km)에 인공하천인 ‘시민의 강’ 조성하고,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를 재처리하여 하천 유지용수로 활용
안동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지형 및 식생이 양호한 산지 능선부와 녹지자연도 6~8등급지역 581,434㎡(52.6%)을 원형보존지로 확보
미흡 사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내용
팽목항 개발사업	사업지역은 수심이 낮고 반폐쇄성 해역으로 개발사업 수행시 해양오염의 가속화가 우려되나, 입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 및 저감방안 마련없이 개발사업 추진
OO지역 피탄지 조성사업	사업지역에 대한 충분한 현황조사 미실시 및 중금속 등 피해저감방안 미흡, 인근 주민들의 마을상수도에 대한 영향분석과 피해저감방안의 부적절

출처: 환경부(2005), 환경영향평가 우수사례집

○ 영향예측에 있어서 계량화의 용이함

- 문화영향평가는 전문가평가위원 평가점수와 지역주민 평가점수(설문)의 합으로 총점이 계산되지만, 평가기준이나 예측에 있어서 계량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나타남
- 환경영향평가는 일부지표에 있어서는 정성평가로서 진행하고 있지만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에 있어서 정량적 예측을 통한 계량화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표 3-15〉 환경영향평가 평가결과 사례

구분	항목	영향예측	성격
대기환경	대기질	○공사시 · 1시간 - NO ₂ : 26.1~48.1ppb · 24시간 - PM ₁₀ : 49.7~111.3 μ g/m ³ - NO ₂ : 21.13~25.06ppb · 연간 - PM ₁₀ : 48.1~61.3 μ g/m ³ - NO ₂ : 19.02~20.01ppb	정량
수환경	수질	· 공사시 -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발생량 18.03m ³ /일	정량

		- 우수유출량 : 8.82m³/일 - 토사유출량 : 45.04ton/일	
토지환경	지형지질	· 지형의 변화 - 최대 절토고 : 34.2m - 최대 성토고 : 19.5m	정량
자연생태환경	동식물상	· 녹지자연도 변화 - 사업시행전과 비교하여 1등급, 4등급 증가, 2, 5, 6, 7등급 감소 - 수목훼손예상 · 공사시 동물에 미치는 영향 - 개체수 및 종다양도 지수의 감소	정량+정성
생활환경	자연환경 자산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남동측으로 약 2.0km이상 이격되어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됨	정성
	경관	경관예측결과 인공적인 경관 영향이 예상됨	정성
사회경제환경	산업	인근지역 경제활성화가 예상되며 포천시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원 역할은 지역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정성

출처: 대우에너지(2013). 「포천 천연가스 발전소 1호기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서」에서 일부 발췌

- 환경과 문화적 가치의 불확실성과 모호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계의 공통적 속성을 내포
- 문화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모두 정보의 부족, 환경/문화적 문화의 불확실성, 가치의 객관화/계량화 어려움, 적절한 기준이나 수준의 부재라는 측면에서 공통적인 한계가 나타남
 -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는 일반 국민의 환경이라는 삶과 직결된 가치의 인식이 높고, 환경단체가 주도적으로 환경문제나 영향평가에 있어서 감시 및 지지하고 있어 제도적 위상은 매우 높은 편임

2) 성별영향분석평가 시사점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법적 기반 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경우 2002년에 「여성발전기본법」에 그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음. 이후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제정하면서 단일법으로 발전하였음. 이후 2014년 법 개정을 통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공표제 도입, 2015년 법 개정을 통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 2016년 법 개정을 통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무담당자 지정 근거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평가제도의 위상을 높이고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이후 지자체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나 관련 조항을 양성평등기본조례에 포함시키는 등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2016년 기준 전국 지자체 중 157개 기관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²⁶⁾

○ 평가대상의 점진적 확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이후 대상과제의 범위가 사업 중심에서 법령 제·개정안, 계획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제도화 함. 그 결과 대상 과제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음.
- 법령: 2012년 8,464개, 2013년 12,740개, 2014년 17,433개, 2015년 23,723개
- 계획: 2012년 88개, 2013년 125개, 2014년 173개, 2015년 112개
- 사업: 2012년 6,240개, 2013년 7,507개, 2014년 8,832개, 2015년 10,423개
-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를 비교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사업에 대한 대상과제 수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반면, 지자체는 대상과제 수가 크게 증가함. 이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수 및 교육받은 공무원 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²⁷⁾
- 문화영향평가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평가제도의 강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지자체의 문화영향평가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평가지표에 문화영향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음

○ 공무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인식 및 전문성 개선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수가 급증함에 따라 담당 공무원들의 분석평가서 작성 및 해당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이 증가하게 됨. 실제로 교육을 받은 공무원의 숫자는 2012년 42,916명, 2013년 154,037명, 2014년 101,581명, 2015년 73,032명으로 2012년 대비 2015년 170%가 증가함²⁸⁾.
-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행위자들의 여성정책 역량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 즉, 성인지적인 관점을 가진 공무원의 관심이 증가할 때 제도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임(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8).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받은 공무원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의 성평등 의식,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문화영향평가의 경우 현재 제도 시행이 초기 단계에 접을 감 안할 때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의 문화의식, 문화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음

○ 정책개선 이행과 환류 강화

26)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19.

27) 정부업무평가 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항목으로는 '양성평등 추진실적'이 있음. 세부지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노력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로 구성되어 있음

28)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27.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 정책 환류를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분석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며,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를 명시하고 있음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자체들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정책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환류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을 관련 조례에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와 전라남도는 2015년 조례 개정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 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함²⁹⁾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수용율은 중앙은 90% 이상, 지자체는 8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3-16〉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정책개선 관련 규정

구분		지역	조례내용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분석평가결과와 성인지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 성인지 예·결산 제도와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민간 위원 위촉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성인지 예산 전문가
적극적 조치		대전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 행정·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포상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 실현이나 분석평가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홈페이지 공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성별통계·분석평가·개선효과 및 정책개선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홍보한다.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II)

29)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30.

○ 시민사회의 참여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경우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분석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와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왜냐하면 민관협력에 기초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가 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임
- 중앙 및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시 성인지 전문가, 시민단체를 참여시키고 과제 선정시 대국민 공모실시, 시민제안, 시민참여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음.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중심이 되어 젠더 거버넌스 포럼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음. 포럼과 모니터링단에는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음
- 문화영향평가에서도 가능한 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공무원, 전문가, 문화단체 활동가, 지방의회의원이 상호 협력하여 평가에서 제시된 정책제언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참여 인센티브 제공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시행 경험을 통해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평가결과 성평등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은 성인지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제기되었음.
-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공공정책을 변화시키는 성별영향분석평가 100가지 사례」 자료집 발간(2016)을 통해서 복지, 보건, 지역환경, 산업·경제, 교육·문화, 일반행정, 농어업, 국방·외교, 국외 9개 분야별 우수사례를 홍보하였음

● 제100차 양성평등정책 포럼 및
● 2016년 양성평등 기반구축 포럼

공공정책을 변화시키는
성별영향분석평가 100가지 사례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공공정책을 변화시키는 성별영향분석평가 100가지 사례

[그림 3-23] 공공정책을 변화시키는 성별영향분석평가 100가지 사례 표지

- 또한 매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 우수컨설턴트에 대한 포

상을 제공하고 있음

2015년 포상 내용

- 기관: 대통령표창(1), 국무총리표창(2), 장관표창(3)
- 공무원·컨설턴트: 장관표창(13), 장관상(10:최우수, 우수, 장려)
- 우수사례 경진대회: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개 우수사례 발표
 - 최우수상: 1사례×200만원
 - 우수상: 3사례×100만원
 - 장려상: 6사례×50만원

- 문화영향평가의 경우 현재 평가보다 컨설팅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수기관’의 유형이 존재하지 않음. 현재 시점에서 문화영향평가의 취지에 대한 공감도와 협력도가 우수한 기관에 대한 포상, 예산과의 연계 등을 통해 참여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려할 수 있음

가. 법령에 대한 주요 개선사례

산업통상자원부

모성보호 및 태아의 건강한 성장과 출산을 보장하기 위해,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에너지이용권 수급대상'에 '저소득층 임산부'를 포함

*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저소득층 임산부 추가

행정자치부

무궁화대훈장 및 1등급훈장 도형 및 제식의 성별 훈장 형태 구분을 폐지하고 동일한 도형 및 제식으로 일치시킴

* 「상훈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훈장크기
통일

국방부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을 종전 남군 1년 이내, 여군 3년 이내에서 개선하여 성별 구분 없이 '자녀 1명 당 3년 이내'로 변경

* 「군인사법」 제48조제3항, 제49조제3항



국민안전처

피난계획 수립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재해약자)의 현황과 재해약자 및 재해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을 포함하도록 개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4



나. 사업에 대한 주요 개선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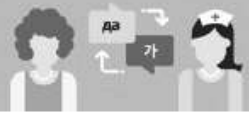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결혼이민여성의 의료기관 이용이 용이하도록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갖춰진 의료기관을 사업수행 기관으로 선정하고 통역시스템을 구축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산부인과
진료를 위한
병원 지정



통역 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성별 균형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로, 어촌체험마을의 여성 사무장 채용비율이 높은 시도에 예산을 증액 지원하고 사무장 선정 위원회 운영 시 여성이 50% 이상 되도록 「15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지침」 개선
* 어촌6차산업화지원(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사업

사무장 채용대상 마을 선정 시
여성사무장 채용 마을
우선 지원



사무장선정위원회 운영 시
여성이 50% 이상
되도록 구성



농촌진흥청

성별에 따라 대상자를 구분하여 효능 등을 연구평가하도록 하고, 남녀를 구분하여 임상시험을 진행한 자료는 공공 DB에 포함하여 주요 평가항목에 대한 통계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
* 논문확찰을 이용한 비만과 황반변성 예방소재 특성 연구 사업

성별에 따라
대상자 구분하여
효능 연구·평가



임상시험 심사자료에
성별차이에 의한 분석지표
반영하도록 관련 지표 개선



다. 계획에 대한 주요 개선사례

경상남도 사천시

여성,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노인 등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재난 안전 수칙과 재난 안전매뉴얼 개발 및 배포,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재난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15~2019 재난예경보 체계 구축계획

성별·연령별
특성 고려



재난 안전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료: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2017)

[그림 3-24]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주요 개선사례

○ 추진체계 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시행 결과 담당부서의 인력과 권한 확대, 기관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 직위제 도입,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인력과 예산 확대 등의 추진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산하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24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 문화영향평가의 경우 현재 지원기관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며, 연구원내에 공식적인 조직체계가 없는 ‘문화영향평가센터’가 존재하는 취약한 조직형태를 지니고 있음. 담당조직과 전문인력의 확대가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안착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 판단됨

3) 고용영향평가 시사점

○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한 고용영향평가 실시

- 문화영향평가제도와 유사하게, 별도의 평가관련 법령 없이 2009년에 고용정책기본법의 13조에 고용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고용영향평가 대상 정책 (시행령 제22조), 고용영향평가의 결과 (시행령 제22조의2), 고용영향평가의 대행(시행령 제23조)을 담고 있음.
- 2006년부터 고용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기초연구가 시작되었고, 2010년에 시범평가를 거쳐 2011년부터 고용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

○ 고용영향평가의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고용정책기본법 13조 2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으로서 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
 -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
- 위의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은 아래와 같음(시행령 제22조 제4항)
 -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 국회가 의결을 통해 고용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한 정책

○ 고용영향평가는 자체평가와 전문평가로 구분하여 시행

- 자체평가의 경우, 재정사업의 고용효과를 『고용영향 자체평가 가이드라인』에 기초해서 사업담당부서에서 직접 산출하고 이를 고용영향센터에서는 확인 및 검토만 함.

〈표 3-17〉 고용영향 자체평가 작성 양식

고용효과		‘16년(A)	‘17년(B)	증감(B-A)
	예산(백만원)			
	총고용(명)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input type="checkbox"/> 동 사업에 적용한 고용효과 산출 방식 기재			
고용효과 산출내역	<input type="checkbox"/> 2017년 고용효과 <input type="checkbox"/> 2016년 고용효과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input type="checkbox"/> 자체평가한 평가결과 및 자체 제도개선(안) 기재			

자료: 고용노동부 KII고용영향평가센터, 『고용영향 자체평가 가이드라인』 2016.4

- 전문평가의 경우, 고용영향평가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평가대상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고용의 질과 양 변화에 대해 정량적 및 정성적 분석을 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제언 형태로 담고 있음
-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다양한 영향 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을 택해 각각의 영향을 파악한 후 국민경제에 미치는 총 효과를 분석함.

	영향 경로 1 임금 인상 압박	영향 경로 2 가계 소비 증가	영향 경로 3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	영향 경로 4 근로빈곤탈출 혹은 완화
평가 (정량적 분석)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인상 총액 (미시적 관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와 이로 인한 내수산업 촉진에 따른 경제전체의 생산 및 고용을 증가 여부 (거시적 관점)	최저임금 준수 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의 원가 부담 증가	최저임금수준의 상승이 근로빈곤 지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 이를 통해 최저임금인상이 빈곤완화 및 소득불균등 개선 효과가 있는지 확인
분석방법	회귀분석	거시-IO통합모형 적용 (거시적 파급효과 추정)	인건비 비중 계산 후 최저임금인상의 충격에 따른 변화 관찰	다출구 이행모형 적용 (근로빈곤지위에 속한 사람의 지위 변화 확인)

주: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2015),『최저임금 인상 고용영향평가 연구』의 보고서 내용을 영향경로와 분석방법 측면에서 정리한 것임

- 최종적인 목적인 위의 정량적 분석 결과를 통해 정책제언을 하는 데 목적이 있음.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고용영향평가의 최종 정책제언은 아래의 두 가지임.
 - ① 최저임금수준이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근로장려제도의 근로빈곤에 미치는 효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제도 설계 필요
 - ② 실업급여 하한선 등 최저임금 변화와 연동된 제도가 다수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최저임금수준 결정에서 이들 제도와의 연동성을 고려할 필요
- 명확한 평가 목적 및 정책제언 중심의 평가방법 구축
 - 고용영향평가는 특정 사업, 정책, 법, 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 등의 고유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일자리 증가 및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 개선안 도출이라는 명확한 평가 목적이 있음.
 - 정책 제언을 위한 유의미한 평가 결과 도출을 위해 ‘고용효과’라는 명확한 척도를 설정하고 이를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평가함.
 - 고용의 양과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개선 권고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통해 평가대상 사업의 현장에서 그 근거 및 증거(evidences)를 파악하는 데 집중함.
 - 이러한 점은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한 아래에서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 해당 정책의 시행에 따른 고용과의 연계성 및 고용창출의 경로, 해당 정책으로 인해 예상되는 일자리 증감,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의 질 변화, 그리고 일자리 증감이나 고용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내용이 고용영향평가의 결과에 포함되어야 함(고용영향평가는 시행령 제22조의2)
- 전담평가센터의 전문성 확보
 - 2016년 고용영향평가대상 정책 22개 중 고용영향평가센터(전담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소속 박사가 과제의 PM인 경우가 50%에 달함
 - 즉 전담연구기관에서도 상당량의 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전담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추진할 경우 다양한 평가방법 시도 및 평가지침의 지속적 업데이트가 가능해짐
 - 고용영향평가센터는 10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 내부의 평가 역량 강화는 외부로의 평가기법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음
- 영향평가제도의 활용
 - 문재인정부에서 ‘일자리 중심 정부지원 체계 개편으로 고용영향평가 결과 및 정책 권고 사항 반영여부를 차년도 예산배정과 연동시켜 평가결과 수용도를 높임
 - 기존 250여개 정도의 일자리과제관련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1,000여개 사업으로 확

대 실시할 계획이며 기존 부처 자체평가³⁰⁾에서 노동연구원 전담평가로 변경 예정
-〈고용영향평가협의회³¹⁾〉 운영, 평가자 실명제 실시를 통해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고용영향평가센터 인프라 강화

○ 평가 결과 환류를 위한 제도 개선

- 2014년 법개정 이전 고용영향평가는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제도적 규정이 미비하여
평가결과의 환류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 평가보고서 제출 이후 관련 부처의 정책제언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 권고 시
관련기관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시행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또한 고용영향평가센터는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제언 반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
여 관련부처의 지속적인 정책개선을 유도

○ 관련 통계자료의 활용

- 고용영향평가는 기 구축된 고용 관련 통계자료를 평가에 적극 활용하여 고용영향평
가의 질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문화영향평가의 유의미한 결과 도출을 위한 관련 통계자료 구축을 고려해 볼 필요
가 있음

4) 시사점 종합

○ 이상의 분석내용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3-18> 영향평가제도 비교

	문화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고용영향평가	평가제도 비교
법적 근거	문화기본법/시행 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 환경부 훈령/예규/ 고시, 지자체 조례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시행령/지자체 조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고용영향평가는 기본법에 근거 •환경영향평가, 성 별영향분석평가는 개별법에 근거
대상	•문화적 가치의 사 회적 확산 및 국민 의 삶의 질과 밀접 한 관련이 있는 계 획과 정책 •수요조사 및 문화 영향평가 협력체계 협의 통해 선정	•평가유형별로 대 상이 법률에 구체 적으로 명시 •전략환경영향평 가: 정책계획 17개, 개발기본계획 79 개 사업 •환경영향평가: 69 개 •소규모 환경영향	•제외대상이 아닌 한 모든 법령, 계획, 사업 평가 추진 •제·개정 추진법령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사업 •지자체 세출예산 단위사업 등	•중앙, 지자체 장 요청 정책 •정책심의회 심의 정책 •고용노동부 장관 직권 •대규모 예산이 투 입 정책(예비타당 성조사 대상 사업), •국회가 의결을 통	•성별영향분석평 가는 제·개정 추진 법령 포함하나 환 영향평가는 계획과 정책이 대상 •평가대상 선정방 식 성별/환경/고 용 순으로 포괄성 있음

30) 고용효과 산출을 기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고용영향 자체평가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해당사업 담당자가 평가를 하고
고용영향평가센터가 이를 확인하는 구조였음.

31) 고용영향평가협의회는 고용부,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여가부등 관계부처와 노동연구원(고용영향평가센터), 한국은행,
KDI, 산업연구원, 고용정보원 등 연구기관으로 구성됨.

		평가: 9개 구분에 의한 적용지역	•특정 성별 영향평가: 중앙 성별 영향 분석평가위원회 선정	해 고용영향평가 실시 요구한 정책	
구속력	없음	•협의내용 통보에 따른 반영 및 이행 의무 존재 •불이행시 조치명령 및 공사중지명령 가능	•개선권고 및 의견 표명 가능하며, 소관기관의 개선계획 제출의무 존재	•정책제언 및 개선 권고 가능하며, 소관기관의 개선대책 수립·시행·통보의무 존재	•환경영향평가는 이행 의무 존재 •성별영향분석평가, 고용영향평가는 개선권고 및 개선대책 의무 존재
적용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시·도, 시·군·구	•중앙행정기관 : 부·처·청, 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통적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적용
평가시기	사전/과정평가	•사전평가(승인/인가/허가/지정전)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전/과정평가 •제개정 법령: 법제처 법령안 심사전	•사전/과정/사후평가	•공통적으로 사전 및 과정 평가 •환경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는 사후평가 존재
평가지표	•6개 핵심지표(12개 세부지표) : 문화향유, 표현 및 참여,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공동체, 문화다양성, 창조성 •특성화지표(자율지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별 차별화된 지표 •환경영향평가는 6개 분야 21항목	•법령 : 성별 구분/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균형참여, 성별통계 •계획 : 성별영향 발생가능성, 성별요구도, 성별형평성,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사업 : 사업의 성별 요구도, 사업의 성별형평성,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양적평가: 고용효과와 취업효과와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측정 •질적평가: 고용확대, 고용 질적 제고, 원활한 인력수급, 고용의 지속가능성, 평가대상 특수성	•환경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평가유형별로 차별화된 지표 •환경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는 정량, 정성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성평가
평가초점	문화적 영향의 예측평가를 통해, 긍정적 영향을 강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제언 도출	•(전략환경평가)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초점 •(환경영향평가) 공사운영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 초점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등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자체적으로 진단/수정/보완하도록 함	•고용영향의 정량적 분석에 상당부분을 할애하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정책 제언을 통한 제도 및 정책의 효율화에 있음	•평가를 통한 각 영향의 예측 및 보완
추진체계	문체부, 문화영향평가협력체계,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공식적 센터 조직 없음), 개별평가기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승인기관, 환경영향평가업/환경영향평가사	여성가족부, 중앙과 지방 성별영향 분석평가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중앙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분석평가책임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고용영향평가센터(한국노동연구원)	•전담 지원 조직 존재 •중앙 성별영향평가센터 24명/고용영향평가센터 10명 전문인력
수행방식	•수요조사를 통해 문체부와 문화영향평가협의체가 대상 선정 •전문평가기관의 개별평가 및 종합평가단의 종합평가 •문화컨설팅 지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평가 항목과 범위 결정(scoping) •평가대행사를 통한 평가서 작성 및 승인기관 제출 •협의의견 통보 및 협의의견 반영, 필요조치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 작성해 제출→검토의견 통보→반영계획서 제출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이 중앙부처, 지자체에 평가 및 컨설팅 지원	•자체평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작성하고 이를 고용영향평가센터에서 재확인 •전문평가는 고용영향평가를 대행하는 고용영향평가센터가 주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자체평가, 고용영향평가는 전문평가 중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자체평가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한 17개 센터 존재
참여인센	우수사례 홍보지원	우수사례집 발간	•유공자 포상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기관, 우수공	•고용효과가 큰 우수사업은 해당 사업에 대해 차년도	•우수사례 발표 및 관련자 포상 •예산 연계

티브			무원, 우수컨설턴트 •성인지예산 반영	예산 증액 •고용효과가 낮은 사업은 예산 감액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의 비가시성, 장기성, 맥락의존성 • 계량화의 어려움 • 질적 연구의 중요성 • 가치판단의 필요성 • 전문성의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의 가시성, 장기성 • 계량화 용이 • 전문성의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의 가시성, 장기성 • 가치판단의 필요성 • 계량화 용이 • 평가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의 가시성, 장기성 • 계량화 용이 • 전문성의 요청 	

(1) 문화영향평가의 특수성을 고려한 중장기 발전방안의 모색 필요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 분야 영향평가제도는 공공정책 등이 미치는 영향을 각 분야별로 진단·분석·평가함으로써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수정기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님
- 그러나 각 영향평가제도는 각각의 고유한 정책목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특수성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중장기 발전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문화영향평가는 타 영향평가에 비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적 특성을 가짐

□ 문화적 영향의 비가시성·장기성·맥락의존성

- 특정 정책이나 계획이 미치는 문화적 영향은 한 지역, 또는 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 행동방식,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나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비가시성(intangibility)을 가지며, 단시일 내에 현격한 변화가 나타나기 보다는 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문화적 영향은 맥락의존성(context dependency)을 가져, 동일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문화적 영향의 양상이나 경로, 체감도는 정책이 구현되는 지역에 따라, 역사·문화적·사회적 부존자원과 배경에 따라, 정책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문화영향평가는 비가시적인 문화적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가시화하고 평가하기 위한 별도의 방법론과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장기간에 걸친 추적조사를 통해 특정한 정책이 미치는 문화적 영향의 양태와 경로, 크기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데이터의 구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해당 정책이 구현되는 현장(field)에 대한 이해, 즉 지역적 특성에 대한 이해, 역사적·문화적·사회적 부존자원과 배경에 대한 이해, 정책관계자의 역학관계나 정책에 대한 수용 태도 등과 같이 문화적 영향이 나타나는 맥락(context)에 대한 고찰이 함께 할 때에야 비로소 정책이 미치는 문화적 영향을 보다 적절하게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짐

□ 계량화의 어려움과 질적 연구의 중요성

- 환경영향평가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고용영향평가 등 타 영향평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책의 영향을 수치화·계량화하기가 용이하지만, 문화적 영향의 비가시성으로 인해 문화적 영향의 계량화는 타 분야에 비해 훨씬 더 어려운 측면을 내포함
 -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수질, 대기, 토양 등에 대한 오염도나 위해물질의 배출량, 위험도 등을 수치로 측정할 수 있으며, 적정한 기준값을 설정하여 평가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음
 - 고용영향평가 또한 I/O 통합모형, 성향점수법(PSM), 이중차감법(DID) 등과 같이 직·간접 고용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과 산식, 데이터 등이 개발되어 있어 계량화가 용이함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경우에도 성차별 여부, 고정관념이나 편견 여부, 성별 특성의 고려 등에서는 정성적 가치판단이 필요하나 상대적으로 그 판단이 용이한 측면을 가지며, 수혜 등에 있어 성별 균형 참여, 성별 격차의 분석 등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함
 - 반면 특정한 정책, 특히 비문화 분야의 정책이 미치는 문화적 영향을 계량화하고 수치화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아직까지 계량화 방법론이 개발되는 초기 단계에 있어 정량적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검증된 방법론과 축적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문화영향평가의 어려움이 있다 할 것임
- 한편 문화영향평가의 경우 계량화를 통한 최소기준의 도달 여부 혹은 평가기준에의 부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업관계자나 주민들에 대한 인터뷰와 FGI, FGD 등과 같은 질적 방법론을 통해 대상 정책이 미치는 문화적 영향의 양태와 경로, 작동기제를 예측·진단하고 어떠한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가치판단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문화적 영향이 가지는 맥락의존성을 고려할 때 양적 방법론을 통한 총량적 파악과 제시 외에도 질적 방법론을 통한 원인의 진단과 적절한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임

□ 영향의 예측 및 평가에 있어 전문성의 요구

- 또한 공공정책이 미치는 문화적 영향의 예측과 평가는 일반국민들이나 비문화계 인사들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함
 - 특정한 공공정책, 예컨대 도시재생사업이 국민들의 문화향유나 문화다양성,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창조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와 함께 문화향유, 문화다양성,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창조성이라는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이해, 도시재생사업이 해당 지표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에 대한 인과경로에 대한 이해 등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임
 - 즉 오랜 기간 정책현장에서 공공정책이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관찰과 경험, 성찰이 함께 할 때에야 보다 타당한 문화적 영향의 예측과 평가, 그리고 그에 기반한 적절한 처방이 가능할 수 있음
 - 그러나 전문가라 하더라도 문화적 영향의 판단은 개인적 가치판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전문가 간에도 심도 깊은 숙고의 과정(deliberation process)과 토론을 통해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며, 주민을 비롯한 정책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향후 이러한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문화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2) 타 영향평가의 제도적 강점 벤치마킹의 필요성


- 한편 타 영향평가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법적·제도적 강점과 운영방식의 우월성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개별법 제정을 통한 평가제도의 위상 강화, 의무평가대상 및 평가시기의 구체화와 법정화, 스코핑(scoping)제도를 활용한 평가항목과 범위의 설정, 중앙 및 지역 차원의 위원회를 활용한 대상과제의 선정과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평가과정에서 자료요청 권한의 부여, 평가 결과의 반영 및 이행의무의 규정을 통한 평가의 실효성 확보, 중앙 및 지역 단위 영향평가센터와 책임관/실무관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한 평가의 체계적 관리와 수행,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의 적극적 활용, 통계 인프라의 강화·활용을 통한 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 제고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임
- 다만 여기에서도 타 분야 영향평가제도와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유사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략적인 제도적 선택이 필요함
 - 예컨대 문화영향평가제도의 경우 문화적 영향의 예측과 평가에 상당한 전문가적 식

견과 실태조사, 관련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고용영향평가제도와 같이 전문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

- 그러나 한정된 평가자원을 고려할 때 전문평가 대상을 무한정으로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모든 정책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는 것이 사회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즉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같이 소관기관에 의한 자체평가 유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따라서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와 자체평가를 가장 효과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와 협력체계의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문화영향평가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상당기간 교육과 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할 것임

(3) 장기적 안목에서 지속적 제도개선 필요

-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7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2005년부터, 고용영향평가제도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그간 해당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관계자들의 상당한 반대와 비판, 평가지표나 방법에 대한 끊임없는 수정과 보완을 거쳐 개선·발전해옴
- 한국의 문화영향평가제도의 경우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되고 있으며, 문화다양성과 같은 일부 영역이 아니라 전반적인 문화적 영향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기가 힘든 선진적 제도인 만큼 더욱이나 제도 도입 초창기에 많은 비판과 반대, 수정·보완을 위한 다양한 견해가 표출될 것으로 예측됨
- 그러나 우리나라 문화영향평가제도가 가지는 국제적·국내적 의의와 중요성을 감안하여, 문화영향평가제도가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제도적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조급증과 과도한 기대는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조기 정착과 장기적 발전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성숙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문화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과 공감대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의 수행, 그리고 문화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전문인력과 기관의 양성과 상호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 시계(視界)로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발전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임



제4장

문화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조사설계
2. 전문가 인식도 조사결과
3. 피평가기관 만족도 조사결과

1. 조사설계

- 설문은 문화영향평가 본 평가('16년~현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바 있는 전문가 70명과 '16년 피평가기관인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2017년 8월 22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됨.
- 설문지는 리커트(Likert) 7점 척도로 작성하였고, 전문가 52명(회수율 74.3%), 피평가기관 5개 기관(회수율 35.7%)이 응답함.
- 분석은 IBM사의 SPSS 22.0을 이용하였음.
- 전문가 응답자 특성
 - 성별의 경우 남성이 71.2%로 여성 28.8%보다 많았음.
 - 연령은 30대 이하 및 40대가 38.5%로 가장 많이 분포됨.
 - 직업은 공공/민간 연구원이 50.0%, 대학교원/강사가 34.6%로 나타남.
 - 전문분야는 문화가 48.1%, 정책·평가·제도가 34.6%로 나타남.
 - 해당기간 종사기간은 15년 이상이 36.5%로 가장 높았고, 10년 이상~15년 미만이 23.1%로 나타남.
 - 평가 참여 경험은 개별평가기관이 42.3%, 종합평가단이 30.8%, 전문가평가단이 15.4%, 관련 연구 수행 경험이 11.5%로 비교적 균형 있게 분포되었음.

〈표 4-1〉 전문가 응답자 현황

구 분		전문가	
		빈도	비율
성 별	남	37	71.2
	여	15	28.8
연 령	30대 이하	20	38.5
	40대	20	38.5
	50대 이상	12	23.1
직업	대학교원/강사	18	34.6
	공공/민간 연구원	26	50.0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6	11.5
	기타	2	3.8
전문분야	문화	25	48.1
	도시·지역개발	8	15.4
	정책·평가·제도	18	34.6
	지리	1	1.9
해당분야	5년 미만	10	19.2

종사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	11	21.2
	10년 이상-15년 미만	12	23.1
	15년 이상	19	36.5
평가 참여경험	개별평가기관으로 참여	22	42.3
	종합평가단으로 참여	16	30.8
	개별평가기관의 전문가 평가단으로 참여	8	15.4
	관련 연구 수행 경험	6	11.5

주. 참여유형이 중복되는 경우, 2017년 현재 참여유형을 우선, 종합평가단을 전문가평가단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였음.

○ 피평가기관 특성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초자치단체가 100%로 나타남.
- 지원동기는 공람된 문체부 공문을 보고 지원한 경우가 66.7%였음.
- 실질적 지원목적은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받기 위함이 100%였음.

〈표 4-2〉 피평가기관 응답자 현황

구 분		피평가기관	
		빈도	비율
기관 유형	중앙부처	2	40.0
	기초자치단체	3	60.0
사업유형	도시재생사업	3	60.0
	지원사업	2	40.0
지원동기	공람된 문체부 공문을 보고	4	80.0
	기타	1	20.0
실질적 지원목적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받기 위해	5	100.0

2. 전문가 인식도 조사결과

1) 문화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인식

○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중요성 및 필요성

- 문화영향평가의 중요성 및 필요성은 5.81점으로 나타나 평가제도로서의 중요성과 필요성 모두 다소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혀 동의 안함	←		보통	⇒		매우 동의	7점 평균 (표준편차)
중요성	N	-	2	-	3	10	23	14	5.81
	%	-	3.8	-	5.8	19.2	44.2	26.9	(1.138)
필요성	N	-	-	4	3	10	17	18	5.81
	%	-	-	7.7	5.8	19.2	32.7	34.6	(1.205)

- 필요성에 대해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는 ‘문화가 국민의 삶에서 기본적 권리로써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가 60.8%로 가장 많았고, ‘현재 대부분의 정책이 문화와 관련되어 있어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가 23.5%로 나타남.

〈표 4-4〉 문화영향평가 필요성의 이유

		빈도	%
현재 대부분의 정책이 문화와 관련되어 있어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12	23.5
문화가 국민의 삶에서 기본적 권리로써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31	60.8
문화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장치가 된다		3	5.9
문화는 환경, 고용 등처럼 우리 삶에서 직접적 이해가 낮아 평가제도로서의 필요성은 낮다		1	2.0
기타	객관적 평가를 통한 결과 도출이 의문이다	1	2.0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제도로써 의미가 있다	1	2.0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1	2.0
	문화를 수단으로만 삼아 진행되고 있는 정책 사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1	2.0

○ 문화영향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

- 1순위로 ‘법정평가로서 위상이 약하다’가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가 21.2%, ‘평가지표의 관점이나 해석이 어렵

다'가 15.4%로 나타남.

- 2순위로 '문화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가 21.2%, '평가의 기준이나 근거가 불분명/불충분하다(자료/실태조사의 불충분)'가 19.2%로 나타남.
- 3순위로 '평가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참여동기 약화)'가 17.3%, '문화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와 '평가지표의 관점이나 해석이 어렵다'가 각각 13.5%로 나타남.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법정평가로서 위상이 약하다'가 21.8%로 가장 많았고, '문화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가 18.6%, '평가지표의 관점이나 해석이 어렵다'가 13.5%의 순으로 나타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됨.

〈표 4-5〉 문화영향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

	1순위		2순위		3순위		종합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법정평가로서 위상이 약하다	22	42.3	6	11.5	6	11.5	34	21.8
평가대상(사업)이 불분명하다	4	7.7	6	11.5	4	7.7	14	9.0
문화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11	21.2	11	21.2	7	13.5	29	18.6
평가의 기준이나 근거가 불분명/불충분하다(자료/실태조사의 불충분)	1	1.9	10	19.2	3	5.8	14	9.0
평가지표의 관점이나 해석이 어렵다	8	15.4	6	11.5	7	13.5	21	13.5
개별평가기관과 종합평가기관의 역할구분이 모호하여 중복적이다	-	-	1	1.9	4	7.7	5	3.2
평가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참여동기 약화)	-	-	4	7.7	9	17.3	13	8.3
평가자체보다는 컨설팅 의견이 주를 이뤄 평가의 권위 약화	1	1.9	1	1.9	6	11.5	8	5.1
평가결과와의 실효성이 낮다(반영이 어렵다)	3	5.8	7	13.5	6	11.5	16	10.3
기타	2	3.8	-	-	-	-	2	1.3

○ 향후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발전 방향

- 향후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처럼 개별법(가칭 '문화영향평가법') 형태로 발전되어야 한다'가 47.1%, '문화기본법의 법령 개정을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가 41.2%로 나타남.

〈표 4-6〉 향후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발전 방향

		빈도	비율
환경영향평가처럼 개별법(가칭 ‘문화영향평가법’) 형태로 발전되어야 한다		24	47.1
문화기본법의 법령 개정을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		21	41.2
현행유지로도 충분하다		2	3.9
기타 의견	관련 연구 추가 필요	2	3.9
	추진경과를 좀 더 지켜보면서 법령 개정 고려	1	1.9
	기타	1	1.9

○ 문화영향평가협의체 위상 정립 방안

- 문화영향평가협의체에 대해서는 ‘(중앙)문화영향평가위원회 및 지역문화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64.6%로 높게 나타남.

〈표 4-7〉 문화영향평가협의체 위상 정립 방안

	빈도	비율
(중앙)문화영향평가위원회 및 지역문화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31	64.6
(중앙)문화정책심의회의 및 지역문화정책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17	35.4

○ 문화영향평가의 인센티브 방안

-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는 ‘문화영향평가 실적을 각종 평가제도(지역문화지표, 지역관광발전지표, 지자체합동평가, 국토부 관문심사)의 지표에 포함’이 47.1%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평가제도로서의 실효성과 위상을 고려한 응답으로 해석됨.
- 또한 ‘문화영향평가와 예산연계(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지침과 연계)’가 23.5%, ‘컨설팅 및 지원사업과 연계’가 19.6%로 나타나 제도적 위상정립과 더불어 실질적 피평가기관에 이익이 되는 방향이 선호되었음.

〈표 4-8〉 문화영향평가의 인센티브 방안

	빈도	비율
표창 및 수상	2	3.9
언론보도 및 홍보지원	2	3.9
컨설팅 및 지원사업과 연계	10	19.6
문화영향평가 실적을 각종 평가제도(지역문화지표, 지역관광발전 지표, 지자체합동평가, 국토부 관문심사)의 지표에 포함	24	47.1
문화영향평가와 예산연계(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지침과 연계)	12	23.5
모니터링 및 사후 영향평가의 보완적 실시	1	2.0

○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지표에 대한 인식

- 유용한 지표는 ‘문화접근성’, ‘문화공동체’,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보호’, ‘문화향유수준’으로 나타남.
- 필요성이 낮은 지표는 ‘창조자본’, ‘창조기반’,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으로 나타남.
- 모호한 지표는 ‘창조자본’, ‘창조기반’, ‘문화적 종 다양성’으로 나타남.
- 정리하면, 문화향유와 관련된 지표는 문화영향평가에서 가장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지표로 볼 수 있고, 창조성 및 문화다양성은 필요성이 가장 낮은 지표로 볼 수 있는데, 이 중 창조자본 및 창조기반, 문화적 종 다양성처럼 지표의 모호함에 기인한 결과로 해석 가능함.

〈표 4-9〉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지표에 대한 인식

		유용한 지표		필요성이 낮은 지표		모호한 지표	
		빈도	%	빈도	%	빈도	%
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문화접근성	25	16.3	3	2.0	-	-
	문화향유수준	17	11.1	4	2.7	11	7.1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표현 및 참여 기회	12	7.8	2	1.3	7	4.5
	생활문화예술 참여	9	5.9	14	9.4	6	3.9
3.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보호	17	11.1	8	5.4	2	1.3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활용	15	9.8	9	6.0	8	5.2
4.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	11	7.2	8	5.4	16	10.4
	문화공동체	18	11.8	3	2.0	10	6.5
5.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 종 다양성	9	5.9	16	10.7	24	15.6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	-	-	20	13.4	9	5.8
6.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창조자본	3	2.0	33	22.1	29	18.8
	창조기반	4	2.6	23	15.4	25	16.2
7. 특성화 지표(개별기관에서 사업특성에 맞게 설계)		13	8.5	6	4.0	7	4.5

○ 각종 대상사업의 문화영향평가 의무화 필요성

- 문화도시사업(5.96점)과 도시재생사업(5.94점)은 문화영향평가의 의무대상사업으로 비슷하게 선호됨을 알 수 있었음.
- 이밖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5.13점), 법정계획(4.9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개정 법령은 4.31점으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임.

〈표 4-10〉 각종 대상사업의 문화영향평가 의무화 필요성

		전혀 동의 안함	⇐		보통	⇒		매우 동 의	7점 평균 (표준편차)
예비타당성조사 대 상사업	N	1	2	4	8	11	19	7	5.13
	%	1.9	3.8	7.7	15.4	21.2	36.5	13.5	(1.428)
지방재정 투입자심 사 대상사업	N	1	1	3	15	15	12	5	4.88
	%	1.9	1.9	5.8	28.8	28.8	23.1	9.6	(1.278)
도시재생사업	N	-	1	1	1	10	23	16	5.94
	%	-	1	1	1	19.2	44.2	30.8	(1.037)
문화도시사업	N	-	1	1	4	8	17	21	5.96
	%	-	1.9	1.9	7.7	15.4	32.7	40.4	(1.171)
법정계획	N	2	1	1	19	10	11	8	4.90
	%	3.8	1.9	1.9	36.5	19.2	21.2	15.4	(1.445)
국정과제	N	4	-	5	14	15	10	4	4.58
	%	7.7	-	9.6	26.9	28.8	19.2	7.7	(1.500)
제·개정 법령	N	3	1	9	17	11	8	3	4.31
	%	5.8	1.9	17.3	32.7	21.2	15.4	5.8	(1.435)

○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와 컨설팅 간 중요도

- 기본평가이면서 사전평가의 경우 ‘평가 44.8 : 컨설팅 55.2’로 비율이 설정됨.
- 기본평가이면서 과정평가의 경우 ‘평가 54.3 : 컨설팅 45.7’으로 비율이 설정됨.
- 심층평가이면서 사전평가의 경우 ‘평가 52.1 : 컨설팅 47.9’로 비율이 설정됨.
- 심층평가이면서 과정평가의 경우 ‘평가 57.1 : 컨설팅 42.5’로 비율이 설정됨.
- 종합하면, 사전평가의 경우 과정평가보다 컨설팅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4-11〉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와 컨설팅 간 중요도

	평가 (평균 비율)	컨설팅 (평균 비율)
기본평가 + 사전평가	47.6	52.4
기본평가 + 과정평가	55.5	44.5
심층평가 + 사전평가	53.8	46.2
심층평가 + 과정평가	59.3	40.5

○ 문화영향평가의 최적 평가시점

-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시점은 ‘사업의 기본계획 단계’가 40.4%, ‘사업의 실행계획 단계’가 34.6%로 선호됨.

〈표 4-12〉 문화영향평가의 최적 평가시점

		빈도	비율
사업의 기본구상 단계		2	3.8
사업의 기본계획 단계		21	40.4
사업의 실행계획 단계		18	34.6
사업의 실시설계 단계		4	7.7
기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중간 단계	2	3.8
	실시설계 단계에서 한번, 사업시행 후 1년 전·후 평가단계로 한번	2	3.8
	기본구상 단계 이후부터 사업 특성에 맞게 실시	1	1.9
	단계별로 추적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결과평가와 사후평가도 이루어져야 함	1	1.9
	전 단계에 필요	1	1.9

○ 문화영향평가의 개선방안 등 개방형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시됨.

〈표 4-13〉 문화영향평가의 개방형 의견

주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 평가를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필요 - 평가항목은 사업특성별로 조정해주는 것이 필요 - 피평가기관의 설명이나 계획을 청취할 기회 보충 필요 - 문화영향평가는 규제보다는 진흥을 장려하는 평가가 되어야 함 - 종합평가단의 역할을 전문가평가단의 역할과 구분할 필요 - 주민 대상 설문이 어렵게 구성되어 구성, 방법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 -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평가 성공사례 발굴이 필요 - 문화영향평가의 충분한 기간 확보 필요 - 문화영향평가사 제도가 필요하며, 사전 단계로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논의를 위한 포럼,

교육 등이 필요

- 몇 해의 시범/공식 평가를 통해 향후 필수지표와 선택지표의 다양화 필요
- 평가 단계(사전/과정)에 따라 지표설정이나 평가 기준이 달라야 함
- 긍정적 영향을 강화하는 것 보다는 부정적 영향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준거 자료로 활용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 중요

2) 문화영향평가 발전방안의 우선순위 및 중요도 설정

(1) 구조도 설정

- 문화영향평가 발전방안의 우선순위 및 중요도 산정을 위해 의사결정방법인 계층화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기법을 적용함. AHP는 의사결정의 계층을 구성하고 이를 구성하는 요소간 이원비교를 통해 평가자의 중요도 및 우선 순위를 파악하는 의사결정방법론 중 하나임.³²⁾
- AHP 기법의 신뢰성은 전문가의 판단 오차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인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이하 CR)을 계산함으로써 가능한데, CR은 일반적으로 그 값이 0.1(10%) 이하인 경우에 수용

〈표 4-14〉 문화영향평가의 발전방안에 대한 AHP 구조

1차 수준	2차 수준
문화영향평가 대상의 구체화	문화영향평가 의무화 대상사업 범위 설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직권에 의한 사업 선정 가능
	스코핑(scoping) 제도를 활용한 중점검토 항목 및 범위의 조정
평가지표 및 수행방식 개선	평가유형의 체계화와 수행방식의 차별화
	표준평가도구의 정교화 및 지표은행 방식 활용
	전략영향평가의 신설을 통한 중점사업의 평가 및 방법론 개발
추진체계 정비	문화체육관광부 내 전담부서 설치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 중앙-지역 문화영향평가센터 지정 및 운영
	중앙부처 및 지자체 추진체계 구축 (협의체 설치·운영, 평가책임관 지정)
법제도 기반 정비	지자체 문화영향평가 표준조례(안)의 보급 및 확산
	평가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마련
	평가결과 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32) Saaty, Thomas. L. (1982), *Decision Making For Leader: The AHP for Decisions in a Complex World*. CA: Wadsworth.

(2) AHP 결과

○ 1차 수준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 문화영향평가 발전방안의 1차 수준 분석결과 ‘평가지표 및 수행방식 개선(0.3011)’ → ‘문화영향평가 대상의 구체화(0.3005)’ → ‘법제도 기반 정비(0.2303)’ → ‘추진 체계 정비(0.1681)’의 순으로 나타남.
- 다만 1순위와 2순위 간 중요도 차이는 거의 없었음.

〈표 4-15〉 1차 수준의 분석 결과

1차 수준	중요도	우선순위	CR
문화영향평가 대상의 구체화	0.3005	2	0.002
평가지표 및 수행방식 개선	0.3011	1	
추진체계 정비	0.1681	4	
법제도 기반 정비	0.2303	3	

○ 2차 수준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 2차 수준인 ‘문화영향평가 대상의 구체화’에 대한 분석결과 ‘문화영향평가 의무화 대상사업 범위 설정(0.5540)’ → ‘스코핑(scoping) 제도를 활용한 중점검토 항목 및 범위의 조정(0.3065)’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직권에 의한 사업 선정 가능(0.1395)’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6〉 문화영향평가 대상의 구체화

2차 수준	중요도	우선순위	CR
문화영향평가 의무화 대상사업 범위 설정	0.5540	1	0.008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직권에 의한 사업 선정 가능	0.1395	3	
스코핑(scoping) 제도를 활용한 중점검토 항목 및 범위의 조정	0.3065	2	

- 2차 수준인 ‘평가지표 및 수행방식 개선’에 대한 분석결과 ‘평가유형의 체계화와 수행방식의 차별화 (0.4293)’ → ‘전략영향평가의 신설을 통한 중점사업의 평가 및 방법론 개발 (0.2886)’ → ‘표준평가도구의 정교화 및 지표은행 방식 활용(0.2821)’의 순으로 나타남.

- 다만 2순위와 3순위간 중요도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남.

〈표 4-17〉 평가지표 및 수행방식 개선

2차 수준	중요도	우선순위	CR
평가유형의 체계화와 수행방식의 차별화	0.4293	1	0.000
표준평가도구의 정교화 및 지표은행 방식 활용	0.2821	3	
전략영향평가의 신설을 통한 중점사업의 평가 및 방법론 개발	0.2886	2	

- 2차 수준인 ‘추진체계 정비’에 대한 분석결과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 중앙-지역 문화영향평가센터 지정 및 운영(0.4401)’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추진체계 구축 (협업체 설치·운영, 평가책임관 지정)(0.3371)’ → ‘문화체육관광부 내 전담부서 설치 (0.2229)’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8〉 추진체계 정비

2차 수준	중요도	우선순위	CR
문화체육관광부 내 전담부서 설치	0.2229	3	0.002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 중앙-지역 문화영향평가센터 지정 및 운영	0.4401	1	
중앙부처 및 지자체 추진체계 구축 (협업체 설치·운영, 평가책임관 지정)	0.3371	2	

- 2차 수준인 ‘법제도 기반 정비’에 대한 분석결과 ‘평가결과 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0.4397)’ → ‘평가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마련(0.3216)’ → ‘지자체 문화영향평가 표준조례(안)의 보급 및 확산(0.2386)’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9〉 법제도 기반 정비

2차 수준	중요도	우선순위	CR
지자체 문화영향평가 표준조례(안)의 보급 및 확산	0.2386	3	0.014
평가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마련	0.3216	2	
평가결과 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0.4397	1	

○ 모든 세부방안에 대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

- 모든 문화영향평가 발전방안간 중요도 및 우선순위 결과 ‘문화영향평가 의무화 대상사업 범위 설정(0.1665)’ → ‘평가유형의 체계화와 수행방식의 차별화(0.1293)’ → ‘평가결과 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0.1013)’ → ‘스코핑(scoping) 제도를 활용한 중점검토 항목 및 범위의 조정(0.0921)’ → ‘전략영향평가의 신설을 통한 중점사업의 평가 및 방법론 개발(0.08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20〉 종합 우선순위

1차 수준	2차 수준	종합중요도	우선순위
문화영향평가 대상의 구체화	문화영향평가 의무화 대상사업 범위 설정	0.1665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직권에 의한 사업 선정 가능	0.0419	11
	스코핑(scoping) 제도를 활용한 중점검토 항목 및 범위의 조정	0.0921	4
평가지표 및 수행방식 개선	평가유형의 체계화와 수행방식의 차별화	0.1293	2
	표준평가도구의 정교화 및 지표은행 방식 활용	0.0849	6
	전략영향평가의 신설을 통한 중점사업의 평가 및 방법론 개발	0.0869	5
추진체계 정비	문화체육관광부 내 전담부서 설치	0.0375	12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 중앙-지역 문화영향평가센터 지정 및 운영	0.0740	7
	중앙부처 및 지자체 추진체계 구축 (협의체 설치·운영, 평가책임관 지정)	0.0567	9
법제도 기반 정비	지자체 문화영향평가 표준조례(안)의 보급 및 확산	0.0550	10
	평가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마련	0.0741	8
	평가결과 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0.1013	3

3. 피평가기관 만족도 조사결과

○ 문화영향평가의 만족도

- 피평가기관의 만족도는 ‘개별평가기관(용역수행기관)의 역량’이 5.40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부분 4.6점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사업분석에 대한 만족(보고서의 내용 및 질)’이 4.20점으로 상대적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남.
- 평가과정에 대한 불만족 이유: “자료요청 등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 크다”
- 사업분석에 대한 불만족 이유: “실무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진다”
- 평가결과에 대한 불만족 이유: “너무 학술적인 기술이 많아 사례중심의 내용이 많이 포함되었음 좋겠음”
- 문화영향평가의 전반적 불만족 이유: “개선방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

〈표 4-21〉 문화영향평가의 만족도

	7점 평균	표준편차
평가과정에 대한 만족(수행 방법 및 일정)	4.60	1.342
사업분석에 대한 만족(보고서의 내용 및 질)	4.20	1.304
평가결과에 대한 만족(평가 점수)	4.80	1.304
개별평가기관(용역수행기관)의 역량	5.40	1.140
찾아가는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	4.80	1.095
문화영향평가의 전반적 만족도	4.80	1.304

○ 문화영향평가의 활용도

- 문화영향평가는 여러 가지 한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관의 다른 사업도 문화영향평가를 받길 희망한다’는 5.4점으로 높게 나타남.
- ‘평가보고서의 내용에 대체적으로 공감한다’, ‘평가보고서를 통해 사업을 개선하거나 개선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5.0점으로 어느 정도는 실효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됨.
- 다만, ‘평가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 사업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4.60점으로 상대적 평균값이 가장 낮게 나타남.

〈표 4-22〉 문화영향평가의 활용도

	7점 평균	표준편차
평가보고서의 내용에 대체적으로 공감한다	5.00	1.225
평가보고서는 업무에 유용하다	4.80	1.789
평가보고서를 통해 사업을 개선하거나 개선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5.00	1.225
평가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 사업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60	1.673
우리 기관의 다른 사업도 문화영향평가를 받길 희망한다	5.40	1.673

○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중요성 및 필요성

- 문화영향평가의 중요성(4.80점)에 비해 필요성(5.00점)을 약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표 4-23〉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7점 평균	표준편차
중요성	4.80	1.643
필요성	5.00	1.871

- 필요성에 대해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는 ‘문화가 국민의 삶에서 기본적 권리로써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문화는 환경, 고용 등처럼 우리 삶에서 직접적 이해가 낮아 평가제도로서의 필요성은 낮다’가 각각 40.0%로 나타나 다소 상반된 입장이 나타났음.

〈표 4-24〉 문화영향평가 필요성의 이유

	응답 비율
현재 대부분의 정책이 문화와 관련되어 있어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20.0
문화가 국민의 삶에서 기본적 권리로써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40.0
문화는 환경, 고용 등처럼 우리 삶에서 직접적 이해가 낮아 평가제도로서의 필요성은 낮다	40.0

○ 문화영향평가의 인센티브 방안

-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문화영향평가와 예산연계(예산안 편성 및 자금

운영계획안 작성지침과 연계)’가 40%, ‘표창 및 수상’, ‘언론보도 및 홍보지원’, ‘컨설팅 및 지원사업과 연계’가 20%로 다양하게 나타남.

- 각종 평가제도와 연계 지표연계는 평가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전문가와는 다르게 선호되지 않는 경향도 존재

〈표 4-25〉 문화영향평가의 인센티브 방안

	응답 비율
표창 및 수상	20.0
언론보도 및 홍보지원	20.0
컨설팅 및 지원사업과 연계	20.0
문화영향평가와 예산연계(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지침과 연계)	40.0

○ 각종 대상사업의 문화영향평가 의무화 필요성

- 문화도시사업(5.60점)은 문화영향평가의 의무대상사업으로 선호됨을 알 수 있었음.
- 이밖에도 법정계획(4.80점), 제·개정 법령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4.40점)의 순으로 선호되었음.
- 하지만 도시재생사업 및 국정과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4.20점으로 보통 수준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6〉 각종 대상사업의 문화영향평가 의무화 필요성

	7점 평균	표준편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4.40	1.140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4.20	1.304
도시재생사업	4.20	1.304
문화도시사업	5.60	0.894
법정계획	4.80	1.643
국정과제	4.20	1.095
제·개정 법령	4.40	1.140

○ 문화영향평가의 최적 평가시점

- 피평가기관은 문화영향평가의 최적 평가시점을 ‘사업의 기본구상 단계’(60.0%)로 보고 있었음.

〈표 4-27〉 문화영향평가의 최적 평가시점


	응답 비율
사업의 기본구상 단계	60.0
사업의 실행계획 단계	20.0
기타: 사업의 사후 단계	20.0

○ 문화영향평가의 개방형 의견

- 개방형 의견으로는 충분한 평가용역 기간의 보장, 인센티브 부여, 사후평가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음.

〈표 4-13〉 문화영향평가의 개방형 의견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기간이 다소 짧아 심도 있는 컨설팅 및 사업 제언에 대한 기회가 부족한 면이 있으니 용역기간을 길게 확보 필요 - 문화관련 사업은 기획단계에서 문화영향평가를 받아 사업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공모사업의 경우 문화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인센티브 부여 - 문화영향평가는 사후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유사사업 등에 피드백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필요



제5장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1.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
2.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

1.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

1) 방향성 : 문화영향평가의 단계적 확산 및 실효성 확보

- 문화영향평가가 가지는 특수성인 문화적 영향의 비가시성, 장기성, 맥락의존성, 계량화의 어려움과 질적 연구의 중요성, 전문성의 요청 등의 차별적 성격을 고려한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단계적 확산과 개선 모색
- 타 영향평가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법적·제도적 강점과 운영방식의 적극적 벤치마킹을 통한 실효성 제고

〈표 5-1〉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단계적 확산 방향

준비기 (‘1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 : 문화기본법 제정 문화영향평가 실행방안 연구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지정(문광연) • 2014 : 전문평가 시범실시(4건) • 2015 : 전문평가 시범실시(5건)
본평가 시행 (‘16~’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 평가지침 작성 및 전문평가 본격 실시(15건) 제1회 심포지엄 및 제1회 자체평가포럼 개최 • 2017 : 표준평가모델 개발, 전문평가(14건), 자체평가 시범실시(1건) 제2회 심포지엄 및 제2회 자체평가포럼 개최
확산 및 실효성 확대 (‘18~)	▶ 1단계 : 경험 및 인식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 시범실시 확대 : 1 광역시 2 자체평가 추진 - 책임관 지정, 자체평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환류 • 전문평가 체계 개편 및 질적 고도화 : 심층평가 / 전략평가, 평가에 집중 • 문화기본법 개정을 통한 실효성 제고 • 추진체계 정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영향평가팀 신설 및 인력확충 • 자체평가 우수기관, 전문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 및 수상
	▶ 2단계 :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문화영향평가 조례 제정 확산 • 지역문화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지역문화영향평가센터 지정 및 운영 • 문체부 전담팀 구성
	▶ 3단계 : 문화영향평가의 제도적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합동업무평가 등 평가제도에 반영 • 예산 연계
	▶ 4단계 : 문화영향평가제도의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영향평가법 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단계 :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강화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개발사업 인허가 전에 문화영향평가를 필수적 절차로 포함 • 문화영향평가 개선권고의 구속력 강화 |
|--|

(1) 1단계 :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경험 및 인식 확산

- 공공정책에 문화적 가치의 반영을 유도·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되 자체평가와 전문평가의 2개 트랙으로 구분하여 운영
- 자체평가 시범실시를 전국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정책 담당자들이 정책 등을 문화적 관점에서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가치의 내면화와 실행을 통해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유도
 - 자체평가 결과 정책 등의 구체화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문화컨설팅을 선택적으로 지원하여 타 부문의 문화적 수요에 대응
 - 광역지자체 단위 1개 이상씩 자체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후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
 - 자체평가 실시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체평가 수행을 위한 책임관 지정,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등 환류 체계 구축
- 전문평가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평가지표 및 방법론의 개선, 평가모델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전략적 연구 수행
- 문화기본법 개정을 통한 실효성 제고
 - 자세한 내용은 후술
- 중앙 단위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직적 위상을 제고하고, 인력 확충을 통한 추진체계 정비
- 자체평가 우수기관, 전문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 및 수상 등 인센티브 도입을 통한 문화영향평가의 확산 견인

(2) 2단계 : 지원체계 구축

- 지자체 단위에서 문화영향평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문화영향평가 표준조례(안)’의 보급 및 확산 유도
- 지자체 단위의 문화영향평가 심의·조정기구로서 지역문화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 지역 단위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구인 ‘지역문화영향평가센터’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한

지역 단위 문화영향평가 추진체계 정비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팀 구성

(3) 3단계 : 문화영향평가의 제도적 확산

- 문화영향평가가 제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평가제도 및 예산제도와 연계
 - 지자체합동평가에 문화영향평가 교육실적, 수행실적, 평가 결과 반영실적을 지표로 포함하여 지자체 참여도를 제고하고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확산 유도
 - 이 외에 지역문화지표, 지역관광발전지표, 문화도시 지정 심사 등에 지표에 포함하는 방안 고려
-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적 개선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 결과 자료를 해당 사업의 예산편성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하고, 재정당국에서 이를 예산편성에 고려할 수 있도록 예산 연계(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 계획안 작성 지침과 연계)

(4) 4단계 : 문화영향평가제도의 고도화

- 문화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개별법인 「문화영향평가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공고화

(5) 5단계 :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강화

- 환경영향평가제도나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이 주요 개발사업 인허가 전체 문화영향평가를 필수적 절차로 포함하여, 주요 개발사업의 문화적 영향을 사전에 판단하고, 문화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조치를 의무화함
- 문화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의 구속력을 강화

2.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

- 앞서 제시한 문화영향평가의 중장기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문화영향평가 대상의 구체화 방안
 - 평가지표 및 수행방식의 개선방안
 - 추진체계 정비 방안
 - 문화영향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기반 정비 방안

1) 문화영향평가 대상의 구체화와 법정화

- 문화영향평가가 꼭 필요한 정책이나 계획이 평가대상에서 누락됨으로써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취지가 몰각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문화영향평가 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이하에서는 의무적 문화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정책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정화되어야 할 의무평가대상의 범위를 제안하도록 함

(1) 문화영향평가 의무화 대상사업 범위의 검토

가.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 「국가재정법」에 따라 추진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경우 대규모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이에 따른 문화적 영향의 범위와 크기가 광범하다는 점에서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임
 - 다만 2017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을 통해 대상기준을 기존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향후 대상사업의 건수는 축소될 것으로 예측됨

〈표 5-2〉 지방재정법 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국가재정법」 제38조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초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 「국가재정법」 상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실적은 다음과 같음

- 연도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대략 연간 20건~30건 가량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음

〈표 5-3〉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1999~2015년)

(단위 : 건)

연도	도로	철도	항만	문화 · 관광 · 건축	수자원(댐)	기타	합계
1999	11	2	1	4	1	1	20
2000	11	7	5	2	1	4	30
2001	20	14	1	5	-	1	41
2002	9	8	2	2	5	4	30
2003	10	7	3	5	5	2	32
2004	24	13	1	2	3	12	55
2005	11	6	2	1	3	7	30
2006	27	10	5	5	1	4	52
2007	30	5	1	2	1	7	46
2008	12	2	4	3	2	15	38
2009	22	5	2	2	12	20	63
2010	7	14	2	1	2	22	48
2011	6	5	2	11	5	14	43
2012	7	7	5	6	5	5	35
2013	5	-	1	2	1	4	16
2014	6	4	2	12	2	8	34
2015	3	3	2	7	-	3	18
2016	5	5	2	3	4	3	23
계	229	117	43	75	53	136	654

출처 : KDI.(2017). 2016년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표 5-4〉 2016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연번	사업명	주관
1	다사~왜관 광역도로사업	국도교통부, 대구광역시
2	대산~당진 고속도로 신설사업	국도교통부, 한국도로공사
3	경부고속도로 회덕IC연결도로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대전광역시
4	국도4호선 서대전IC~두계3가 도로 확장	국도교통부, 대전광역시
5	월전동~무진로간 도로개설사업	국도교통부, 광주광역시
6	철도물류 수송력 향상을 위한 유효장 확장사업	국도교통부
7	춘천~속초 철도 건설사업	국도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8	인천발 KTX직결사업	국도교통부
9	수원발 KTX직결사업	국도교통부
10	충천권철도(계룡~신탄진)건설사업	국도교통부
11	흑산도항 건설사업	해양수산부
12	인천항 아암물류 2단지 조성사업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13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사업	문화체육관광부
14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농림축산식품부
15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16	용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환경부, 광주광역시
17	광주천(양동복개상가)생태하천 복원 및 도심재생사업	국도교통부, 광주광역시
18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제주특별자치도
19	점동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	농림축산식품부
20	부산사상 노후공업지역 재생사업	부산광역시
21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	산업통상자원부
22	해외곡물유통망구축사업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출처 : KDI.(2017). 2016년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 다만 문화영향평가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대상 사업 중 문화적 영향의 범위와 크기가 광범한 사업을 선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중 중앙투자심사대상사업

-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중 ‘중앙투자심사대상사업’의 경우에도 대규모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이에 따른 문화적 영향의 범위와 크기가 광범하다는 점에서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5-5〉 「지방재정법」 상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弘報館) 사업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

라.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② 삭제 <2014.11.28.>

③ 삭제 <2014.11.28.>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심사

가.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0억원(해당 관할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 이상인 시·군·구는 1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군·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업비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다. 시·군·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라. 시·군·구의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시·도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바. 시·도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도의뢰심사

가. 시·군·구(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군·구는 제외)의 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나. 삭제 <2014.11.28.>

다. 시·군·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라. 시·군·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군·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3. 중앙의뢰심사

가. 시·도의 사업비 200억원 이상 또는 시·군·구의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삭제 <2014.11.28.>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라. 시·도 또는 시·군·구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바.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나.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헬기 구입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라.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중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범위는 시도의 경우 200억원 이상, 시군구의 경우 100억원 이상 사업이며, 중앙투자심사대상 건수는 2012년 215건에서 2016년 55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다만 2017년 정부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 등으로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 범위를 기존 200억원 이상 사업에서 3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시군구는 기존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을 밝혀, 대상 건수는 축소될 것으로 예측됨

〈표 5-6〉 중앙투자심사대상 건수(2012~2016)

	2012	2013	2014	2015	2016
건수	215	287	482	447	553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7. 8.17).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 추진 - 주민중심, 재정 책임성 확보 연계

- 다만 여기에서도 문화영향평가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대상 사업 중 문화적 영향의 범위와 크기가 광범한 사업을 선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다.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새뜰마을 사업’은 쇠퇴한 도시 또는 지역의 재생 및 개발을 통해 해당 지역 및 주민의 삶에 상당한 문화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은 2016년과 2017년에 각 5개 사업이 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평가가 진행된바 있으며,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역시 2017년 1개 사업이 선정되어 평가가 진행되고 있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 경제기반이 상실되고 근린 생활환경이 악화된 도시 내 쇠퇴지역의 경제·사회·물리적 재생을 목표로 함

- 2014년 13곳의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2014-2017) : 도시경제기반형(2건, 각 250억), 근린재생형(11곳, 각 60 또는 100억)
 - i) 도시경제기반형 :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역세권, 노후산단, 폐항만 등을 경제거점으로 민·관이 함께 개발하고, 파급효과를 주변으로 확산하는 거점확산형 사업 방식 추진
 - ii) 근린재생형 : 과거 행정·상업·업무 등의 중심이었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적 처방을 복합 적용하는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사업, 낙후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주민공동체 주도로 지역 특색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일반 근린재생형 사업으로 구분
- 2016년 도시재생일반지역 33곳을 선정 : 경제기반형(6),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형(27), 일반근린재생형(18)

〈표 5-7〉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2014~2016)

	선정 대상지역	도시재생사업
2014	13 (도시재생선도 지역)	경제기반형 2(각 250억), 근린재생형 11곳 (각 60억 또는 100억)
2016	33 (도시재생일반 지역)	경제기반형 6곳(각 500억, 국비 250억, 총 6년간) 근린재생형 27곳(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8곳 : 각 200억원, 국비 100억, 일반근린재생형 18 곳 : 각 100억원, 국비60억, 총 5년간)

출처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http://www.city.go.kr>)

- 한편 2017년 새로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향후 매년 100곳씩 5년간 총 500곳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을 펼치겠다고 공언하여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규모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연간 10조원씩, 총 50조원 투입 예정)
 - 2017년에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곳 위주로 신규 사업지역을 100곳 이상 선정 예정
 - 신규사업 물량의 70% 수준을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선정하고, 국토교통부는 최종 단계에서 적격 여부를 검증할 예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 ①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국토부) :2010년~
 -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지자체가 스스로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기초지자체에

예산을 포괄보조로 지원하는 사업

- 대상지역 : 도시활력증진지역 143개 시·군·구
 - 특별·광역시·도의 군·구 및 시 지역 중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단 도농복합시 중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대도시)는 도시활력증진지역에 해당)
- 도시생활환경개선(171개, 901억원, 1개소당 총 사업비 60억원 이하, 4년 이내), 지역 역량강화(37개, 33억원, 1개소당 총 사업비 4억원 이하, 4년 이내) 유형으로 구분
- 2017년 208개 세부사업 추진 중(934억원)

〈표 5-8〉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2011~2017)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예산액	96,400	96,396	108,597	103,167	104,167	97,128	93,367
	사업수	115	116	120	157	183	186	208
계속사업		83	92	83	91	122	135	157
신규사업		32	24	37	66	61	51	51

출처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http://www.city.go.kr>), 2017년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담당자 워크숍 자료.

- ②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농림부, 해당수산부)
 -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 도모
 - i) 농촌중심지활성화 : 농촌 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 거점으로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 수행(선도지구/일반지구)
 - ii) 창조적마을만들기 :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예산은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마을은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어촌 마을 조성(마을단위 종합개발,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경제(체험·소득)/ 환경(경관·생태) / 신규마을, 권역단위종합개발)
 - iii) 시·군역량 : 창의적인 S/W 중심 사업추진을 통한 문화적, 공익적,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 사업효과의 시·군 전체 파급과 시·군 자체의 역량강화(시·군창의, 시·군 역량 강화)
 - iv) 기초생활인프라정비 :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빈집정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소규모농촌용수개발, 지표수보강개발

〈표 5-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유형별 지원금액

사업명			사업비 (국비 70%, 지방비 30%)	사업기간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80억원 이하	5년 이내
	일반지구		60억원 이하	
창조적마을만들기	마을단위	종합개발	10억원 이하	
		공동문화, 복지	5억원 이하(단, 소득사업은 2억원 이하)	
		경제(체험, 소득)		
		환경(경관, 생태)		
	신규마을	1.5~36억원 이내		
	권역단위	종합개발	40억원 이하	
시군 역량	시군단위	시군 창의	20억원 이하	5년
		시군 역량강화	50백만원/100백만원/150백만원	1년
			0백만원	
기초생활인프라정비			실소요액	1년

출처 :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http://www.raise.go.kr>)

○ 관련 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제34조(생활기반계정사업의 세출),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의3(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 농어촌정비법 제52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내지 제71조(기술지원 등)

□ 새뜰마을 사업

-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필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지원
- 2015년 85개소, 2016년 66개소가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17년에도 농어촌 60억원(3년), 도시 40억원(4년)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임

〈표 5-10〉 새뜰마을사업 추진현황(2015~2016)

	예산	사업수			총사업비	비고
		계속	신규	합계		
2015	550억원	-	85	85	2,040억원	농촌 55, 농촌 30
2016	700억원	85	66	151	1,071억원	농촌 44, 도시 22

출처 : 지역발전위원회·국토교통부·NH. (2017). 2017년 새뜰마을사업 가이드라인 설명회 자료집

라. 문화도시사업

- 이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문화도시사업’의 경우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이 대상지역 및 주민들의 삶에 상당한 문화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근거한 문화도시 지정 및 활성화 지원정책

- 문화도시 조성사업 : 지역의 문화가치를 바탕으로 도시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품격있는 문화브랜드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친문화적 도시 조성 10년(예비사업 5년, 문화도시 지정·활성화사업 5년)간 약 150억~200억원 지원(국고 40%, 지방비 60%)

- i)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 시민참여 및 문화적 환경기반 조성을 통해 도시 내적인 문화역량강화 사업 중점 지원

- 문화도시 예비사업으로 5년간 약 37.5억원 (연간 7.5억원 수준)
- 문화도시형 : 2017년 현재 20곳 → 2022년 40곳, 5년간 연간 7.5억원 지원
- 문화마을형 : 2017년 현재 32곳 → 2022년 60곳, 3년간 연간 2억원 지원

- ii) 문화도시 지정사업 : 도시의 문화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 문화 브랜드 및 사회활성화 사업 중점 지원 (2022년까지 문화도시 30개소 지정 목표)

- 문화도시지정활성화사업으로 5년간 약 125~200억원(연간 15억원 기본 + 선별 25~125억원 차등)

		선정지역	비고
2006~	지역거점형 문화도시사업	4	경주, 전주, 공주·부여, 부산
2014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도시형 20 문화마을 32	

마. 법정계획

- 구체적인 사업은 아니지만 법률 및 조례에 의해 5년 이상의 주기로 반복적으로 수립

되는 법정계획의 경우, 관련 대상사업들의 추진방향과 사업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4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자료에 따르면 법령에 규정된 법정계획의 수는 약 137개에 달함
 - 기본법 상 법정계획의 수 : 48개
 - 진흥법 상 법정계획의 수 : 54개
 - 특별법 상 법정계획의 수 : 35개

[예시]

국토종합계획(국토기본법)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근로복지기본법)
 건축정책기본계획(건축기본법)
 주거종합계획(주거기본법)
 과학기술기본계획(과학기술기본법)
 외국인 정책의 기본계획(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건축자산진흥 기본계획(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연간 발표되는 법정계획의 수는 약 20~30건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됨
 - 2015년에 수립되어 발표된 법정계획의 수는 약 14건
 - 2016년에 수립되어 발표된 법정계획의 수는 약 32건으로 추정됨
- 이 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개발이 수반되는 법정계획의 경우 문화영향평가 의무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바. 국정과제 및 지자체 단체장의 주요시책

-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임기 동안 국정운영의 나침반이 될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세부과제를 확정하여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바, 국정과제로 선정된 정책의 경우 정책적 중요도가 크고, 특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하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는 다음의 [그림]과 같음
- 한편 지자체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요 시책으로 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국정과제와 마찬가지로 지자체 단위에서 정책적 중요도가 크고, 특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하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의무화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5대 국정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대 국정전략	1. 국민주권의 쏠림 민주주의 실현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3.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5.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	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그림 5-1]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사. 법령

- 구체적인 정책사업이나 제도는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 정책적 목표와 수단, 내용의 큰 틀이 규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등)을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경우 제·개정 법령 전부에 대해 의무적 평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중인 법령에 대해서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2) 문화영향평가 대상 선정방식

- 앞서 문화영향평가 의무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할 대상범위를 구체화하였으나, 해당범위에 포함되는 대상 전체를 문화영향평가 하는 것은 효과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문화영향평가 의무 대상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되, 실제적인 평가 대상의 선정은 별도의 선정기구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대상 선정방식은 「문화기본법」에 규정된 의무평가대상 중 중앙 단위 및 지역 단위의 문화영향평가 심의기구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실시하는 중앙 단위 전문평가의 경우 국회의 의결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계획·법령 등이 문화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문화영향평가 심의의결기구로는 ‘중앙문화영향평가위원회’와 ‘지역문화영향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자세한 내용은 추진체계 정비에서 후술하도록 함
- 한편 문화영향평가의 유형은 크게 중앙 및 지자체 소관기관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자체평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3자인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수행하도록 하는 ‘전문평가’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이나 국정과제, 법률에 의해 주기적으로 수립되는 법정계획과 같이 사업의 규모가 크고 그 영향범위가 전국적인 경우에는 자체평가보다는 중앙 단위에서의 전문평가 대상이 보다 적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임

2) 평가지표 및 수행방식 개선

(1) 평가유형의 체계화와 수행방식의 차별화

□ 평가유형의 체계화

- 공공정책에 문화적 가치의 반영을 유도·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되, 자체평가와 전문평가의 2개 트랙으로 구분하여 운영

〈표 5-11〉 2017 문화영향평가 유형 분류

유형	내용
전문평가	제3자인 전문 평가연구기관이 수행 (개별평가 + 종합평가)
기본평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정책 및 계획 또는 전문적·구체적인 문화컨설팅이 보다 필요한 대상에 대해 전문평가기관이 평가
심층평가	대규모의 정책 및 계획 또는 국민에 미칠 문화적 영향이 큰 정책으로 엄밀한 분석·평가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 전문평가기관이 평가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평가 수행



〈표 5-12〉 향후 문화영향평가 유형 분류 변화

유형	내용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평가 수행
전문평가	제3자인 전문 평가연구기관이 수행 (개별평가 + 종합평가)
심층평가	국민에 미칠 문화적 영향이 큰 정책과 계획으로 엄밀한 분석·평가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 전문평가기관이 평가
전략평가	문화영향평가 방법론 개발 및 질적 고도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평가기관이 평가 및 연구

① 자체평가

- 소관기관 및 정책담당자들이 정책 등을 문화적 관점에서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고 문화적 가치의 내면화와 실행을 통해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 유도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소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공무원이 직접 또는 전문평가기관 등에 위탁 등을 통해) 문화영향평가서를 작성
- 작성의 용이성 제고를 위해 체크리스트 방식을 활용하고 자체평가서 작성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및 교육 제공

- 자체평가 결과 정책 등의 구체화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택적으로 전문가 문화컨설팅을 지원하여 타 부문의 문화적 수요에 대응
- 시범적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정책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중앙행정기관 및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
- 자체평가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크게 확대하고, 중앙 단위 자체평가의 지원과 관리는 중앙문화영향평가센터(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지자체 자체평가의 지원과 관리는 지역문화영향평가센터(지역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에서 수행하도록 역할 배분
- 다만 지역문화영향평가센터의 지정과 운영이 이루어지기까지 자체평가의 기본적 틀 설계와 운영은 한시적으로 중앙문화영향평가센터(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

② 전문평가

- 문체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로 제3자인 전문평가기관이 공공정책의 문화적 영향을 예측·평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전예방대책 및 정책개선 권고 또는 강제
- 현장실사, 문헌분석, 주민의견수렴, 전문가평가를 통해 정책 등의 문화적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개선과제를 도출
- 기존에 ‘찾아가는 컨설팅’을 전문평가의 필수적 절차로 규정함에 따라, 평가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평가는 ‘대상 정책 등의 문화적 영향을 평가’하는데 집중하고, 평가 결과 문화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전문가 컨설팅단을 통한 컨설팅 수행 (평가와 컨설팅의 분리)
- 기본평가 유형을 삭제하고, 심층평가를 대상정책의 규모와 중요성에 따라 차등지원
- 주민 등 정책관계자에 대한 표준설문지 및 통합설문조사의 보완과 개선
- 평가초점에 따른 평가유형의 세분화와 정교화
 - 대상정책의 유형 및 내용에 따라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항목(지표)을 사전에 설정하고 이에 집중하여 문화영향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
- 전략문화영향평가 트랙을 신설하여 전문평가의 평가방법론 개선 및 질적 고도화 추구
 - 문화영향평가의 계량화 방법론 개발(영향의 크기 측정, 예측방법, 화폐가치 등), 문화적 최소기준(cultural minimum standard)의 설정 연구, 지표개선방안 연구, 기본계획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모델 연구, 법령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모델 연구 등을 위한 전략적 연구 수행

- 실험집단-비교집단 사전사후 측정설계 등을 통한 이중차분(DID, Difference-in-Difference) 모형을 이용하여 사업의 문화적 영향을 보다 엄밀하게 추정하거나, 사업 추진 이전의 현황 값(base-line)과 사업의 문화적 영향에 대한 정량화(화폐화 등) 등에 대한 연구, 다년도 연구 등을 통해 향후 문화영향평가의 평가방법론을 정교화하고,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

(2) 스코핑(scoping) 제도를 활용한 중점검토 항목 및 협의내용 조정

- 문화영향평가의 결과는 평가범위 및 검토항목의 설정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범위 및 검토항목의 조정을 누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함
 - 평가대상이 미치는 문화적 영향은 대상 정책 및 계획의 내용적 범위나 대상적 범위, 시간적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음
 - 또한 대상 정책 및 계획의 내용 및 유형에 따라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화적 영향은 달라질 수 있음
-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스코핑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에서 스코핑제도는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하기 전에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중점검토 항목과 범위’ 등을 심의·결정함으로써 평가서 작성기간 단축과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임
 - 환경영향평가법 상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의 장 및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구성·운영해야 하며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등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됨
 -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협의내용의 조정,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의견수렴 내용과 협의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 문화영향평가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는 소관기관별로 ‘문화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자체평가 및 전문평가의 평가범위 및 검토항목 등을 조정하고, 평가의 전과정에 걸쳐 정책관계자의 참여와 숙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영향평가협의회는 소관기관 담당자(담당공무원), 개별평가기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등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임

(3) 표준평가도구의 정교화 및 지표은행 방식 활용

- 2년간의 시범평가와 2년간의 본평가를 통해 문화영향평가 표준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제시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개별 대상 정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지표의 적용 및 해석, 함의의 도출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상정책의 유형(사전/사후, 사업내용에 따른 유형)에 따라 평가지표의 가중치, 해석과 적용을 달리할 수 있도록 표준평가도구를 정교화하고, 다양한 지표표를 확보 및 지표은행 방식의 활용을 통해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문화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

3) 추진체계 정비

(1) 문화체육관광부

- 타 분야 문화영향평가의 경우 중앙부처 차원에 해당 영향평가를 주관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데 문화영향평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주관부서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고용영향평가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일자리정책평가과에서 관장
 -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성별영향평가과에서 관장
 - 환경영향평가 : 기후미래정책국 국토환경평가관에서 관장

(2) 중앙부처 및 지자체 추진체계 구축

가. 문화영향평가협의체의 위상 및 권한 강화 : 중앙 및 지방 단위 심의·조정기구의 설치

- 문화영향평가제도가 정책의 문화화를 통해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한 ‘문화영향평가협력체계(문화영향평가협의체)’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문화영향평가협력체계(문화영향평가협의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14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기획관 또는 관계 국장급 공무원, 전문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이 위원으로 되어있으며,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및 방법, 대상 선정 등에 대해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문화영향평가협력체계(문화영향평가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국장급이어서 실제 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그 권한 또한 단순한 협의에 불과하여 협의체에서의 결정이 심의 또는 의결에 준하는 구속력을 갖기가 어려움

- 고용영향평가의 경우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고용정책심의회’와 ‘지역고용심의회’를 두어 고용영향평가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근거하여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와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고용정책심의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향후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문화기본법」의 개정 등을 통해 관계 기관과 문화영향평가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심의·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1안] (중앙)문화영향평가위원회 및 지역문화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중앙 및 지역에서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중앙) 문화영향평가위원회’와 ‘지역문화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문화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주요 관계자들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이 경우 (중앙)문화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기획관 또는 관계 국장급 공무원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단순 협의권한 뿐 아니라 심의·조정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는 아래에 후술할 문화영향평가책임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한편 지역문화영향평가위원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지역문화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또는 아래에 후술할 문화영향평가책임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2안] (중앙)문화정책심의회 및 지역문화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 중앙 및 지역에서 문화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문화정책심의회’와 ‘지역문화정책심의회’를 설치하고 문화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항 이외에 타 부처와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한 사항 전반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이 경우 (중앙)문화정책심의회는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지역문화정책심의회’의 경우 시·도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지역의 문화유관기관(관계공무원, 지역문화재단, 예술인협회 등)의 대표를 위원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나. 문화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운영

-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책임자나 공식적인 채널이 없어, 문화영향평가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평가의 수행 및 관리, 결과 반영 및 모니터링에 대한 확인, 인식 확산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부분의 중앙 및 지방공무원들의 경우 문화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아 설사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문화영향평가를 받는 소관기관 담당자의 경우 순환보직으로 인해 평가 도중에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평가과정에서의 지원이나 관리,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제기됨
- 향후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문화영향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문화영향평가책임관(실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문화영향평가 관련 업무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의 강화 : 중앙-지역 문화영향평가센터 지정 및 운영

- 문화영향평가의 실질적 수행 및 전반적 지원·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의 강화가 필요함
 - 현재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등 지정 고시」에 따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문화영향평가 사업 전반을 지원·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한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경기도 문화재단’이 경기도 지역문화영향평가센터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경우 통계평가센터 내에 ‘문화영향평가센터’라는 공식적인 조직체계 없이 소수인원이 문화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중요성과 업무 부담에 비추어 상당히 취약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 문화영향평가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전문평가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뿐 아니라, 표준평가모형의 개발 및 개선, 자체평가, 모니터링, 교육 및 컨설팅, 각종 포럼 및 네트워킹, 문화영향평가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 등의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의 조직적 위상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의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가 확산되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 문화영향평가센터가 지정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문화영향평가센터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 지역문화영향평가센터는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지정하도록 하되, 지자체가 출연한 지역발전연구원이나, 광역 문화재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그림 5-2] 문화영향평가 추진체계(안)

4) 문화영향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기반 정비

- 현재 제정되어 있는 「문화기본법」에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보완 사항을 포함하여 개정하는 방안과, 별도의 「문화영향평가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 보다 실현가능성이 높은 「문화기본법」 개정방안을 제시 하도록 함

(1) 문화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

□ 문화영향평가 대상의 구체화와 대상선정 기준 및 절차의 규정

- 문화영향평가 의무 대상 정책과 계획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자체평가와 전문평가의 대상 선정기준 및 절차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을 「문화기본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소관계획, 사업, 법령’으로 제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자체평가’의 대상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평가’의 대상을 구분하여 제시함
고용영향평가제도의 경우 전문평가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영향평가의 경우 전문평가 이외에도 자체평가를 통해 수행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유사하게 자체평가와 전문평가를 구분하여 제시하는 방식을 채택
- 문화영향평가(자체평가) : 「문화기본법」 제5조의2에 규정
 -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소관 계획, 사업, 법령을 자체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대상정책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우 열거된 대상을 모두 평가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경우 평가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으므로, 문화영향평가제도의 경우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정책·계획·법령의 범위를 제시하고, 중앙문화영향평가위원회 또는 지역문화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여 문화영향평가가 보다 필요한 대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함
 - 단, 이 경우 중앙 또는 지역문화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내실 있는 구성 및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중요해짐 (표준조례안의 개발 및 배포 등)
 - 시행령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문화도시사업, 중앙투자심사대상사업,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5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시행중 또는 제·개정 추진 중인 법령, 국정과제,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대상선정의 절차는 중앙문화영향평가위원회 또는 지역문화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칠 것을 명문화함(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
 - 자체평가는 소관기관이 직접 문화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하며, 소관기관이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문화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문화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문화기본법」 개정(안)

제5조의 2 (문화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계획 및 사업, 법령(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유사입법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제8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 「문화기본법」 시행령(안)

제2조(문화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계획 및 사업, 법령(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3.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사업
4.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
5.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5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6. 시행중 또는 제·개정 추진 중인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
7. 국정과제
8.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책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제5조의4에 따른 중앙 또는 지역문화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제3조(문화영향평가서의 작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문화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대상 정책이 미치는 문화적 영향
3. 문화적 가치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유사입법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제31조

○ 전문문화영향평가 : 「문화기본법」 제5조의3에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전문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은 제5조의3 제1항에 직접 규정

-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법령으로 소관기관으로부터 전문평가를 요청받거나, 중앙문화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평가를 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전문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서 문체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정책, 국회가 의결로 실시를 요구한 정책)에 대해 시행하도록 규정함(법 제5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 다만, 대상 선정 시 대상정책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정도, 평가의 가능성과 평가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함(시행령 제4조 제1항)
- 전문평가를 실시할 경우 소관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이 경우 소관기관은 대상정책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법 제5조의3 제2항)
- 전문평가 결과 공개의무를 규정(법 제5조의3 제4항)
- 전문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권한 부여(법 제5조의3 제5항)
- 정책제언 또는 개선권고에 따른 개선대책의 수립 및 통보의무 부여(법 제5조의3 제6항)
- 개선대책 시행 종료 후 결과 통보의무 부여(법 제5조의3 제7항)

○ 「문화기본법」 개정(안)

제5조의 3 (전문문화영향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법령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중앙문화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해서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유사입법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 「문화기본법」 시행령(안)

제4조(전문문화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① 법 제5조의3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대상 정책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정도, 평가의 가능성과 평가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려면 정책명,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문화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문화영향평가 요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이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
2. 국회가 그 의결로 문화영향평가의 실시를 요구한 경우

※ 유사입법례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2조

□ 자료요청 권한 및 협조의무 신설

○ 문화영향평가에 필요할 경우 소관기관에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소관기관의 협조의무를 규정

○ 「문화기본법」 개정(안) : 법 제5조의3 제3항

제5조의 3 (전문문화영향평가)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교육·연구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유사입법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제3항

□ 문화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의 정책반영 조항 신설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자체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문화기본법」 개정(안)

제5조의 2 (문화영향평가)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유사입법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

□ 평가결과의 공개의무 규정 신설

- 전문문화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공개할 의무의 신설
- 「문화기본법」 개정(안)

제5조의 3 (전문문화영향평가)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유사입법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2조,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제4항

□ 검토의견 통보 및 정책제언·개선권고 근거조항 신설

- 문화영향평가(자체평가)결과에 따른 검토의견 통보에 대한 근거와, 전문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 및 개선권고 근거조항을 신설
- 「문화기본법」 개정(안)

제5조의 2 (문화영향평가)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문화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조의 3 (전문문화영향평가)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의 결과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상 정책에 관하여 제언을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유사입법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1조,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제5항

□ 소관기관의 개선대책 수립의무 및 통보의무 조항 신설

- 전문문화영향평가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책개선 및 개선권고를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또한 개선대책의 시행이 종료된 후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문화기본법」 개정(안)

제5조의 3 (전문문화영향평가) ⑥ 제5항에 따라 대상 정책에 관하여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개선대책을 수립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대책의 시행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유사입법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1조,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제6항

□ 문화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

- 문화영향평가의 범위나 항목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대상정책의 문화적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대상정책 주요 관계자들로 구성된 ‘문화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해 평가범위나 항목 등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함
-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스코핑(scoping) 위원회의 일종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개념을 적용하되, 심의기구가 아닌 협의기구로 기능과 권한을 완화시킴
- 「문화기본법」 개정(안)

제5조의 3 (전문문화영향평가)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의 평가범위, 항목 등의 협의·조정을 위해 문화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사입법례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 「문화기본법」 시행령(안)

제5조(문화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5조의3제7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협의회(이하 “문화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문화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정책 소관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2. 법 제5조의5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책임관
 3. 대상 정책, 문화영향평가 등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3. 대상정책 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③ 문화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대상 정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유사입법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 중앙문화영향평가위원회와 지역문화영향평가위원회의 근거 조항 신설

-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중앙문화영향평가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장 소속으로 지역문화영향평

가위원회를 두도록 함

- 기존에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었던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경우 협의권한만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던 바, 문화영향평가위원회는 ‘심의·조정권한’을 부여하도록 함
- 중앙문화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역문화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문화기본법」 개정(안)

제5조의 4(중앙 및 지역문화영향평가위원회) ①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문화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문화영향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선정,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문화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문화영향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문화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문화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역문화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⑤ 지역문화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유사입법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 제13조의2,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

○ 「문화기본법」 시행령(안)

제6조(중앙문화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중앙문화영향평가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재청 등에 소속된 법 제5조의5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책임관
2.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인 이내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⑥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유사입법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고용정책기본법」 제4조~제20조

□ 문화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조항 신설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문화영향평가(자체평가) 및 전문문화영향평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전달, 평가서의 작성, 개선조치의 제출, 문화영향평가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운영을 규정
- 「문화기본법」 개정(안)

제5조의 5(문화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문화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문화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2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의 실시 및 문화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2에 따른 문화영향평가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2에 따른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5. 제5조의5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문화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사입법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4조

○ 「문화기본법」 시행령(안)

제7조(문화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의5에 따라 소속 실장·국장(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과장·담당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에서 문화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유사입법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12조

□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교육 조항 및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의 지정 근거 조항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동

○ 유사입법례와 마찬가지로 문화영향평가 교육에 대한 내용과,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의 지정 근거 조항을 법률로 규정

- 정책의 문화적 영향을 예측·평가하는 데에는 일정한 교육이 반드시 수반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으로는 지역출연연구원이나 지역문화재단 등이 유력하다는 점에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규정

○ 「문화기본법」 개정(안)

제5조의 6(문화영향평가를 위한 교육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를 지원하는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재출연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민간 연구기관
4.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

※ 유사입법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5조, 제17조,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제8항

○ 「문화기본법」 시행령(안)

제8조(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의5제2항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 유사입법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14조,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3조

(2) 지자체 문화영향평가 표준조례(안)의 보급 및 확산

○ 문화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문화영향평가를 지자체 차원으로도 확산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자체 문화영향평가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보급 확산할 필요가 있음

○ 표준조례(안)은 각기 다양한 지역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정한 것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원칙적·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이러한 방향에서 「문화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자체 문화영향평가 표준조례에서 구현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목적, 정의, 지자체장의 책무,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평가결과의 반영, 연차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지역문화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문화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문화영향평가 교육,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의 설치·지정·지원, 주민참여 조성 등에 대한 내용임
 - 한편 지자체 단위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실행할 경우 지역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지역 문화영향평가센터)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지역문화영향평가센터는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지정하도록 하되, 지자체의 문화재단 및 지역발전연구원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000 지자체 문화영향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제5조 제4항(개정안에 따르면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5)에 따라 문화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문화가 가진 가치를 널리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영향평가”란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개정안에 따르면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계획 및 사업, 법령(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000 지자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실·국·본부 및 직속기관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000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 장의 책무) ① 00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주민의 문화권 보장과 문화적 정체성의 보존, 문화다양성과 창조성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예측가능하고 효과적인 문화영향평가를 위해 제5조의 대상을 포함한 문화영향평가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①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기본법」 제5조의2 제1항과2항,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

1.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정책
 2.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3.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문화적 관점에서 주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4.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과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 300명 이상의 서명으로 문화영향평가의 실시를 청구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0조에 따른 000지역문화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자체장은 대상 정책을 평가대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대상 정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연차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첫 번째 임시회 개최 전에 00시·도/시·군·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000 지자체 문화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000 지자체 문화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 및 평가계획
2. 제5조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대상선정
3. 문화영향평가 평가기준과 방법 등
4. 문화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5. 문화영향평가결과의 공표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문화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교육행정·문화정책 등을 담당하는 국장/과장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

가. 〇〇시·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문화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〇〇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문화영향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〇〇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문화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①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영향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속 실장·국장(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과장·담당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에서 문화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한다.

② 문화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문화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2. 문화영향평가의 실시 및 문화영향평가서의 작성
3. 문화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
4. 전문문화영향평가의 실시 및 결과반영, 제출
4. 위원회의 운영
5. 문화영향평가 교육

제12조(문화영향평가 교육) 지자체장은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〇〇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지자체장은 문화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주민참여 조성)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문화영향평가 대상정책에 대한 주민제안제도 활용, 주민참여단 구성 등으로 주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문화기본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〇〇〇〇은 제13조에 따른 〇〇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으로 본다.

(3) 평가참여 및 평가수용성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 참여를 독려하고, 평가결과의 정책 반영 및 평가수용성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 부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수기관 및 사례에 대한 언론보도 및 홍보지원, 표창 및 수상
- 문화영향평가 실적을 각종 평가제도(지역문화지표, 지역관광발전지표, 지자체합동평가, 국토부 관문심사, 문화도시 지정심사 등)의 지표에 포함
 - ※ 유사사례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경우 평가실적 및 반영 실적 등을 지자체합동평가 지표와 연계하여 지자체 참여도 제고
-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적 개선조치 이행을 위한 예산과의 연계
 - 문화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적 개선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 결과 자료를 해당 사업의 예산편성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하고, 재정당국에서 이를 예산편성에 고려할 수 있도록 예산 연계(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지침과 연계)
 - ※ 유사사례 : 고용영향평가(재정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과 연계)
-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적 개선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컨설팅 및 기타 지원사업 등)과의 연계



참고문헌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김둘순·이슬·이현아·김보미(2016).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누리집(<http://www.kei.re.kr/>)
- 김경희·김둘순·남궁윤영·이은경·김지영(2016).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제고와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둘순 외(2014).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제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나태준외 3인. (2014), 고용영향평가의 제도적 문제점과 대안:평가환경과 평가자원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135-140
- 대우에너지(2013). 포천 천연가스 발전소 1호기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서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년 문화영향평가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보고서.
- 손을춘. (2013). 고용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입법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제714호.
- 송수중, 홍준형. (2012). 고용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모형의 설계 및 적용.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2권 제3호. 262.
- 양혜원.(2017). 문화영향평가 표준평가도구 개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양혜원 외(2015), 「2015 문화영향평가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양혜원 외(2016), 「2016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여성가족부(2016).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7).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여성가족부.
- 인하대학교. (2013). 고용영향평가 강화방안 연구-고용영향평가 지침-, 고용노동부.
- 윤계형. (2012),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 -유럽연합-, 한국법제연구원, 20-24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 2017 문화영향평가 평가지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성평등 향상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가이드 개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공공정책을 변화시키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과와 과제. 「정책레시피」. V.6.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II)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성인지예산·성별영향분석평가 연계를 위한 실증적 연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공공정책을 변화시키는 성별영향분석평가 100가지 사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누리집
<http://gia.kwdi.re.kr/center/page.do?cg=centerHistory>
- 환경부(2012). 환경영향평가법·제도 설명자료
- 환경부(2016) 환경영향평가
- 환경부(2005), 환경영향평가 우수사례집
- 환경부(2013),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대기질·악취·소음·진동)」
- 환경부(2011),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가이드라인(안) - 평가항목·범위 결정 등을 위한 지침서
- ECORYS. (2009). Assessing the Employment and Social Impacts of Selected Strategic Commission Policies. DG Employment, Social Affairs and Equal Opportunities of the European Commission. 24-35 ;148-166
- ECORYS. (2010). Review of Methodologies applied for the assessment of employment and social impacts. DG Employment, Social Affairs and Equal Opportunities of the European Commission. 151-187
- European Commission. (2009a).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European Commission. 31-44
- European Commission. (2009b). Guidance for assessing Social Impacts Assessment system. European Commission. 2-6
- IA reports and IAB opinions:
http://ec.europa.eu/governance/impact/practice_en.htm
-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http://ec.europa.eu/governance/impact/docs_en.htm
- EC Better Regulation website:
http://ec.europa.eu/governance/better_regulation/index_en.htm
- Saaty, Thomas. L. (1982), Decision Making For Leader: The AHP for Decisions in a Complex World. CA: Wadsworth.



부록

1. 문화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2. 현재 문화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3단 비교표
3. 서울특별시 문화영향평가 관련 조례(안)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시기
5.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부록1] 문화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문화기본법	문화기본법 시행령
<p>제5조의 2 (문화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계획 및 사업, 법령(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문화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p> <p>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조(문화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계획 및 사업, 법령(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3.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사업 4.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 5.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5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6. 시행중 또는 제·개정 추진 중인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 7. 국정과제 8.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책 <p>②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제5조의4에 따른 중앙 또는 지역문화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p> <p>제3조(문화영향평가서의 작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문화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대상 정책이 미치는 문화적 영향 3. 문화적 가치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p>제5조의 3 (전문문화영향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법령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중앙문화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해서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문화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교육·연구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p> <p>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의 결과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p>	<p>제4조(전문문화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① 법 제5조의3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대상 정책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정도, 평가의 가능성과 평가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려면 정책명,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문화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문화영향평가 요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5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이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 2. 국회가 그 의결로 문화영향평가의 실시를 요구한 경우

의 장에게 대상 정책에 관하여 제언을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대상 정책에 관하여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개선대책을 수립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대책의 시행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의 평가범위·항목 등의 협의 조정을 위해 문화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문화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5조의3제7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협의회(이하 “문화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문화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정책 소관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2. 법 제5조의5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책임관

3. 대상 정책, 문화영향평가 등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3. 대상정책 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③ 문화영향평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대상 정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p>제5조의 4(중앙 및 지역문화영향평가위원회) ①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문화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p> <p>② 중앙문화영향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선정,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문화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문화영향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문화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중앙문화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역문화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p> <p>⑤ 지역문화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6조(중앙문화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중앙문화영향평가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재청 등에 소속된 법 제5조의5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책임관 2.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인 이내 <p>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p> <p>⑤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⑥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p>
<p>제5조의 5(문화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문화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문화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7조(문화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의5에 따라 소속 실장·국장(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과장·담당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에서 문화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2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의 실시 및 문화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2에 따른 문화영향평가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2에 따른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5. 제5조의5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문화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나 변경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5조의 6(문화영향평가를 위한 교육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를 지원하는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공립 연구기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재출연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민간 연구기관 4.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 	<p>제8조(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의5제2항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p>

[부록2] 현재 문화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3단비교표

문화기본법	문화기본법 시행령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p>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계획 또는 정책에 대해서는 문화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문화영향평가 대상 계획·정책의 선정기준, 문화영향평가의 방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한 협의를 거쳐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 	

	<p>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관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할 때 대상 계획·정책의 개요와 기대효과, 평가의 필요성 등을 포함한 평가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따라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p>	
	<p>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영향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와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2.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p>
	<p>제4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교육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를 지원하는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민간 연구기관 	
--	---	--

[부록 3] 서울특별시 문화영향평가 관련 조례(안)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개개인의 문화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누구나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에 문화적 관점을 확산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시민의 문화권이 실질적 권리로 존중되고, 시민들이 문화 창조 및 향유의 주체가 되어 문화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3. “문화영향평가”란 「문화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5. “문화예술축제”란 시, 자치구 또는 민간에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로써 시민화합 및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문화적·예술적 또는 민속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문화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하고,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한다.

제2장 시민의 문화권 보장

제6조(시민의 문화권 보호 및 확산) ① 시장은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계층, 연령, 지역, 성(性), 인종, 종교,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 참여, 창작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이 문화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 증진을 위해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다양한 문화의 공존) ① 시장은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계각층, 각 지역의 문화가 제약 없이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제8조(문화예술의 육성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등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자치구 또는 개인·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제9조(문화산업의 육성)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기술·인력·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10조(역사문화유산의 보존) 시장은 시의 역사를 형성해 온 문화유산을 보존·복원하고,

도시의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1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문화시설을 조성할 경우 지역 간 문화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문화자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시장은 도시 개발 및 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추진하고, 자생적 문화지역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제12조(문화협치 기반마련) 시장은 시의 문화발전을 위한 협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문화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시와 시민,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가 서로 협력하고 협치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제3장 문화도시 정책의 수립

제13조(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하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장은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일반 시민 및 자치구, 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치구의 각종 사업계획에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이 반영되도록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권고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정책 평가와 의견수렴) ① 시장은 문화정책, 행사에 대한 평가에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문화원탁회의,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제15조(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의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3.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 및 방법, 대상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시민제안사업 검토
 5. 문화원탁회의, 포럼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위원회는 시의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 그 밖에 문화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사전에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 의결로 심의·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20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

이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시장 및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장소·안전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자문내용 및 의결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의 협력을 위해 관련 부서 및 산하기관의 위원회 담당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개인, 공동체, 지역, 도시, 협치 분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7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 ④ 분과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기획위원회를 둔다.

제22조(관계기관의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및 여비)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문화영향평가

제25조(문화영향평가의 실시) 시장은 시민들의 문화권과 문화다양성을 보존·확산하기 위하여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문화영향평가계획의 수립) 시장은 예측가능하고 효과적인 문화영향평가를 위해 대상 계획·정책의 선정기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7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 가운데서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1.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
2.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28조(문화영향평가의 방법) 시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데 적용 가능한 방법과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문화영향평가의 위탁 등) 시장은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수행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문화영향평가 결과 환류) 문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시행부서는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의견과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재정의 지원) 시장은 문화영향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문, 교육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의 지정과 육성

제32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활동 중인 비영리법인·단체
2. 예술단·공연장·미술관·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이고 독립 재산이 가능한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법인·단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2. 재정 운영의 건전성
3.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 시설의 운영 실적
4. 공연·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5. 사회적 기여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문예술법인·단체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의 개최 시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위촉 해제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명 이내

2.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문화예술분야에 조예가 깊고 덕망있는 사람

⑤ 전문예술법인·단체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3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취소)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시장은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

3.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전시·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②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과 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과 육성) 시장은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장 지방문화원의 육성

제35조(지방문화원의 지원) ① 시장은 자치구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문화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문화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력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인건비

2. 지방문화원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

제36조(지방문화원의 기능과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개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의 발굴, 수집, 조사, 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는 해당 자치구에서 조례로 정한 사업에 한한다.

제8장 문화예술축제의 육성

제37조(문화예술축제의 육성) 시장은 시민 참여적이고 국제적인 문화예술축제의 육성·발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문화예술축제의 개최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대표 문화예술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민간 문화예술축제의 지원) 시장은 민간에서 개최하는 문화예술축제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 문화예술축제의 개최자에게 개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문화예술축제사무의 위탁 등) 시장은 문화예술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문화예술축제의 평가) ① 시장은 문화예술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축제 시책·개최 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그 공정성·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평가(제40조에 따른 문화예술축제 사무의 수탁자 또는 대행자가 한 평가를 제외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자체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정량적·정성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에 따른 등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문화예술축제의 계획수립 및 지원 시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9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제4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시장이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가 16층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층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1. 공동주택(다만, 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제10장 보칙

제4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42조에 따른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부터 제5장까지,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속기한)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준속기한은 위원회 구성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3조(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폐지) 이 조례 시행 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된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 ②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문

화도시 기본조례」 제6조”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8조”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1조제1항”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3조제1항”으로, “문화도시종합계획”을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

⑤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를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조례 제6471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칙 제5조를 삭제한다.

<부록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1. 정책계획 (삭제된 사업은 미표기)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2)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 계획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사, 그 밖의 관계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때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나. 항만의 건설	1) 「연안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2) 「연안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	「연안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연안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다. 도로의 건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때
라. 수자원의 개발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기본계획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3) 「지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할 때 「지하수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p>4) 「하수도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p> <p>5) 「하천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p> <p>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p> <p>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p> <p>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p> <p>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p>	<p>「하수도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할 때</p> <p>「하천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p> <p>「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때</p> <p>「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때</p> <p>「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때</p> <p>「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때</p>
<p>마. 관광단지의 개발</p>	<p>1)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p> <p>2)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관광개발계획</p> <p>3) 「온천법」 제3조의2에 따른 온천발전 종합계획</p> <p>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p> <p>5) 「자연환경보전법」 제14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p> <p>6) 「자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p>	<p>「관광진흥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p> <p>「관광진흥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p> <p>「온천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p> <p>「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p> <p>「자연환경보전법」 제1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할 때</p> <p>해당 계획의 확정 전</p>

바. 산지의개발	1) 「사방사업법」 제3조의2에 따른 사방사업 기본계획 2)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산촌진흥기본계획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라 수립되는 전국임도기본계획 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는 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계획의 확정 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사. 특정지역의 개발	1) 「농어촌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2)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계획의 확정 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아. 폐기물·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1)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폐기물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하는 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하기 전

2. 개발기본계획(삭제된 사업은 미표기)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도로건설공사는 고속국도건설공사로 한정한다)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이 타당성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

	<p>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p> <p>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p> <p>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p> <p>5)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대상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p> <p>6)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대상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p> <p>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p> <p>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별표 3 제1호나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p> <p>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p> <p>10)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p> <p>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사업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사업기본계획</p>	<p>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p> <p>「도시개발법」 제8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p> <p>「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p> <p>계획의 확정 전</p> <p>「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p> <p>「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p> <p>「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p> <p>「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p> <p>「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제안자에게 제안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를 통지하기 전 또는 「사회</p>
--	--	---

	<p>1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p> <p>14)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p> <p>1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p> <p>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p>	<p>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p> <p>「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p> <p>「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p> <p>「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p> <p>「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p>
나.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p>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자목(7) 단서에 따른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p> <p>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p> <p>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p> <p>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p> <p>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p> <p>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p> <p>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재생계획</p> <p>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p> <p>9)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미 개발된 산업단지 또는 개별 공장부지에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자목(7) 단서에 따라 고시하기 전</p> <p>「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기 전</p> <p>「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p> <p>「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p> <p>「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p> <p>「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p> <p>「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p> <p>「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기 전</p> <p>「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p>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된 협동화실천계획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다.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라. 항만의 건설	1)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2) 「어촌·어항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3)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른 어항의 지정 5)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7) 「항만법」 제54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어촌·어항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지정하기 전 「항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항만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마. 도로의 건설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에 따른 도로기본계획 2)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계획(별표 3 제5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도로노선을 선정하는 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및 같은 교통권역의 관계 시장이나 군수와 협의할 때
바. 수자원의 개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사. 철도의 건설	1) 「도시철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2) 「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	「도시철도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철도건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아.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공항시설법」 제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3)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때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차. 개간·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카. 관광단지의 개발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등의 지정 2) 「온천법」 제5조에 따른 온천공보호 구역의 지정 3)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4) 「자연공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의 결정 5)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6) 「자연공원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관광진흥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온천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자연공원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자연공원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연공원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타. 산지의개발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임업진흥계획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p>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계획</p> <p>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묘지등의 수급 중·장기 계획</p> <p>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p>	<p>「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p> <p>「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 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p> <p>「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p>
파. 특정지역의 개발	<p>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p> <p>2)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p> <p>3)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p> <p>4)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p> <p>5)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지정</p> <p>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p> <p>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계획</p> <p>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p> <p>9)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도서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p> <p>10) 「석탄산업법」 제39조의8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9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p>	<p>「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p> <p>계획의 확정 전</p> <p>「농어촌정비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p> <p>「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p> <p>「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p> <p>「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p> <p>「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p> <p>「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p> <p>「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제2항 또는 제7조에 따른 도서개발심의위원회 심의 전</p> <p>「석탄산업법」 제39조의8제2항 또는 제39조의9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p>

1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건설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 및 특구계획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4조에 따른 광역시설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4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2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수립(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때
2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3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31)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32)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

	<p>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p> <p>3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p>	<p>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p> <p>「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할 때</p>
하. 체육시설의 설치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거. 폐기물·분뇨·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p>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p> <p>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기본계획</p> <p>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p> <p>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p>	<p>「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하기 전</p> <p>「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때</p> <p>「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할 때</p> <p>「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또는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p>
너.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p>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p> <p>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p>	<p>「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p> <p>「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기 전</p>

〈부록 5〉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사업	<p>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제외한다)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하 2) 유통업무설비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시장(市場)으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p>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마.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p>	<p>「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전</p> <p>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전</p> <p>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의 인가 전</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p> <p>「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p> <p>「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전</p> <p>「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전</p>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p> <p>「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p>

	<p>제2조제2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자.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차.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중 처리능력이 1일 1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물」 제9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 전</p> <p>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협의 전</p> <p>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전</p> <p>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p> <p>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전</p> <p>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인가 전</p> <p>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p> <p>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p> <p>「농어촌정비법」 제5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 전</p> <p>「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p>「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사업	<p>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또는 제39조의7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p>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산업단지, 공항 및 그 배후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항만 및 그 배후지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p>「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전</p>
<p>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 마목 또는 제13호사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제3호에 따른 산업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승인 및 입주계약 등의 완료 전</p>
<p>마.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조성사업의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전</p>
<p>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만 해당한다)으로 개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기 전</p>
<p>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p>3. 에너지 개발사업</p>	<p>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저광업 개발사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p> <p>나.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으로서 채광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전시설용량이 1만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상인 것,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 발전소의 냉각수를 활용한 해양소수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 2) 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실시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3)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4)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회(灰)처리장 5)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저탄장(貯炭場) <p>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마목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상인 것,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의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3만킬로와트 이상인 것,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인 것 2) 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공사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3)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4)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회처리장 	<p>「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채취권 설정의 허가 전</p> <p>「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전</p> <p>「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p>「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p>
--------------------	--	--

	<p>리장</p> <p>5)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저탄장</p> <p>마.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킬로와트) 이상인 열발생설비의 설치사업</p> <p>바.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중 저유시설(貯油施設) 설치공사로서 저장용량이 10만킬로리터 이상인 공사</p> <p>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저유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중 저장용량이 10만 킬로리터 이상인 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p> <p>아.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중 저장시설의 용량이 10만킬로리터 이상인 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p>	<p>「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열발생설비 중 터빈·발전기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의 승인 전</p> <p>「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가 전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저장소의 설치 허가 전</p> <p>「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 허가 전</p> <p>「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4. 항만의 건설사업	<p>가.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어항 시설 건설사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p> <p>1)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p> <p>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p> <p>3) 그 밖의 어항시설(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p> <p>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p> <p>1)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p>	<p>가)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확정 전</p> <p>나)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행 허가 전</p> <p>다)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정권자와의 협의 전</p> <p>가)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고시 전</p> <p>나)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p>

	<p>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p> <p>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p> <p>3) 그 밖의 항만시설(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p> <p>다.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에서의 준설사업 중 준설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준설량이 2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과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준설은 제외한다.</p> <p>라.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p> <p>1)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p> <p>2)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p> <p>3)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p> <p>마.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재개발사업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p> <p>1)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p> <p>2)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p> <p>3)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p>	<p>(港灣公社)가 시행하는 경우: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p>다)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계획의 허가 전</p> <p>가) 「항만법」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 중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고시 전</p> <p>나) 「항만법」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 중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계획의 허가 전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전</p> <p>다)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p>「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p>「항만법」 제6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	---	--

	<p>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p> <p>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p> <p>1)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p> <p>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p> <p>3) 그 밖의 항만시설(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p>	<p>「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5. 도로의 건설사업	<p>「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p>1)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나목·바목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p> <p>2) 왕복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 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의 확장</p> <p>3) 신설과 확장을 함께 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신설구간 길이의 합/4km) + (확장구간 길이의 합/10km)</p> <p>4) 도로의 신설로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왕복 4차로는 폭 25미터 이상으로 본다) (비도시구간 길이의 합/4km) + (도시구간 길이의 합/4km)</p>	<p>가)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p> <p>나)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 시행의 허가 전</p> <p>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 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p>
6. 수자원의 개	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발사업	<p>를」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설치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하구둑의 설치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보(洑) 또는 유지(溜池: 웅덩이)의 조성</p>	<p>법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p> <p>가)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p> <p>나)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p> <p>「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전</p>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 다)의 건설사업	<p>가.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철도시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사업 중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도시철도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다.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전용궤도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궤도운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삭도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2)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삭도는 제외한다)의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3)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p>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p> <p>나) 그 밖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p>「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p> <p>「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 전</p>
8. 공항 또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본문에 따

비행장의 건설사업	<p>른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항 또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육상비행장의 신설 2)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3) 그 밖의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p>른 실시계획의 고시 전</p>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p>다음의 구역에서 하는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 중심길이로 10킬로미터 이상인 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2) 「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p>가)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p> <p>나)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의 경우: 「하천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전 <p>다) 「하천법」 제87조에 따른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전</p>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p>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매립사업 중 사업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만법」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무역항, 연안항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매립사업인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 2) 그 밖의 지역에서의 매립사업인 경우: 30만제곱미터 이상 <p>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업 중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p>	<p>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매립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전</p> <p>나) 그 밖의 자가 매립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전</p> <p>「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전</p>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p>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p>	<p>「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숙박업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p>

	<p>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다.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 중 사업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p>1) 공원시설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2) 공원시설면적 및 비공원시설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른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허가 또는 신고 전</p> <p>「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p> <p>「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p> <p>가)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19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계획의 결정 전</p> <p>나)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허가 전</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p> <p>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전</p> <p>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p>
12. 산지의 개발사업	<p>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p>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제9호에 따른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설치·조성 전</p> <p>나) 그 밖의 자가 사설묘지 및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전</p>

	<p>2)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의 조성사업 중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3) 1) 및 2) 외의 사업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임도(林道)의 설치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p>1) 노선의 총길이가 8킬로미터 이상인 사업</p> <p>2) 노선의 총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p> <p>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에 조성되는 산림복지시설별 산지전용면적의 합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전</p> <p>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임도(林道)의 설치사업은 제외한다]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p> <p>나) 그 밖의 사업인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p> <p>「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시설의 설치 전</p> <p>「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p>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p> <p>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p>	<p>「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p>「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p>「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p>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p> <p>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p> <p>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p> <p>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만 해당한다)</p> <p>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p> <p>자. 삭제 <2017. 3. 29.></p> <p>차.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p>	<p>「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전</p> <p>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시행하는 경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전</p> <p>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자가 시행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전</p> <p>「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전</p> <p>「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p>「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p>「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14. 체육 시설의 설치사업	<p>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나.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p>	<p>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전</p> <p>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p> <p>「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p>

	<p>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마.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p>	<p>허가 전</p> <p>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 전</p> <p>나)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 전</p> <p>「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p> <p>「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 허가 전</p>
15.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p>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p> <p>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p> <p>2)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p> <p>3)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p> <p>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드는 자원화시설 중 「비료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로서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방류수가 없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p> <p>1)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p>	<p>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 전</p> <p>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p> <p>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전</p> <p>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p>

	<p>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p> <p>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p>	<p>우: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인가 전</p> <p>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p> <p>「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4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 허가 전,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전, 가축분뇨의 재활용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전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 전</p> <p>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 전</p> <p>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p>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p>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사업면적이 3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같은 법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채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골프장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해군기지는 제외한다)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p>1) 비행장의 신설</p> <p>2) 길이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p> <p>3) 그 밖의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해군기지의 군사시설</p>	<p>가)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p> <p>나)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전</p>

	<p>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행장의 신설 2) 길이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3) 그 밖에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p>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군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p>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p>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 토석·암석·모래·자갈 또는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그 채취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마목 또는 사목의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2만제곱미터 이상 2)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수거리 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5만제곱미터 이상 <p>나.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거나 광물을 채굴하는 사업으로서 그 채취 또는 채굴 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2)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구 안의 산지훼손면적(「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가목에 따른 원충구역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0만제곱미터 이상 <p>다.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p> <p>라. 해안(해안선으로부터 육지쪽으로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및 바다쪽으로 10킬로미터</p>	<p>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위 허가 전</p> <p>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전</p> <p>다)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전</p> <p>라) 그 밖의 경우: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전</p> <p>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 제외한다)인 경우: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p> <p>나) 위 가) 외의 지역에서의 사업인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석채취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전 (2) 광물 채굴의 경우: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전 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전 <p>「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전</p> <p>「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p>

	<p>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광업법」 제13조에 따른 광구의 단위구역당 광물채취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태풍·폭풍·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긴급 대책상 필요하거나 항만 및 어장의 유지·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p> <p>1) 강원도 및 경상북도의 경우: 2만제곱미터 이상</p> <p>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p> <p>마.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해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로서 「광업법」 제13조에 따른 광구의 단위구역당 채취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마목 또는 사목의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협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p> <p>사. 「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p>	<p>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또는 협의·승인 전</p> <p>「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전</p> <p>「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전</p> <p>「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전</p>
--	---	---

〈부록 6〉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구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협의 요청시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p>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p>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사업</p> <p>2)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p> <p>3) 「어촌·어항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어항시설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p> <p>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p> <p>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p> <p>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p> <p>1) 보전관리지역: 5,000제곱미터</p> <p>2) 생산관리지역: 7,500제곱미터</p> <p>3) 계획관리지역: 10,000제곱미터</p> <p>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p>	<p>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 등(이하 이 표에서 "승인등"이라 한다) 전</p> <p>사업의 승인등 전</p> <p>사업의 승인등 전</p> <p>사업의 승인등 전</p>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3. 「자연환경보전법」 및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및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시·도 생	사업의 승인등 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지역	<p>태·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p> <p>1)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 5,000제곱미터</p> <p>2)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 7,500제곱미터</p> <p>3)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 10,000제곱미터</p> <p>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 및 제22조에 따른 자연유보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p>	<p>사업의 승인등 전</p> <p>사업의 승인등 전</p>
4. 「산지관리법」 적용지역	<p>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익용 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나.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익용 산지 외의 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p>	<p>사업의 승인등 전</p> <p>사업의 승인등 전</p>
5.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p>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나.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또는 공원문화유산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p>	<p>사업의 승인등 전</p> <p>사업의 승인등 전</p>
6. 「습지보전법」 적용지역	<p>가.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나.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다.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습지개선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p>	<p>사업의 승인등 전</p> <p>사업의 승인등 전</p> <p>사업의 승인등 전</p>
7.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및 「지하수법」 적용지역	<p>가.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湖沼)의 경계면(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다)으로부터 상류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팔당댐 상류의 남한강·북한강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I 권역으로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의 경우 사업계획</p>	<p>사업의 승인등 전</p>

	<p>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나.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다.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라.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소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마. 「지하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p>	<p>사업의 승인등 전</p> <p>사업의 승인등 전</p> <p>「소하천정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때</p> <p>사업의 승인등 전</p>
8. 「초지법」 적용지역	「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초지조성허가 신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9. 그 밖의 개발 사업	사업계획 면적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시·도 또는 시·군·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사업의 승인등 전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발 행 인 : 도 종 환

발 행 처 : 문화체육관광부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전화 044-203-2000

팩스 044-203-3452

[http : //www.mcst.go.kr](http://www.mcst.go.kr)

연 구 기 관 : 한국정책학회

발 행 일 : 2017년 10월

인 쇄 처 : 조명문화사
